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일반논평(1, 2호) 안내서

2021. 11.

본 보고서의 연구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으로 한국장애인개발원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연구진

연구책임 : 유경민(한국장애인개발원 연구기획팀장)

공동연구원 : 권순지(前 한국장애인개발원 연구기획팀 연구원)

손희경(한국장애인개발원 연구기획팀 연구원)

집필진

김소영 (사단법인 유엔인권정책센터 장애인권 담당)

장은석 (세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감수

김형식 (前 한반도국제대학원대학교 명예교수, 前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전문위원)

이동석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발간사

장애인의 권리를 인권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하 협약)은 인권의 역사에 중요한 지침이 되었다. 국제사회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 배제와 모든 분야에서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포괄적인 사회를 만드는 것이 국제사회의 지향점임을 모두가 공감하는 바이다.

우리나라는 2008년 협약을 비준하여 2011년 협약 최초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였다. 2014년에는 최초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심사를 받고 그에 대한 최종견해를 받아 장애인의 인권에 관한 국제사회의 기준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2019년에는 협약 제2, 3차 병합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여 정부를 비롯한 학계와 시민단체가 최초 국가보고서 제출 시점 이후 우리나라 장애인정책에 대한 변화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쟁점목록에 제시되었던, 또는 위원회에서 공표되었던 일반논평에 대한 낮은 이해도,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 소홀히 한 점에 대해 정부나 시민단체, 이해관계자 등은 다시 한 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일반논평은 조약이 보장하는 구체적 권리의 범위와 내용을 설명하는 문서로 협약에 제시된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를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는 유익한 자료이다. 협약에서 말하는 당사자 권리와 국가의 의무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차별금지에 관해 국내 상황을 점검하고 어떤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는지 생각하는데 도움을 준다. 물론 국제기구에 제출하는 정부와 시민단체 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도 참고하기에 좋은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이에, 본 보고서는 위원회에서 공표한 일반논평 7호 중 1호(법 앞에 평등한 인정)와 2호(접근성)를 중심으로 다뤘으며, 향후 일반논평 안내서를 시리즈로 발간할 예정이다. 나아가 타 협약의 관계, 국가와 시민사회의 책무, 국내외 사례 등을 포괄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써 본 보고서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2021년 11월

한국장애인개발원 원장 최 경 숙

➤ 목 차

I. 서론	1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2
1) 연구내용	2
2) 연구방법	4
II. 관련 협약 문헌 검토	5
1. 관련 협약 주요내용	5
2. 국외 사례 범위	8
III. 일반논평 1호: 법 앞의 평등한 인정(협약 12조)	10
1. 서론	10
2. 12조의 규범적 내용	19
1) 12조 1항	19
2) 12조 2항	19
3) 12조 3항	22
4) 12조 4항	25
5) 12조 5항	26
3. 당사국의 의무	28
4. 협약 내 여타 규정과의 관계	34
1) 5조: 평등 및 반차별	34
2) 6조: 장애 여성	36
3) 7조: 장애 아동	37
4) 9조: 접근성	37
5) 13조: 사법에 대한 접근	38



6) 14조, 25조: 자유, 안전, 동의	39
7) 15조, 16조, 17조: 개인의 고유성의 존중 및 고문·폭력·착취·학대로 부터의 자유	40
8) 18조: 국적	41
9) 19조: 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 완전통합	42
10) 22조: 사생활	43
11) 29조: 정치적 참여	43
5. 국가 수준에서의 이행	44

IV. 일반논평 2호: 접근성(협약 9조) 48

1. 서론	48
2. 규범적 내용	61
3. 당사국의 의무	76
4. 협약 내 여타 조항과의 관계	82

▶ 표목차

〈표 I-2-1〉 일반논평 안내서 구성	3
〈표 II-1-1〉 관련 협약 주요내용 등	5
〈표 II-2-1〉 국외 사례 관련 해외 국가 선정 기준	8



▶ 그림목차

[그림 I-2-1] 연구 추진절차	4
--------------------------	---

I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장애인 인권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이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2006년 12월 13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 2007년 우리나라 복지부장관 협약 서명 이후 2008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09년 국내 발효되었다. 2008년 협약 비준 이후 2011년(최초)과 2019년(2,3차 병합)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2014년 한 차례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았다. 이에,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에 따라 협약 이행여부에 대하여 2, 3차 병합 국가보고서에 담고 있다. 2020년 2, 3차 병합 국가보고서에 대한 심의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19로 인해 잠정 연기되었다가 2022년 8월 중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을 비롯한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해서는 그 책무를 지닌 이들의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이해증진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장애인 관련 이슈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비해 장애인 인권에 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인권보장 계획 수립 등 장애인 권리에 대해 파악하고자 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있었다. 따라서 장애인 인권의 저변확대를 위한 적절한 정보제공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유엔의 국제인권법 이행을 모니터링하는 조약기구는 “일반논평(General Comments)”의 형태로 해당 조약의 조항에 대한 포괄적 해석이나 당사국 정부가 보고서를 제출할 때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지침 등을 공포한다. 이에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일반논평 안내서’는 상기 정보제공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하며, 일반논평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해당 인권조약에 대한 이해와 충실한 이행을 위해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문서이다.¹⁾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채택한 일반논평 역시 특정 조항에 대한 이해와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장애인 권리와 관련된 특정 주제에 대한 의무이행자의 협약이행을

1) 국제아동인권센터(2017). 일반논평 12호 아동의 의견이 청취되어야 할 권리.



안내하는 목적으로 구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관련된 일반논평은 총 7호까지 공표되었으며,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채택한 일반논평 1호²⁾와 2호³⁾에 대해 우선적으로 살펴보았다.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해서 그 책무를 지닌 사람들을 대상으로 포괄적 내용의 일반논평에 대한 사례를 추가하여 그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 협약 이행 사항을 안내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1) 연구내용

(1) 일반논평 1호, 2호 단락별 국내외 사례 제시

협약은 상당히 일반적인 문장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국가마다 서로 다른 국내 상황에 견주어 조약을 해석하고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 이에, 조약의 해석과 관련하여 조약 감시기구들이 제공하는 일반 논평은 해당 조항을 이행하는데 있어 당사국의 구체적 의무 및 역할에 대한 공통된 이해를 높이고, 당사국에게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해당 일반논평의 주제와 관련하여 이해를 증진하고 실천을 촉진할 수 있는 국내외 사례를 제시하고, 협약 조항의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14년 첫 번째 일반논평인 법 앞에 평등한 인정(Equal recognition before the law) 및 접근성(Accessibility)을 시작으로 2018년 현재 총 7개의 일반논평을 채택하였다. 이 중 장애인권리위원회 일반논평 1, 2호에 따라 단락별 국내외 사례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일반논평은 국가인권위원회(2021)에서 발간된 유엔 인권조약기구 일반논평 및 일반권고 자료집에서 장애인권리협약 일반논평 번역본을 활용하였다. 그러나 감수위원의 의견에 따라 활용된 번역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제시하였다. 일반논평 번역본에는 ‘동등한’과 ‘평등한’이 교차적으로 사용되는데 ‘평등한’으로 전체 수정하여 유엔장애인 권리협약의 본래 정신을 살리도록 하였다. 또한 ‘비차별’

2) 일반논평 1호(2014) 협약 12조: 법 앞에서의 평등한 인정

3) 일반논평 2호(2014) 협약 9조: 접근성

이라는 용어를 ‘반차별’로 수정하였으며, ‘포용’이라는 용어를 ‘통합’으로 수정하였다. 협약, 조약, 규약 등이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므로, 협약이라는 용어의 수정을 지적하였으나, 이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적인 자료를 인용하였기에, 해당 용어의 수정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이번 안내서에서는 제시하지 않았다.

- ① 일반논평 1호(2014.4.11. 채택): 협약 제12조 법 앞에 평등한 인정(Equal recognition before the law)
- 법 앞에 평등할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여 있으며, 법적능력과 정신적 능력에 관한 용어 설명과 함께, 장애인의 법적 권리 실현을 위해 당사국이 지원해야 할 사항, 역할, 협약의 기타 조항 권리등과의 연계성 등에 대해 기술하고 있음

- ② 일반논평 2호(2014.4.11. 채택): 협약 제9조 접근성(Accessibility)
- 접근성에 대한 중요성과 접근성을 위한 당사국의 역할 및 의무, 협약 제9조와 협약의 기타 권리들과의 연계성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2) 일반논평 안내서 구성

일반논평별 안내서 구성은 기존 구성인 “1) 서론 2) 규범적 내용 3) 당사국 의무 4) 협약의 다른 조항과 관계 5) 국가적 차원의 이행”을 따르되 단락별 관련 내용을 제시하였다. 다음과 같이 전문영역별 분야를 지정하여 해당 분야의 영역에 대한 이해도 및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표기하였다.

〈표 I-2-1〉 일반논평 안내서 구성

전문영역 (표기 구분)	주요내용
관련 협약 등	일반논평 내 제시된 타 국제 협약(규약, 규칙), 일반논평, 지침 등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해당 부분을 추가
민간	국내외 국가별 민간보고서 내용 및 선진 사례 추가 (캐나다, 호주,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덴마크, 이탈리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에스토니아, 독일, 그리스, 오스트리아, 벨기에)
법률	국내외 국가별 판례 또는 법적 판단을 요하는 내용(예, 지원의사결정과 대리사결정, 법적 권한, 법적 능력), 타 규정과의 관계 등, 해당 법률 추가
학계	국내외 일반적인 장애인 정책 패러다임 또는 현행 이슈 등 추가(논문 등)
기사	일반논평에 제시된 내용에 대한 기사, 보도자료 등 제시
정부	정부 공표 자료 및 입장 등 제시



일반논평 단락별 전문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 내용의 핵심사항을 헤드라인으로 제시하였으며, 전문영역에 따라 출처(입장) 제시, 일반논평에 맞춰 주요 내용 제시, 활용한 자료의 출처를 하단에 표기하였으며, 구체적인 형식은 다음과 같다.

(설명 내용의 핵심사항 헤드라인 제시)

전문영역 표기 일반논평에 내용에 맞춰 해당 단락 하단에 주요 내용 기재

* 출처: 활용한 자료의 출처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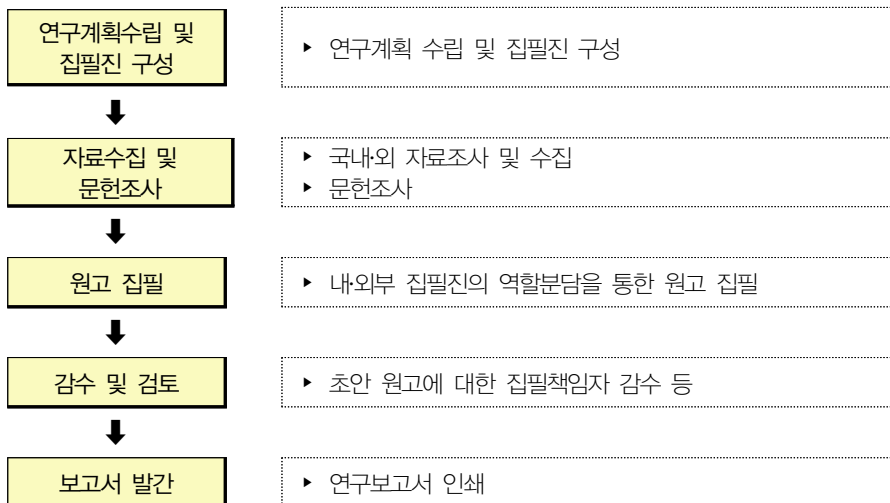
2) 연구방법

(1) 문헌조사

국내외 (장애인) 인권관련 국가별 판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민간보고서 검토 및 사례 분석을 하며,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1차, 2·3차 병합) 및 최종견해 또한 살펴보았다.

본 보고서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하여 공동 집필하였으며, 최종보고서 내용의 명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에게 감수를 받았다.

(2) 추진절차



[그림 I-2-1] 연구 추진절차

II 관련 협약 문헌 검토

1. 관련 협약 주요내용

일반논평에 대한 설명 자료는 아동권리협약, 사회권규약, 자유권규약 등 일부 호에 대하여 제시된 바 있다. 하지만, 이슈에 대한 일반논평의 해설 또는 논문으로 독자의 이해를 돕는데 한계가 있기에 그간 상기 협약의 일반논평 관련 주요내용 등을 살펴보았으며, 특히 본 연구는 아동권리협약 일반논평 5호와 12호의 안내서에 착안하여 구성하였다.

〈표 II-1-1〉 관련 협약 주요내용 등

관련협약	연구명(발행년도)	주요내용	출처
아동권리 협약	육아지원기관에서의 아동 권리 실태와 증진방안 연 구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지원기관에서의 영유아 권리 증진방안 모색 - 일반논평에서의 영유아 권리에 대한 일반논평 5호, 6호, 7호, 11호, 13호, 14호, 15호 등의 해석 제시 	육아정책연구소
	영유아기 권리에 대한 유 엔의 권고 분석: 유엔아동 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을 중심으로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 권리에 대한 일반논평 7호 논의 	황옥경 아동과권리.16(1) /한국아동권리학회
	아동참여권 실현을 위한 노 력: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 반논평을 기반으로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권리협약 제12조의 의미 및 적용방안 - 관련 일반논평의 해석 및 아동권리소스로지킴이 사업에 대한 적용 	정병수 아동복지전문연구 지 동광.111 /초록우산어린이 재단
	일반논평 12호 아동의 의 견이 청취되어야 할 권리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논평 12호에 대한 설명 및 사례 	국제아동인권센터
	일반논평 5호 아동권리협 약 이행을 위한 일반 조치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논평 5호에 대한 설명 및 사례 	국제아동인권센터
아동권리 협약/ 이주노동 자권리 협약	이주아동구급에 관한 조약 기구의 공동일반논평 (2018.5.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권리협약 일반논평 22호&이주노동자권리협약 3호, 아동권리협약 일반논평 23호&이주노동자권리협약 4호 내용 중 '이주아동 구급' 관련 내용 소개 및 해석 제시 	김종철 (공익법센터 어필) https://apil.or.kr/?p=11245



관련협약	연구명(발행년도)	주요내용	출처
사회권 규약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의 사법심사가능성 (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권 규약의 국제적 이행 확보를 위한 사법심사가능성 개념 정립 및 사법심사가능성 판단을 위한 국내 판례 분석 - 사회권규약 일반논평3호에 대한 해석 제시 	최지현, 고려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노인인권보호에 관한 국제 법적 논의 유엔규약인권위원회의 일반논평을 중심으로 (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권리에 관한 유엔의 활동 및 노인보호와 가장 관련이 깊은 사회권규약 및 일반논평을 분석 - 노인의 권리와 관련된 협약 관련 일반논평 6호, 18호, 19호, 12호, 13호 등에 대한 해석 제시 	강병근 / 서울국제법연구.15(2)/서울국제법연구원
	일반논평20: 차별금지(제2조 제2항) (2011.11.27.)	- 사회권규약 일반논평 20호 해석 제시	국제인권소식 '통' http://www.tongcenter.org/escr/gc20
	국제개발협력으로서 사회권: 사회권 규약 제2조 상 '국제지원과 국제협력조항'을 중심으로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권 규약 제2조 1항을 중심으로 당사국에서 역외 의무가 발생하는 사안을 연구 - 관련 사회권 규약 일반 논평 제3호, 제 19호, 제12호 등에 대한 해석 제시 	오시진 안암법학.49/안암법학회
	[인권문헌읽기] 유엔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12: 적절한 식량에 대한 권리 (2016.12.7.)	- 사회권규약 11조의 '식량권'에 대한 해석지침으로서 일반논평 12호의 해석 제시	류은숙(인권오름) http://hr-oreum.net/article.php?id=347
	과학에 관한 인권 - 유엔사회권이사회 일반논평 25호 (2020.4.25.)	- 사회권규약 제 15조의 '과학권'에 대한 해석지침으로서 일반논평 25호의 해석 제시	지식연구소 공방 http://ko.knowledgcommune.net/?p=2771#easy-footnote-bottom-1-2771
자유권 규약	제7조 고문 등의 금지 (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권규약 제7조 내용을 중심으로 고문방지협약의 내용 및 인권이사회와 고문방지위원회의 개인통보사건에서 나타난 고문 금지 내용 검토 - 관련 일반논평을 통해 협약의 해석 및 사례제시, 관련 타 협약 제시 	임진원 공익과 인권.3(2)/서울

관련협약	연구명(발행년도)	주요내용	출처
	일반논평34: 제19조 의견과 표현의 자유 (2011.11.24.)	- 자유권규약 일반논평 34호 해석 제시	국제인권소식 '통' http://www.tongcenter.org/ccpr/cp11-1
	국제인권시스템 현황에 관한 연구 (2013)	- 국제인권시스템의 전반적 분석 및 국가별 인권상황 등 분석 - 자유권 규약 관련 일반논평에 대한 간략한 해석 및 사례 제시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규약상의 사생활 보호의 권리에 대한 고찰 -UN자유권조약 개인통보문을 중심으로- (2013)	- UN인권위원회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자유권규약 제17조의 권리의 보호 범위와 한계 분석 및 사생활의 구체적 정의 - 관련 일반논평 16호의 해석 및 사례 제시	조희경 홍익법학.14(3)/ 홍익대학교 법학 연구소
	일반논평: 제9조 신체의 자유(유엔자유권위원회의 자유권 규약 제9조에 대한 일반논평 제35호) (2014.11.24.)	- 자유권규약 9조 '신체의 자유와 안전의 권리'에 대한 일반논평 35호 해석 제시	김종철 (공익법센터 어필) https://apil.or.kr/?p=2846
인종차별 철폐협약	'혐오표현' 해설 (2015)	- 국제인권단체 아티클19의 혐오표현 대응 툴킷으로 혐오표현을 유형별로 나눠 각각의 대응 방안을 제안 - 관련 인종차별철폐협약 일반논평 35호에 대한 간략한 해석 제시	서울대 인권센터
장애인 권리협약	UN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 이행방안 연구 (2016)	- 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이행 관련 최종견해 분석 및 향후 이행방안 제시 - 일반논평 1호, 2호에 대한 해석 제시	정한울 전북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접근권과 반차별권 (2018)	- 장애인권리협약 일반논평 제2호, 제6호를 통해 접근권의 개념과 반차별권과의 관계 고찰 - 일반논평 2호에 대한 해석 제시	서정희, 심재진, 오욱찬 국제사회보장리뷰.5 /한국보건사회연구 원



2. 국외 사례 범위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일반논평 안내서 구성에 따라 국외 관련사례 추가를 위해 해외 국가 선정은 다음과 같이 하였다.

첫째, OECD 가입국 및 UNCRPD 및 선택의정서 비준(승인)국 중 국가보고서 제출국을 우선순위로 두었다.

둘째, 선진국 분류 대표기관(국제연합개발계획(UNDP):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HDI)¹⁾, 국제통화기금(IMF)²⁾,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World Bank) 기준³⁾)에 따라 선정하였다.

셋째, 첫 번째와 두 번째 선정범위를 크로스 체크하여 최종적으로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으로 총 19국을 선정하였다. 이는 일반논평에 해당되는 사례를 제시할 수 있는 국가를 선정하였으나, 집필진의 전문영역에 따라 상기 국가 이외의 해외 사례가 제시될 수 있음을 알린다.

〈표 II-2-1〉 국외 사례 관련 해외 국가 선정 기준

연번	국가	선진국 분류	OECD 가입	UNCRPD 비준	선택의정서 비준	국가보고서 제출 현황 (제출년도)
1	호주	○	○	○	Accession	1차(2010)
2	오스트리아	○	○	○	○	2,3차(2019)
3	벨기에	○	○	○	○	1차(2011)
4	캐나다	○	○	○	Accession	1차(2014)
5	칠레	—	○	○	○	1차(2012)
6	콜롬비아	—	○	○	×	1차(2013)
7	체코	○	○	○	Signature only	1차(2011)
8	덴마크	○	○	○	Accession	1차(2011)
9	에스토니아	○	○	○	Accession	1차(2015)

1) 2020년 인간개발지수 보고서 기준(<http://hdr.undp.org/sites/default/files/hdr2020.pdf>)

2) IMF 기준 선진국가: <https://www.imf.org/en/Publications/WEO/weo-database/2020/October/select-countries?grp=110 &sg=All-countries/Advanced-economies>(접속일 2021. 3.)

3) World Bank list of economies (June 2020)

연번	국가	선진국 분류	OECD 가입	UNCRPD 비준	선택의정서 비준	국가보고서 제출 현황 (제출년도)
10	핀란드	○	○	○	○	1차(2019)
11	프랑스	○	○	○	○	1차(2016)
12	독일	○	○	○	○	1차(2011)
13	그리스	○	○	○	○	1차(2015)
14	헝가리	—	○	○	○	1차(2010)
15	아이슬란드	○	○	○	Signature only	—
16	아일랜드	○	○	○	×	—
17	이스라엘	○	○	○	×	1차(2017)
18	이탈리아	○	○	○	○	1차(2013)
19	일본	○	○	○	×	1차(2016)
20	한국	○	○	○	×	2,3차(2019)
21	라트비아	○	○	○	○	1차(2014)
22	리투아니아	○	○	○	○	1차(2012)
23	룩셈부르크	○	○	○	○	1차(2014)
24	멕시코	—	○	○	○	2,3차(2018)
25	네덜란드	○	○	○	×	1차(2018)
26	뉴질랜드	○	○	○	Accession	1차(2012)
27	노르웨이	○	○	○	×	1차(2015)
28	폴란드	○	○	○	×	1차(2014)
29	포르투갈	○	○	○	○	1차(2012)
30	슬로바키아	○	○	○	○	1차(2012)
31	슬로베니아	○	○	○	○	1차(2014)
32	스페인	○	○	○	○	1차(2010)
33	스웨덴	○	○	○	○	2,3차(2019)
34	스위스	○	○	Accession	×	1차(2016)
35	터키	○	○	○	○	1차(2015)
36	영국	○	○	○	○	1차(2011)
37	미국	○	○	Signature only	×	—



III

일반논평 1호: 법 앞의 평등한 인정(협약 12조)

장애인권리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제11차 회기: 2014.3.31.~2014.4.11. (배포: 2014.5.19.)

- ▶ 일반논평 제1호는 법 앞에 평등할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 있으며, 법적능력(Legal capacity)과 정신적 능력(Mental capacity)에 관한 용어 설명과 함께, 장애인의 법적 권리 실현을 위해 당사국이 지원해야 할 사항, 역할, 협약의 기타 조항 권리들과의 연계성 등에 대해 기술하고 있음

1. 서론

법 앞의 평등은 인권 보호의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원칙이며 다른 인권의 실현에도 필수적이다.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은 이미 구체적으로 법 앞의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다. 장애인권리협약 12조는 더 나아가 민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장애인의 권리가 부정되어 온 영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2조가 장애인의 권리를 추가로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본 조항은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장애인이 가지는 법 앞의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해 당사국이 고려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요소들을 설명하고 있다.

관련 협약 등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전 세계 모든 사람의 자유와 평등의 권리를 보호하는 대표적 지침으로서, 인종 차별, 신체의 자유, 법 앞의 평등, 표현 및 이동의 자유 등 인간이 가진 보편적 권리를 천명하고 있음

* 출처: 국가인권위원회(<https://www.humanrights.go.kr>)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자유권규약(한국에서는 B규약으로도 불림)이라고도 하며, 6부 53개의 조문으로 구성. 자결권, 차별금지, 생명권, 신체의 자유, 안전의 권리 등 자유의 보편적 권리의 명시 및 조약의 비준, 발효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법 앞의 평등한 법적 권한

민간 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 ‘Equal recognition before the law’에 대해 외교통상부는 “법 앞의 평등한 인정”으로 번역하였으나 “법 앞의 평등한 법적 권한 인정”이 타당할 것임. 법적 권한은 당사자로서의 법적 적격성과 법률 대리인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됨. 법적 적격성은 장애인 당사자가 소유하고 있는 실질적인 권리로서 그 개인의 법적 성격으로서 인정됨. 반면에, 법률 대리인은 실질적인 권리를 충실히 적용하고자 하여 그러한 행동이 법에서 존중되도록 함. 법적 권한에서 이 두 가지 요소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법 앞에서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수적임. 권리협약위원회에 의하면 정신 능력(mental capacity)은 ‘객관적’인 것이거나, 과학적 또는 자연적 현상이 아닌데 그 이유는 정신역량의 표출은 정치적 혹은 사회적 맥락에 달려있기 때문임

* 출처: 한국장애인개발원 (2019). 국제장애인 권리 및 입법의 발달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심층적 논의와 분석.

본 조항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장애인권리위원회는 법적 능력에 관한 논의를 위한 쌍방향 포럼을 여러 번 개최하였다. 전문가, 당사국, 장애인단체, 비정부기구, 조약모니터링기구, 국가인권기관, 유엔기관이 참여하여 12조와 관련해 논의한 결과, 본 위원회는 일반논평을 통한 추가 지침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본 위원회는 지금까지 검토된, 여러 당사국의 최초 보고서에 근거하여, 협약 12조에 따라 당사국이 가지는 의무의 정확한 범위에 대하여 보편적인 오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실제로 인권 기반 장애 모델은 기존의 대리 의사결정 패러다임에서 **지원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한 패러다임으로의 변화**를 의미한다는 점을 전반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오류가 발생하고 있었다. 본 일반논평은 **12조의 다양한 구성 요소**로부터 찾을 수 있는 일반적 의무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협약 제12조에 대한 완전한 이해와 인정 부족

민간 몇몇 국가는 협약을 비준하였음에도 제12조의 유보 또는 해석적 선언을 통해 제12조를 완전히 이해하고 이행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음. 다음은 캐나다 장애인단체가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임. 캐나다는 제12조를 유보한 상황임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해야 함을 천명하고 있음. 하지만 때로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 장애인은 차별에 직면함

- 캐나다 정부는 제12조 유보를 철회하지 않음. 이는 캐나다 정부가 CRPD에는 동의하였지만, 법적 제도를 구축하고 조항을 완전히 이행하려는 의지는 없다는 것을 의미함
- 캐나다의 장애인, 특히 지적, 심리사회적, 의사소통 장애인은 스스로 결정을 내릴 때 많은 차별에 직면함



- 캐나다에는 50,000명이 넘는 장애인이 법 앞에 평등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이들은 법적 능력을 박탈하였으며, 제3자가 그들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그들을 대신하여 결정을 내릴 수 있음
- 캐나다 정부는 장애 여부,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법적 능력을 동일하게 인정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호주 장애인단체는 호주정부가 CRPD를 완전히 비준하지 않았으며, 특히 제12조에 대한 해석적 선언으로 CRPD를 이행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음을 보고하였음

13(b) 장애인의 법적 능력 인정과 관련한 모든 행위자를 위한 국가, 주, 및 준주 수준에 걸친 포괄적인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 후견인, 유산 관리 및 정신건강 등에 관련한 많은 호주의 법과 정책, 관행들은 장애인을 법 앞에 평등한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음. 호주 정부는 CRPD 의무를 위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과 정책 틀이 제12조를 준수한다고 주장하기 위해 계속해서 '해석적 선언(Interpretive Declaration)'에 의존하고 있음

한편 해석적 선언이란 '다자조약을 체결할 때 특정 조항의 의미에 대해 나라별로 서로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고안'된 것으로, '특정 조항에 대해 해석의 가능성이 열려있으며 해석이 다양한 경우 선언을 통해 각국은 그 특정 조항에 대해 자신의 해석에 대한 견해를 피력하는 것'임

* 출처: Canada Community Organizations and Organizat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2019), Submission of Canadian Civil Society Organizations to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UN 조약기구 DB (<https://www.ohchr.org/EN/HRBodies/CRPD/Pages/CRPDIndex.aspx>). Australian Disabled people's Organisations(2019). Disability Rights Now 2019. UN 조약기구 DB (<https://www.ohchr.org/EN/HRBodies/CRPD/Pages/CRPDIndex.aspx>). 최지영·홍기훈·신창훈(2012). 런던의정서 가입 시 중국이 제출한 통지(선언)에 대한 검토. 대한환경공학회지 34(2).

지원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한 패러다임으로의 변화

학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장애인권리협약을 가입 비준하고 있는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가 종래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보호를 위하여 법적 능력을 제한하고 후견인등 제3자에게 법정대리권과 같은 형태로 의사결정을 대신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고 있는 성년후견제도를 두고 있고, 그 나라들 모두가 이를 의사결정지원제도로 전환할 것을 요청받고 있음. 그리고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보편적 권리로서 모든 장애인에게 법적 능력을 인정하고 그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지원의 메커니즘이 일반 사법체계적의 일부로 제도화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대적 사법체계에서 의사결정지원이라는 개념은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서 최근까지도 협약에서 요청하고 있는 의사결정지원 개념을 적어도 일반사법체계상 실정법적 제도로 실현한 나라는 존재하지 않았음. 그런데 최근 비로소 남미의 페루에서 협약의 취지에 합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입법개혁이 실현되었음.

페루의 개정 민법 및 민사소송법은 법적 능력의 향유를 전면적으로 인정하고, 장애를 이유로 하는 대체의사결정을 제도적으로 종식시켰다는 점에서 국제 장애인권계에서 세계 최초로

협약에 부합하는 제도모델로 평가받고 있음. 페루의 개정법은 장애에 근거한 어떤 법적 능력의 제한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협약 제12조가 요구하는 장애인의 법적 능력을 비장애인과의 평등한 기초위에서 인정하고 있음. 다른 한편으로는 페루 민법은 언제나 본인의 의사와 선호에 부합하게 법적 능력의 행사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기에 적절한 수단을 규정하고 있음. 페루의 새로운 규정은 장애인의 인권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의 가이드라인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물론 본인이 그의 의사를 전달할 수 없고 그의 선호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지원자의 관여에 반대하는 지시를 표시하는 본인과의 의사소통의 결여로 인하여 지원자가 선임될 수도 있음. 그러나 개정 페루민법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는 결코 지원이 제공되지 않음. 이러한 경우에 지원은 대리의 기능을 갖게 됨. 달리 말하면 지원자는 지원받는 사람을 위하여 결정을 할 수 있음. 그러나 개정 페루 민법은 그러한 결정을 하는 데에 타당한 기준으로 본인의 의사와 선호에 관한 '최선의 해석(best interpretation)'을 제시하고 있음. 이러한 해석은 개인의 라이프스토리, 그의 선호, 비슷한 맥락에서의 과거의 의사표시, 본인이 신뢰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보 기타 그 구체적 사안에 있어서 적합한 다른 고려사항을 숙고하여 해석되어야 함

* 출처: 박인환 (2019). 장애인권리협약과 의사결정지원 제도화를 위한 국제적 모색. 법학연구, 22(2): 25-64

본 일반논평은 협약의 3조에서 천명하고 있는 일반 원칙에 기반 하여 12조를 해석한다. 3조에 기술된 일반 원칙은 천부적인 존엄성과 선택의 자유를 포함한 개인의 자율성과 자립의 존중, 반차별,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와 통합, 인간의 다양성과 속성의 일부로서 장애인의 차이에 대한 존중과 수용, 균등한 기회, 접근성, 남녀의 평등, 장애 아동의 발달 역량에 대한 존중 및 그 정체성의 보존을 위한 권리의 존중이다.

세계인권선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장애인권리협약은 법 앞에서 평등하게 인정받을 권리가 '모든 곳'에서 효력을 가진다고 각각 명시하고 있다. 즉, 국제인권법 아래 그 어떤 경우에서도 사람이 법 앞에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거나 그 권리를 제한당하는 상황은 허용되지 않는다. 심지어 공공 비상 상황에서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4조 2항에 따라 이 권리의 훼손은 허용되지 않는다. 장애인권리협약에서는 법 앞에서 평등하게 인정받을 권리의 훼손에 관해서 이와 평등한 금지 조항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협약 4조 4항에서 장애인권리협약의 조항이 기존 국제법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권리는 국제규약 조항으로 보호되는 것이다.



관련 협약 등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4조 2항

공공의 비상사태의 경우에는 사태의 긴급성에 의하여 규약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나, 생명권, 고문 등 비인도적 행위, 구금, 형벌, 종교 및 신념의 자유 등에 대한 위반은 허용하지 않음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법 앞의 평등권은 다른 국제 및 역내 인권조약에도 반영되어 있다. **여성차별철폐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15조**는 법 앞에서의 여성의 평등을 보장하며, 계약의 체결, 재산의 관리, 사법 체계 내 권리의 행사 등과 관련하여 여성의 법적 능력을 남성과 동등하게 인정할 것을 요구한다. **아프리카인권헌장**(African Charter on Human and Peoples' Rights) **3조**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법 앞에 평등할 권리와 평등한 법적 보호를 누릴 권리를 규정한다. **미주인권협약**(American Convention on Human Rights)은 법인격의 권리 및 모든 사람이 법 앞에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관련 협약 등

여성차별철폐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양성평등 및 여성에 대한 차별 철폐를 위한 선언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의 정의, 시민적·정치적·사회적·경제적·문화적·법적 권리와 가정 및 혼인생활에서의 평등한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을 명시하고 있음

* 출처: 국가인권위원회(<https://www.humanrights.go.kr>)

여성차별철폐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제15조**

당사국은 여성에 대하여 법 앞에서의 남성과의 평등을 부여하여야 하며, 민사문제, 계약체결 등 법원과 법정의 절차상 모든 단계에서 여성을 동등하게 취급하여야 함

* 출처: 국가인권위원회(<https://www.humanrights.go.kr>)

아프리카인권헌장(African Charter on Human and Peoples' Rights)

아프리카 지역의 인권증진 및 보호와 이를 위한 당사국의 의무를 규정한 헌장으로 개인의 권리와 자유 및 의무, 그리고 아프리카위원회의 운영 및 규정에 대해 명시하고 있음

* 출처: University of Minnesota. Human Rights Library. (<http://hrlibrary.umn.edu/instreet/K-z1afchar.html>)

아프리카인권헌장(African Charter on Human and Peoples' Rights) 제3조

모든 개인은 법 앞에서 평등하며,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음

* 출처: University of Moinnesota. Human Rights Library. (<http://hrlibrary.umn.edu/instreet/K-z1afchar.html>)

미주인권협약(Americ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미주 25개국이 체결한 협약으로 산호세협정이라고도 함. 인권, 자유권, 생명권 등 자유·평등에 관한 권리와 미주인권위원회 및 미주인권재판소의 구성, 권한, 절차, 규정 등에 대해 명시하고 있음

* 출처: University of Moinnesota. Human Rights Library. (<http://hrlibrary.umn.edu/instreet/K-z1afchar.html>)

당사국은 반드시 법의 모든 영역을 전체적으로 살펴 법적 능력에 대한 장애인의 권리가 타인과 동등하지 않은 기반에서 제한되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역사적으로 장애인은 후견인 제도, 대리보호자 제도, **강제 치료를 허용하는 정신보건법** 등과 같은 **대리 의사결정 제도**하에 여러 영역에서 차별적으로 법적 능력을 부정당해 왔다. 장애인의 완전한 법적 능력을 다른 사람과 평등한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관행은 반드시 철폐되어야 한다.

정신장애인 법적능력 박탈을 통해 강제치료를 허용하는 호주 정신보건법

민간 호주의 정신보건법은 장애인을 법 앞의 평등한 존재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 특히 의료시설에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법적능력 박탈과 이를 이용한 강제치료, 강제 입원 등이 자행되고 있음을 피해 당사자들이 민간보고서를 통해 보고하였음

호주의 장애인들은 주/준주 '정신보건법'에 따라 정신과 의사에 의해 법적 능력을 박탈당하고 있으며, 자신에게 가해지는 폭력에 맞서 싸울 방법이 전혀 지원되지 않고 있음. 주/준주의 법은 '정신보건법'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권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음. 예를 들면 빅토리아주는 작년에 13,000건의 강제 명령을 선고하였으며 700명은 전기 충격 치료의 대상이 됨. 이들 중 누구도 법 앞에 평등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음. 그들은

- 장애를 근거로 임의 구금되었음
- 10% 미만만이 법적 대리인을 이용할 수 있었음
- 강제 약물 투여 및 치료를 받음
- 치료에 동의 할 것을 강요받음

* 출처: Victims of Psychiatrists submission(2019). AUSTRALIAN ALTERNATIVE REPORT. UN 조약기구 DB (<https://www.ohchr.org/EN/HRBodies/CRPD/Pages/CRPDIndex.aspx>).



대리 의사결정 제도(의사결정대행제도)

학계 대리 의사결정 제도(의사결정대행제도)란 의사결정에 관해 장애인의 법적 능력(legal capacity)을 박탈하거나, 장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의사결정대행자를 선임하며, 특히 그가 원치 않는데도 의사결정대행자가 선임될 수 있거나, 장애인의 욕구나 선호도에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관점에서 본 최선의 이익에 따라 의사결정을 대행하는 제도 일반을 의미함. 이런 제도는 많은 나라에서 유지하는 후견제도에 상당부분 또는 일부 포함되어 있음. 본인의 욕구나 선호도가 아니라 최선의 이익을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대리하는 것이 문제인 이유는 장애인에게 응당 보장되어야 할 위험 인수의 기회를 박탈하기 때문임. 그렇지만 이와는 다른 '지원 의사결정 제도'가 장애인의 욕구와 선호도에 부합한다고 하여 과도한 위험, 과도한 부당한 영향력을 방지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님

* 출처: 제철웅 (2014). 민사소송에서의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법적 지원: 소송무능력자제도의 개정제안. 법학논총, 31(3), 115-147.

본 협약 12조는 모든 장애인이 완전한 법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단언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여성(특히 결혼 후)과 소수 인종을 포함한 여러 집단은 불공평하게 **법적 능력**을 부정당해 왔다. 그러나 전 세계의 법적 체계에서 아직까지도 가장 흔하게 법적 능력을 부정당하고 있는 집단은 장애인이다. 법 앞에서 평등하게 인정받을 권리는 모든 사람이 인간의 속성으로써 내재하고 있는 보편적 속성이며, 장애인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인정되어야만 한다. 법적 능력은 시민적·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행사에 있어서도 필수적이고, 장애인이 자신의 건강·교육·직업과 관련하여 기본적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특히 중요성을 가진다. 장애인의 법적 능력에 대한 부정은 많은 경우 투표권, 결혼하고 가정을 꾸릴 권리, 재생산권, 친권, 친밀한 관계 및 의학적 치료에 동의할 수 있는 권리, 자유권을 포함한 많은 **기본권의 박탈**로 이어져 왔다.

법적 능력 상실과 함께 박탈되는 권리들

민간 장애인과 그들을 대표하는 단체는 장애인이 법적 능력을 상실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매우 기본적인 권리들을 박탈당한다고 보고하였음. 다음은 호주의 당사자 단체가 보고한 내용임

- 호주의 장애인들은 주/준주 정신보건법에 따라 정신과의사에 의해 법적 능력을 박탈당하고 있으며, 또한 다음의 법적 능력도 거부됨
- 투표할 권리
 -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자유롭게 운동할 권리

- 방문자와 면담하거나, 종이, 펜 등을 사용할 권리
- 의료적 치료나 과학 실험의 대상이 되는 것을 거부할 권리
- 장애를 기반으로 정의(defined)되거나 구금되지 않을 권리

룩셈부르크 민간단체도 법적능력 상실로 인해 자동적으로 박탈당하게 되는 권리를 다음과 같이 나열하였음

여전히 수천 명의 장애인(그리고 비장애인)이 후견제도 혹은 한정후견제도 하에 있으며 매년 수백 명이 추가되고 있음. 불행히도 사법부로부터 후견제도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나 통계를 얻는 것은 불가능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룩셈부르크는 2014년과 2015년 해당 지역에서 피후견인의 수를 공유하였음. 2015년 기준 피후견인의 수는 유형별로, 완전후견 205명, 한정후견 54명, 임시후견 271명으로 집계되었음. 이들은 부분적으로 혹은 완전히 법적으로 무능력하다는 신고를 받은 사람들이었음. 이들에 대한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구조와 서비스가 매우 부족한 실정임

3개의 제도 중 완전 후견제도가 가장 권리를 심각하게 박탈하고 있음

- 피후견인은 자동적으로 투표할 권리를 상실하게 됨
- 피후견인의 유언장은 효력이 없음
- 가족위원회나 판사의 동의가 있어야 결혼이 가능함
- 법적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고, 피후견인에 의해 취해진 행위는 법적으로 무효임
- 주간, 월간으로 지급되는 생활비 외에는 자신의 재산에 접근 할 수 없음

* 출처: Victims of Psychiatrists submission(2019). AUSTRALIAN ALTERNATIVE REPORT. UN 조약기구 DB (<https://www.ohchr.org/EN/HRBodies/CRPD/Pages/CRPDIndex.aspx>).

법적 능력(legal capacity)의 의미

법률·학계 법 전문가들은 법적 능력을 '권리를 지니고, 행사하고, 행동할 능력으로, 그러한 권리에 근거하여 소송을 제기할 법적 능력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정의함.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회의 일반논평에서는 법적 능력을 정의하며, 권리의 주체로 법적인 행위자가 되어 법적 관계를 생성, 수정, 종료할 권리를 지니며, 법 제도 내에서 권리의 완전한 보호를 의미한다고 서술함. 법적 능력은 완전한 법인격체 및 법적 행위의 주체로 인정받아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임.

법적 능력의 박탈은 배제적인 처사로 불이익과 차별로 이어지게 됨. 정신장애인이 치료를 위해 시설행을 강요당한다면 그 제도는 차별적인 것임. 법적 능력의 차별적인 거부는 시설화와 자의적인 재산의 박탈로 나타나는데, 장애인권리협약 제14조는 장애가 법적 능력 박탈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을 확인함. 범죄에 대한 유죄 선고나 파산은 법적 능력 제한의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있으나, 장애는 합법적인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임.

장애는 법적 능력의 권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으며 강제구금의 합법적인 근거가 되지 못함. 법적 능력의 존중은 장애인도 법적 행위의 주체가 되어, 지원을 통해 법적 능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고, 평등한 법적 능력의 향유는 장애로 인하여 구금되지 않고 지



원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함

* 출처: 이명화 (2021).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의 법적 능력과 헌법재판소의 강제입원 관련 결정. 국제법학회는 총, 66(2), 103-128.

학계 장애를 가진 사람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른 사람들과 평등한 기초 위에서 법적 능력을 누려야 한다는 취지는, 결국 법적 능력이 모든 사람의 인간성에 기초한 고유한 보편적 속성으로서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도 비장애인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언제나 법적 능력이 인정되어야 함을 의미함.

장애인의 법적 능력 부정은 통상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짐. 하나는 법적으로 무능력을 선언하는 방식(통상은 그 과정에서 후견인이 선임됨)이고, 다른 하나는 특히 법률행위나 통상 본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생활영역에서 그 사람의 자기결정의 효력을 부인하는 방식임. 후자의 경우 박탈된 것은 법적 능력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정신능력(mental capacity)이나 기능적 능력(functional capacity)의 원칙에 의하여 합리화되는 경우가 많았음. 이에 대하여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정신능력은 의사결정을 하는 능력, 일종의 스킬(Skill)로서 사람마다 다르고 같은 사람이라도 환경이나 사회적 요인 등 다양한 요소들에 의하여 변동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서, 협약 제12조에 의하면 의사결정능력의 부족하거나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것이 법적 능력을 부정하는 것을 정당화하지 못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음

* 출처: 박인환 (2019). 장애인권리협약과 의사결정지원 제도화를 위한 국제적 모색. 법학연구, 22(2): 25-64

신체적, 정신적, 지적, 또는 감각적 손상을 가진 경우를 포함하여 모든 장애인은 법적 능력의 부정과 대리 의사결정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인지장애 또는 심리사회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대리 의사결정 제도 및 법적 능력 부정에 의해 훨씬 더 많이 영향을 받아 왔고 여전히 그러하다. 본 위원회는 장애인이라는 상태 또는 손상(신체적 또는 감각적 손상을 포함)의 존재가 법적 능력 또는 12조에 제시된 모든 권리를 부정할 근거로 절대 사용될 수 없음을 재확인한다.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장애인의 완전한 법적 능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의도적이든 결과적이든 12조를 위반하는 모든 관행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본 일반논평은 주로 12조의 규범적 내용 및 그에 따른 국가 의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 위원회는 향후 최종견해, 일반논평, 기타 문서를 통하여 12조에 기초한 권리와 의무에 관한 보다 심도 있는 지침의 제공을 위해 계속하여 노력할 것이다.

2. 12조의 규범적 내용

1) 12조 1항

12조 1항은 장애인이 법 앞에 평등하게 인정받을 권리를 재확인한다. 이는 모든 사람이 법적 능력 인정의 필수 조건인 법인격을 소유한 인간으로서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2) 12조 2항

12조 2항은 장애인이 모든 생활 영역에 있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법적 능력을 누릴 수 있음을 인정한다. 법적 능력은 법에 따른 권리의 보유자 및 행위자로서의 능력을 포함한다. 권리 보유자로서의 법적 능력을 가진 개인에게는 법적 체계에 의한 완전한 권리 보호가 부여된다. 행위자로서의 법적 능력을 가진 개인은 거래에 참여하고 법적 관계를 시작·수정·종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주체로 인정된다. 법적 행위자로서 인정받을 권리는 협약 12조 5항에 제시되어 있으며, 해당 조항에서는 당사국이 “장애인에게 자신의 재산을 소유 및 상속하고 자신의 재정 문제를 관리하며 은행 대출, 담보, 기타 형태의 금융 신용상품을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의 재산이 임의로 박탈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의무를 설명하고 있다.

법적 능력과 의사능력은 서로 다른 개념이다. 법적 능력은 권리와 의무를 보유(법적 지위)하고 그러한 권리와 의무를 행사(법적 작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법적 능력은 유의미한 사회 참여에의 접근을 위한 핵심 요인이다. 의사능력은 사람의 의사결정 능력을 가리킨다. 그런데 이 의사결정 능력은 태생적으로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으며, 한 개인의 의사결정 능력도 환경적·사회적 요인을 포함한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세계인권선언(6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6조)**, **여성차별철폐협약(15조)**과 같은 법적 문서는 법적 능력과 의사능력의 구분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장애인권리협약 12조는 ‘정신의 불건강상’ 및 기타 차별적 꼬리표가 법적 능력(법적 지위 및 법적 작용 모두 포함)을 부정할 적법한 근거가 아님을 확실히 하고 있다. 본 협약 12조에 따르면, 어떤 개인이 의사능력이 실제로 없거나 없다고 여겨지더라도, 그 사실이 법적 능력의 부정을 정당화하는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관련 협약 등

세계인권선언 6조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짐

* 출처: 국가인권위원회(<https://www.humanrights.go.kr>)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6조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짐

* 출처: 국가인권위원회(<https://www.humanrights.go.kr>)

'정신장애'가 법적 능력을 부정할 근거로 사용 되고 있는 사례

민간 캐나다의 장애인단체는 '정신장애'가 법적 능력을 부정할 적법한 근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신장애인으로 분류됨과 동시에 법적 능력을 박탈당하고 있으며, 이는 강제치료와 약물 복용, 결정권 박탈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고하였음

- 캐나다의 장애인인 '정신 장애'로 분류되면 법적 능력을 박탈당함
- 캐나다의 장애인인 지역사회에서 계속 생활하기 위해(그리고 병원이나 시설에 입소하지 않기 위해) 강제로 약을 복용해야 함
- 캐나다 대부분의 법은 장애가 있는 사람이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 스스로 선택한 지지자 또는 기타 지원을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음

* 출처: Canada Community Organizations and Organizat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2019), Submission of Canadian Civil Society Organizations to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UN 조약기구 DB (<https://www.ohchr.org/EN/HRBodies/CRPD/Pages/CRPDIndex.aspx>).

법적 능력은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부여된 천부적 권리다. 상술했듯, 법적 능력은 두 요소로 구성된다. 첫 번째 요소는 권리를 보유하고 법 앞에 법인격 체로 인정받는 '법적 지위'이다. 여기에는 예를 들면 출생증명서의 보유, 의료 지원의 요구, 선거인 명부 등록, 여권 신청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두 번째 요소는 그러한 권리에 따라 행동하고 그러한 행동을 법에 의해 인정받는 '법적 작용'이다. 장애인이 빈번하게 부정되거나 훼손되는 경험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요소이다. 예를 들어, 법은 장애인에게 재산 소유를 허용하면서도 재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장애인의 행위를 항상 존중하지는 않을 수 있다. 법적 능력은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지위와 법적 작용 모두를 가짐을 의미한다. 따라

서 법적 능력의 권리를 실현하려면 반드시 법적 능력의 두 요소가 모두 인정되어야 한다. 이 두 요소는 절대 분리될 수 없다. 의사능력이라는 개념은 그 자체로 매우 논란의 소지가 크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는 달리, 의사능력은 객관적이거나 과학적이거나 자연 발생적인 현상이 아니다. 의사능력 평가에 있어 지배적 역할을 하는 원리·전문성·관행이 사회적·정치적 맥락에 따라 변화듯이, 의사능력도 사회적·정치적 맥락에 따라 좌우된다.

‘법적 능력’ 용어의 사용

학계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제12조 제2항에서 ‘법적 능력’을 두 번째로 사용하고 있는 유엔 인권조약으로, 법적 능력은 여성차별철폐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에서 처음 사용되었음. 여성차별철폐협약 제 15조는 남성과 평등한 여성의 법적 능력을 명시하고 있고, 법적 능력의 인정이 법 앞에서 평등할 권리에 필수적임을 확인하고 있음. 여성차별철폐협약은 시민적 권리에 있어서 여성이 평등하게 법적 능력을 행사할 권리를 명시하며, 특히 계약의 체결, 투표, 재산의 처분과 상속, 법원 및 사법절차에서 평등한 대우가 이루어질 것을 강조함

* 출처: 이명화 (2021).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의 법적 능력과 헌법재판소의 강제입원 관련 결정. 국제법학회논총, 66(2), 103-128.

본 위원회가 지금까지 검토한 대부분의 당사국 보고서에서는 법적 능력과 의사능력의 개념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인지적 또는 심리사회적 장애 때문에 **의사결정** 능력이 손상된 것으로 간주된 사람은 특정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법적 능력을 배제 당하였다. 이와 같은 법적 능력에 대한 배제 현상은 단순히 손상의 진단에 기초하여 결정되거나(상태 접근법), 또는 의사결정이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지(결과 접근법), 또는 의사결정 능력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지(기능 접근법)에 따라 결정된다. 기능 접근법에서는 의사능력을 평가하고 그에 따라 법적 능력을 부정하고 있다. 이 경우 어떤 개인이 결정의 본질과 결과를 이해할 수 있는지, 관련 정보를 활용하거나 가치 비중을 따질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에 기반하고 있다. 기능 접근법에는 다음의 두 가지 주요 결점이 존재한다. (1) 이 접근법은 장애인에게 차별적으로 적용된다. (2) 이 접근법은 인간 정신 내부의 작용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다고 가정하며, 어떤 개인이 이 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핵심적 인권, 즉 법 앞에 평등하게 인정받을 권리를 부정한다. 상기 세 가지 접근법은 모두 장애와 의사결정 능력 또는 어느 한쪽을 한 개인의 법적 능력을



부정하고 법 앞에서의 인간이라는 지위를 떨어뜨릴 수 있는 타당한 근거로 간주하고 있다. 12조는 이와 같은 차별적인 법적 능력 부정을 허용하지 않으며, 오히려 법적 능력 행사에 있어 지원의 제공을 요구한다.

의사결정지원(Decision support)

학계 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의 취지는 장애인의 법적 능력의 향유와 그 법적 능력의 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의사결정지원의 요청에 있음. 의사결정지원 요청은 의사결정능력 장애인(persons with impaired decision-making ability)이 법적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그들의 자기결정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의사결정능력상의 장애 때문에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의사결정을 지원함으로써 자기결정을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는 취지임. 종래 행위무능력제도가 법적 능력의 행사(의사결정)에 필요한 합리적 판단능력(이성)이 부족한 사람의 의사결정을 획일적으로 법적 무가치로 판단하여 이들의 '자기결정을 배제 제한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였다면, 장애인권리협약은 본인의 합리적 판단을 지원하여 법적 능력의 행사, 즉 '자기결정을 지원함으로써 존중'을 하라는 취지임

* 출처: 박인환 (2019). 장애인권리협약과 의사결정지원 제도화를 위한 국제적 모색. 법학연구, 22(2): 25-64

학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강제입원을 허용하는 대리결정제도 대신 지원을 통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의사결정지원제도로의 전환을 제시함. 대리결정제도는 대리인의 임명을 통한 정신장애인의 법적 능력의 배제, 그리고 의지와 선호도가 아닌 객관적인 최선의 이익(best interests)에 근거하여 결정이 내려지는 속성이 있음. 반면 의사결정지원은 법적 능력의 행사를 위한 지원에 속하며, 신뢰하는 자의 도움을 통해 결정을 내리고, 결정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의사를 전달하고 실행에 도움을 받는 것임. 개인은 지원을 제공하는 주체와 지원의 방법을 통제하고 선택하며 최종결정을 내리게 되어, 타인에 의한 과도한 통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음. 더하여 의사결정지원제도는 장애인이 지원을 거절하거나, 관계를 종료 또는 수정할 권리를 보유하도록 함

* 출처: 이명화 (2021).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의 법적 능력과 헌법재판소의 강제입원 관련 결정. 국제법학회는 총, 66(2), 103-128.

3) 12조 3항

12조 3항은 당사국이 장애인에게 법적 능력 행사에 있어서의 지원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장애인의 법적 능력의 부정을 삼가야 하며, 오히려 장애인에게 법적 효력을 가진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지원을 이용할 기회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법적 능력 행사를 위한 지원은 반드시 장애인의 권리·의지·선호를 존중하여야 하며, 대리 의사결정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12조 3항은 지원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고 있다. ‘지원’은 다양한 종류와 강도를 가진 공식적 및 비공식적 지원 방식을 모두 아우르는 용어이다. 예를 들어, 장애인은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신뢰할 수 있는 지원 제공자를 선택하여 특정 유형의 결정에 관한 법적 능력 수행에 보조를 받을 수도 있고, 동료 지원, 옹호(자기 옹호 포함), 의사소통 보조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다. 장애인의 법적 능력 지원에는 장애인이 은행 계좌 개설, 계약 체결, 기타 사회적 거래에 필요한 법적 행위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보편적 설계 및 접근성과 관련된 조치, 가령 은행과 금융 기관 등의 민간 및 공공 행위자에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의 정보 제공 또는 전문 수화 통역사 제공을 요구하는 조치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특히 비언어적 소통을 사용하여 의지와 선호를 표현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존과 다른 다양한 소통 방식을 개발하고 인정하는 일 또한 지원이 될 수 있다. 많은 장애인에게 사전 계획은 매우 중요한 형태의 지원이다. 이를 통해 타인에게 자신이 원하는 바를 알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도 자신의 의지와 선호를 표현할 수 있게 된다. 모든 장애인은 사전 계획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그러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당사국은 다양한 선호도를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사전 계획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이 방법들은 모두 반차별적이어야만 한다. 개인이 희망하는 경우 사전 계획 절차를 위한 지원은 반드시 제공되어야 한다. **사전 지시서**의 발효(및 효력 중지) 시점은 반드시 개인이 결정하여야 하며, 지시문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사항들은 개인의 의사능력이 부족하다는 평가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



의사결정을 위한 적절한 지원 제공과 의사결정과정에 당사자의 참여 보장

인간 뉴질랜드 장애인단체는 개인이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 제공, 소통 지원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보고함. 또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야 할 당사자가 없이도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현실을 보고함

- 뉴질랜드 장애인단체는 '개인 및 재산권 보호법(Protection of Personal and Property Rights Act(PPPR))'(1988)이 장애인이 법적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함. 이 법은 협약 제 12조에 부합하지 않는 대체의사결정 형태를 규정하고 있음
- 정부는 "PPPR법은 개인이 자신과 관련한 과업들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완전히 부족하다는, 까다로운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당사자의 완전한 참여를 포함한 전문적인 법적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음. 하지만 이 법은 법원으로 하여금 의사결정이 가능하나, 단지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사람에게도 후견 조치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장애인이 결정을 내리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은 현실이며, 특히 장애인이 법원 절차에 참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후견인이 선임되는 상황임
- 뉴질랜드 정부 보고서에는 복지 후견인에게 "피후견자가 가진 능력을 최대한 사용하고 개발하도록 격려"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음을 보고하였으나, 이를 모니터링하지 않고 있으며, 장애인의 의사를 따르지 않은 채 대리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경우가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음. PPPR법에 따라 장애인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도 재산 및 복지에 관한 결정을 다른 사람이 대신 할 수 있음

* 출처: Disability Community of Auckland(2014). Independent Review. UN 조약기구 DB
(<https://www.ohchr.org/EN/HRBodies/CRPD/Pages/CRPDIndex.aspx>).

사전지시서(advance directive)

학계 요양 및 의료 행위에 수반되는 신체 접촉 또는 침습에 대한 본인의 동의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임. 이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하고,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방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 서면으로 전달되어 표시될 수도 있고, 제3자를 통해 전달될 수도 있음. 그러나 의사표시와 도달 사이에 상당한 시간간격이 있다면, 그 의사표시가 수회에 걸쳐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면, 그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됨. 그것이 바로 사전지시서(advanced directives)임. 이런 성격의 요양 및 의료에 관한 사전지시서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로서의 동의 또는 부동의 의사표시를 미리 해 둔 것이기 때문에, 철회가 없이 서비스 제공자에게 전달되면 이로써 그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함. 사전지시서 작성자의 의도가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를 활용하려는 것이라면 동일한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 현행법 하에서는 요양 및 의료에 관한 사전지시서는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사전지시서와 달리 아무 제한 없이 활용될 수 있음

* 출처: 제철웅 (2017). 성년후견과 지속적 대리 -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보호에서 인권존중으로 -. 법조, 66(2): 76-122

제공되는 지원의 종류와 강도는 장애인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개인마다 현저하게 다를 수 있다. 이는 협약의 일반 원칙 중 하나로 “인간 다양성과 속성의 일부로서 장애인의 차이에 대한 존중과 수용”을 제시하는 3(d)조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장애인의 의사결정에 있어 자율성과 능력은 위기 상황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존중되어야 한다.

일부 장애인은 협약 12조 2항에 제시된, 다른 사람과 평등한 법적 능력을 가질 권리에 대한 인정만을 추구하고, 12조 3항에 제시된 지원을 받을 권리의 행사는 희망하지 않을 수도 있다.

4) 12조 4항

12조 4항은 법적 능력 행사 지원 체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안전장치를 설명하고 있다. 12조 4항은 반드시 12조의 다른 조항 및 협약 전체와 함께 해석되어야 한다. 이 조항은 당사국에게 법적 능력 행사에 관련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안전장치의 마련을 요구한다. 안전장치는 반드시 개인의 권리·의지·선호에 대한 존중의 보장을 주요 목적으로 해야 한다. 이와 같은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안전장치는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학대 방지를 위한 보호 장치를 제공해야 한다.

피후견인이 아닌 후견인을 보호하는 후견제도 관련법

민간 덴마크 시민사회는 2019년 후견 관련법이 피후견 장애인의 권리가 아닌 후견인의 권리 보호를 우선하고 있어, 피후견인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하였음

- 후견제도와 대체의사결정의 대안인 ‘지원의사결정’ 원칙이 덴마크 법과 실천부분에서 적절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2014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이를 권고하였음에도, 지원의사결정의 개념은 ‘법적무능력 및 후견제도 법(Legal Incapacity and Guardianship Act)’에 드러나지 않음
- ‘법적무능력 및 후견제도 법(Legal Incapacity and Guardianship Act)’은 후견인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음. 실제로 심리 사회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그들의 권리를 방어하고 행사할 때 후견인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있음. 예를 들어, 후견인은 피후견인이 장애보상금 등의 거부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것을 도울 의무가 없음

* 출처: Civil Society(2019). Civil Society’s suggestions to the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PwD regarding the LoIPR on the Kingdom of Denmark. UN 조약기구 DB
(<https://www.ohchr.org/EN/HRBodies/CRPD/Pages/CRPDIndex.aspx>).



현저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개인의 의지와 선호에 대한 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최선의 이익’에 따른 결정 대신에 반드시 ‘의지 및 선호에 대한 최선의 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12조 4항에 따라 개인의 권리·의지·선호를 존중하는 것이다. ‘최선의 이익’ 원칙은 성인에 있어 12조를 준수하는 안전장치가 아니다.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법적 능력을 가질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반드시 ‘의지 및 선호에 대한 최선의 해석’ 패러다임이 ‘최선의 이익’ 패러다임을 대체해야 한다.

모든 사람은 ‘부적절한 영향’을 받는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의사결정을 위해 타인의 지원에 의존하는 사람의 경우 부적절한 영향은 더욱 가중될 수 있다. 부적절한 영향은 지원 제공자와 지원 수급자 사이의 상호작용이 두려움·공격성·위협·기만·조작을 포함하는 경우 발생한다. 법적 능력 행사를 위한 안전장치에는 반드시 부적절한 영향으로부터의 보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보호는 위협을 감수하고 실수를 저지를 권리를 포함하여 개인의 권리·의지·선호를 존중해야 한다.

5) 12조 5항

12조 5항은 당사국에게 장애인의 재정적 및 경제적 문제에 관해 다른 사람과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입법적·사법적·행정적 및 기타 실질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그동안 장애의 의료모델에 따라 **장애인의 재정 및 재산에 대한 접근**은 거부되어 왔다. 재정적 문제와 관련하여 장애인의 법적 능력을 부정하는 이 접근법은 12조 3항에 따라 법적 능력 행사를 위한 지원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여성 차별**과 마찬가지로,⁴⁾ 장애 또한 재정 및 재산 영역에 있어 차별의 근거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관련 협약 등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3(b조)

당사국은 경제적, 사회적 생활의 다른 영역에 있어 남녀평등의 기초 위에 동일한 권리, 특히 다음의 권리를 확보할 목적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a) 가족급부금에 대한 권리
- (b) 은행대부, 저당 및 기타 형태의 금융대부에 대한 권리
- (c) 레크리에이션 활동, 체육과 각종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 출처: 국가인권위원회(<https://www.humanrights.go.kr>)

4) 여성차별철폐협약 13(b)조 참조

룩셈부르크 재정 및 재산 영역에서의 차별

민간 제12조는 장애인의 재정적 및 경제적 문제에 관해 다른 사람과 평등한 권리를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룩셈부르크 민간단체는 경제 관리인이 선임되어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관리 및 사용하지 못한 한 당사자의 사례를 보고하고 있음

- 1982년의 후견제도 법(Guardianship Act)은 부정할 수 없이 인권에 반하는 법임. 비영리 전문 후견제도 단체는 후견제도의 반 이상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음을 밝힘. 2011년의 행동계획과 2014년 국가보고서에서도 현재의 후견제도 법이 CRPD에 위반됨을 인정한 바 있음. 향후 개혁이 대체의사결정에서 지원의사결정으로의 전환을 계획하고 있는지 역시 불분명한 상황임
- 한정 후견제도(완전 후견제도 포함)는 영향을 받는 가족들, 특히 중증의 지적장애 당사자의 가족에게는 ‘필요한’ 것으로 여겨지기도 하고, 피후견인에게는 ‘차별’로 여겨지기도 함.
- “나는 54살이지만, 5살처럼 취급받았다” 사고 이후 장애를 갖고 사게 된 자의 증언임. 그의 경우 보호작업장에서 일하면서 재정적 문제를 겪게 되자, 시설 측에서 후견인 선임을 제안하였음. 후견인 선임 당시 재정적인 결과에 대한 정보 외에는 아무것도 제공되지 않았음. 가족 구성원의 사전 자문 요청도 거부 되었으며, 서면 동의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었음. 수년 간 그는 생활에 필요한 생활비(아파트 및 돌봄 비용 제외)에 대해 주당 50유로를 받아 생활하였음, 1년~2년에 한번 후견인을 만나는 것이 전부였음

* 출처: Nème Mat Eis and other Luxembourg DPOs(2016). Alternative Report on Implementa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UN 조약기구 DB
(<https://www.ohchr.org/EN/HRBodies/CRPD/Pages/CRPDIndex.aspx>).

장애인의 재산권

학계 장애인의 재산권 제한이 장애인권리협약의 위반인지 여부는 유사한 상황에서 비장애인도 같은 제한을 받는지 살펴봄으로써 판단할 수 있음. 재산의 사용은 재산권의 핵심적 권리이며 재산 상속이나 소유를 위해서 필수적임. 장애인권리협약은 당사국들이 장애인을 착취와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장애인 집단을 재산 상속인의 범주에서 배제하지 않을 것을 주문하고 있음. 당사국은 장애인이 임의적으로 재산을 박탈당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정책적 지원을 통해 평등한 접근성으로 재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장애인은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부족하여 권리를 제한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보호를 요하는 문제로 접근해야 함

* 출처: 이명화 (2021).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의 법적능력과 헌법재판소의 강제입원 관련 결정. 국제법학회는 총, 66(2), 103-128.



3. 당사국의 의무

당사국은 법 앞에서 평등하게 인정받을 장애인의 권리를 존중·보호·실현할 의무를 가진다. 이에 있어 당사국은 법 앞에서 평등하게 인정받을 권리를 장애인에게서 박탈하는 모든 행위를 삼가야 한다. 당사국은 장애인이 법적 능력의 권리를 포함한 인권을 실현하고 누릴 수 있도록 **비국가 행위자**와 민간인이 장애인의 능력에 개입하는 일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법적 능력 행사 지원의 목적 중 하나는 장애인이 희망할 경우 미래에 보다 적은 지원으로도 법적 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자신감과 기술을 형성하는 것이다. 당사국은 지원을 받는 사람이 법적 능력의 행사에 있어 지원을 줄이거나 더 이상 지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 시점을 결정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장애 또는 의사결정 능력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천부적으로 법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개념인 ‘보편적 법적 능력’을 완전히 인정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의도적이든 또는 결과적이든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발생시킬 수 있는, **법적 능력을 부정하는 모든 것들을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⁵⁾

장애인의 법적 능력을 부정하는 용어

민간 ‘이탈리아 장애포럼(Italian Disability Forum)’은 법적 능력을 다루는 법에서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는 용어와 장애인의 법적 능력을 부정하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음을 지적하였음.

- Law 6/2004에는 여전히 부정적인 개념이 남아있음. “관리에 부적절한”, “자연적으로 무능력한” 등의 표현은 인지가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일시적이거나 영구적으로 부족한 사람을 의미하고 있으며, “취약한 개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지되고 있다고 명시됨

* 출처: Italian Disability Forum(2016). First Alternative Report to the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UN 조약기구 DB
(<https://www.ohchr.org/EN/HRBodies/CRPD/Pages/CRPDIndex.aspx>)

비국가 행위자(Non-State Actors)

법률-학계 일반적으로 국제적 차원에서 활동하는 국가 이외의 행위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국제적 차원에서 활동하는 행위자가 크게 국가 행위자와 비국가 행위자로 분류될 수 있다는

5) 장애인권리협약 2조와 5조를 함께 참조

것을 의미함. 기능적 측면에서 보면 ‘국제적 상호작용에는 참여하고 있으나, 법인격·권한·참여의 목적과 자격·참여의 방식 등에 있어서 주권국가와는 구별되는 모든 행위자’를 가리킨다고 보고 있음. 비국가 행위자는 사적 비국가 행위자(private NSAs)와 공적 비국가 행위자(public NSAs)로 나뉨. 사적 비국가 행위자는 영리성 추구 여부에 따라 영리 기업과 NGO로 나눌 수 있고, 공적 비국가 행위자는 도시·지방정부(sub-national regions)와 국제기구로 나눌 수 있음

* 출처: 정민정 (2017). 파리협정과 비국가 행위자. 서울국제법연구 24.2 (2017): 125-154.

12조 관련 당사국 최초 보고서에 관한 최종견해에서 장애인권리위원회는 당사국이 반드시 “후견인 제도와 신탁관리인 제도를 허용하는 법을 재검토하고, 대리 의사결정 제도를 사람의 자율성·의지·선호를 존중하는 **지원 의사결정 제도로** 대체하기 위한 법과 정책을 개발하고자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반복하여 언급한 바 있다.

호주, 지원의사결정을 위한 지침 개발

민간 호주 정부는 ‘국가 지원의사결정 메커니즘을 구현하기 위한 지침(National Decision-Making Principles and Guidelines)’을 개발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주장애인단체(Australian Disabled people’s organization)’는 국가가 이를 이행할 의지가 없음을 보고하였음

- 13(a) ‘영연방법에서 평등, 법적 능력과 장애(Equality, Capacity and Disability in Commonwealth Laws)’보고서가 2014년 의회에 상정되었음. 주요 권고사항은 개인의 의사결정과 관련한 연방, 주/준주 법과 법적 프레임워크를 개인의 의지와 선호를 기반으로 하는 지원의사결정 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개발된 ‘국가 지원의사결정 메커니즘을 구현하기 위한 지침(National Decision-Making Principles and Guidelines)’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이었음. 5년이 지났지만, 정부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음

한편, 호주의 ‘국가 지원의사결정 메커니즘을 구현하기 위한 지침(National Decision-Making Principles and Guidelines)’은 다음의 원칙을 담고 있음

- **원칙1: 평등한 의사결정을 할 권리**
 - 모든 성인은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스스로 내릴 권리와 그 결정이 존중받을 평등한 권리를 갖고 있음
- **원칙2: 지원**
 - 의사결정에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리고, 결정을 위해 소통하고, 결정 과정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이 제공되어야 함
- **원칙3: 의지, 선호와 권리**
 -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의 의지와 선호, 권리는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방향이 되어야 함



○ 원칙4: 안전장치

- 법률 및 법적 프레임워크는 학대나 부당한 영향력을 방지하는 것을 포함하여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위한 개입에 대해 적절하고 효과적인 안전장치를 포함해야 함

* 출처: Australian Disabled people's Organisations(2019). Disability Rights Now 2019. UN 조약기구 DB (<https://www.ohchr.org/EN/HRBodies/CRPD/Pages/CRPDIndex.aspx>).
Australia Law Reform Commission(ALRC)(2014). Equality, Capacity and Disability in Commonwealth Laws. Australian government 사이트(<https://www.alrc.gov.au/publication/equality-capacity-and-disability-in-commonwealth-laws-alrc-report-124/>).

장애인권리협약과 우리나라의 공공후견 지원체계

학계 공공후견사업은 무엇보다도 지역사회에 방치되어 학대, 착취, 폭력, 성폭력에 노출된 사회취약계층의 장애인, 고령자의 보호를 위하여 긴요할 뿐 아니라 수요자 중심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있어서도 불가결한 사회서비스로 자리 매김 되고 있음. 이러한 사회적 수요에 대응하는 한편, 친족후견인의 지원 등을 위하여 통일적 공공후견 지원체계의 구축이 시급한 제도적 과제로 부상(浮上)하고 있음.

공공후견 지원체계의 정비를 통한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현행 제도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12조(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중대한 비판에 직면하고 있는 점은 간과할 수 없음. 무엇보다도 우리 정부는 새 제도와 관련하여 협약 제12조에서 요청하는 법적 능력의 향유와 의사결정지원에 관한 원칙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비판과 함께 이를 본인의 자율(autonomy), 의사(will), 선호(preferences)를 존중하는 의사결정지원제도로 전환하라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의 권고를 받고 있음. 이점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성년후견제도가 의사결정지원 요청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음. 협약 제12조는 법적능력의 향유와 그 행사를 위한 의사결정지원을 요청하는 데 반하여, 현행 성년후견제도는 대체로 행위능력 제한과 포괄적 법정대리에 의한 대체의사결정의 구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임(특히 성년후견유형)

* 출처: 박인환 (2021). 공공후견 및 의사결정지원 촉진을 위한 입법과제. 법조, 70(3): 43-86.

독일의 의사결정지원제도(지원 의사결정 제도)

기사 “의사결정지원제도(혹은 의사결정대행제도)는 말 그대로 정신적 장애인 혹은 노령자의 의사결정을 대행하는 제도 일반을 뜻한다. 성년후견제도와 다른 점은 단일한 의사결정에 관한 것일지라도 장애인의 법적능력(legal capacity)을 박탈하지 않고 원치 않는 의사결정대행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의사결정지원제도 중 하나로 각광받는 것은 지속적 대리권 제도다.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안경희 교수에 따르면 독일의 경우 지속적 대리권은 장애인 등이 행위능력을 상실할 경우 또는 후견필요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특정인(본인)이 다른 특정인(대리인)에게 수여한 의사표시 내지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지속

적 대리권의 범위는 재산 관련 업무, 의료관련 사무, 폐쇄병동 입원 및 기타 자유박탈적 처치에 관한 사무, 기타 신상에 관한 사무 등 재산 및 신상에 관한 것이다. 이 외에도 소송행위, 부동산 행위, 후견에 관한 사전지시, 사전의료지시도 포함된다. 단 독일법원은 해당 대리인이 정신적 장애인 등이 설정한 권한을 넘어서는 경우, 자체적으로 후견인을 선임해 대리인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 출처: 에이블뉴스 (2018). 후견제도 보완, '지속적 대리권제도' 제시. 2018-02-22 18:45:32.

대리 의사결정 제도는 무제한적 후견 제도, 사법적 금치산 제도, 부분적 후견 제도를 포함하여 여러 형태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제도는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단일 결정에 관련되었을지라도 개인의 법적 능력을 박탈하고, (2) 대리 의사결정자가 관련 당사자 외의 타인에 의해 지정될 수 있고 이 과정은 당사자의 의지에 반하여 이루어질 수 있으며, (3) 대리 의사결정자가 내린 모든 결정은 당사자의 의지와 선호를 바탕으로 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당사자의 객관적인 '최선의 이익'이라고 믿어지는 것을 바탕으로 한다는 것이다.

대리 의사결정 제도를 지원 의사결정 제도로 대체해야 한다는 당사국의 의무를 위해서는 대리 의사결정 제도의 폐지와 지원 의사결정 제도라는 대안의 개발이 필요하다. 대리 의사결정 제도를 유지하면서 지원 의사결정 제도를 개발하는 병행 정책은 협약 12조를 준수하기에는 불충분하다.

지원 의사결정 제도는 사람의 의지와 선호를 우선으로 하고 인권 규범을 존중하는 다양한 지원 방법으로 구성된다. 지원 의사결정 제도는 자율성에 관련된 권리(법적 능력의 권리, 법 앞에서 평등하게 인정받을 권리, 거주지 선택의 권리 등) 및 학대와 박해로부터의 자유와 관련된 권리(생존권, 신체적 고유의성의 권리 등) 등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더불어 지원 의사결정 체계는 장애인의 삶을 과잉 규제해서는 안 된다. 지원 의사결정 제도는 여러 형태를 취할 수 있으나, 항상 협약 12조의 준수를 보장하는 특정 핵심 조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그러한 조항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 지원 의사결정은 모든 사람이 이용 가능해야 한다. 필요한 지원의 수준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그 수준이 의사결정 지원을 받는 데 장벽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



(b) 보다 강도 높은 형태의 지원을 포함하여, 법적 능력 행사를 위한 모든 형태의 지원은 객관적으로 최선의 이익이라고 여겨지는 것에 기반하면 안 되고, 반드시 당사자의 의지와 선호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c) 개인의 의사소통 방식이 전통적인 방식과 다르거나 극소수의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을지라도, 의사소통 방식이 의사결정 지원을 받는 데 장벽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

(d) 장애인 개인이 공식적으로 선택한 지원 제공자에 대한 법적 인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는 특히 지역사회 내에서 고립되어 있어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원을 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지원 마련을 촉진할 의무가 있다. 여기에는 제3자가 지원 제공자의 신원을 검증할 수 있는 메커니즘과 더불어 지원 제공자가 당사자의 의지와 선호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다고 간주될 경우 제3자가 그 행동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e) 협약 12조 3항에 제시된, 당사국이 요청된 지원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해야 한다는 요건의 준수를 위하여, 당사국은 반드시 장애인이 저가 또는 무료로 지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또한 재원의 부족 때문에 법적 능력의 행사에 필요한 지원에 접근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f) 의사결정 지원이 장애인의 다른 기본권, 특히 투표권, 결혼하거나 동성 간 혼인 관계를 수립하고 가정을 꾸릴 권리, 재산권, 친권, 친밀한 관계 및 의학적 치료에 동의할 수 있는 권리, 자유권 등의 제한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g) 당사자는 지원을 거부하고 지원 관계를 언제든지 종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후견인 선임 기간에 대한 규정

민간 룩셈부르크 민간단체는 후견제도 시행이 임시로 행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시행 기간이 정해지지 않아, 당사자의 의지에 따라 종료 및 변경 할 수 없는 현실을 보고하였음

- 또 다른 문제는 후견 조치의 기간임. 모든 형태의 후견제도가 임시 보호 조치로 제시되지만 장애인은 때때로 성인 이후 평생 동안 후견이 지속되기도 함. (피후견인과 관련한 정보는 불행히도 사법부에서 제시하지 않아 제공할 수 없음) 법에는 후견인 자격을 종료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피후견인과 그들의 가족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에서 그들은 대부분 후견조치 종료 절차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지적장애인은 후견 제도를 확정적인 것(definitive)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음. 후견제도의 개혁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검토 과정을 도입해야만 함

* 출처: Némme Mat Eis and other Luxembourg DPOs(2016). Alternative Report on Implementa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UN 조약기구 DB (<https://www.ohchr.org/EN/HRBodies/CRPD/Pages/CRPDIndex.aspx>).

(h) 법적 능력 및 이의 행사를 위한 지원과 관련된 모든 절차에 있어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안전장치는 당사자의 의지와 선호에 대한 존중의 보장을 목표로 한다.

(i) 법적 능력 행사를 위한 지원 조항은 의사능력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는 안 된다. 법적 능력 행사를 위한 지원 조항에는 지원 필요도의 판단을 위한 새롭고 반차별적인 지표가 요구된다.

법 앞의 평등권은 오랜 시간 동안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뿌리를 둔 시민적·정치적 권리로 인정되어 왔다. 시민적·정치적 권리는 비준 시점부터 발효되며, 당사국은 그 권리의 실현을 위한 조치를 즉각 시작할 것을 요구받는다. 마찬가지로 12조에 제시된 권리는 비준 시점에서부터 적용되며, 즉각적 실현의 대상이 된다. 법적 능력 행사의 지원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해야 한다는 12조 3항의 국가 의무는 법 앞에서 평등하게 인정받을 시민적·정치적 권리의 실현을 위한 의무이다. ‘점진적 실현’(4조 2항)은 12조 규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당사국은 협약 비준 즉시 12조에서 제시하는 권리의 실현을 위해 즉각적 조치를 시작해야 한다. 이 조치는 신중하고 면밀히 계획된 것이어야 하며,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의 유의미한 참여를 통한 협의에 기반해야 한다.

적용 시점

학계 대리 의사결정 제도(의사결정대행제도)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는 견해를 모든 후견제도를 폐지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임. 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 제3항과 제4항을 결합해보면, 후견제도는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기 때문임. 후견을 개인맞춤형으로 필요한 범위에 한정해서 최대한 단기간 개시하도록 하고, 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 제4항에 따라 후견인이 활동하도록 지원 감독한다면 이를 협약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결정지원을 우선하도록 하는 제12조 제3항의 요청을 염두에 두면 후견은 최후의 불가피한 때에 활용되어야 할 최후의 수단이어야 함

* 출처: 제철웅 (2014). 민사소송에서의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법적 지위: 소송무능력자제도의 개정제안. 법학논총, 31(3), 115-147.



4. 협약 내 여타 규정과의 관계

법적 능력의 인정은, 사법예의 접근권(13조), 정신의료시설에의 비자발적 구금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와 강제로 정신건강 치료를 받지 않을 권리(14조), 신체적 및 정신적 고유성을 존중받을 권리(17조), 이동과 국적의 자유의 권리(18조), 거주지와 동거인 선택의 권리(19조), 표현의 자유의 권리(21조), 결혼하고 가정을 꾸릴 권리(23조), 의학적 치료에 동의할 수 있는 권리(25조), 투표권 및 선거 피선거권(29조)을 포함하여, 장애인권리협약에서 제시하는 여러 기타 인권 조항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법 앞의 인간으로서의 인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협약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권리를 주장·행사·이행할 수 있는 능력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다.

1) 5조: 평등 및 반차별

법 앞에서의 평등한 인정을 실현하려면 법적 능력은 결코 차별적으로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 협약 5조는 법에 따라 그리고 법 앞에서의 모든 사람의 평등 및 법의 평등한 보호의 권리를 보장한다. 5조는 장애를 바탕으로 한 모든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한다. 협약 2조는 장애를 바탕으로 한 차별을 “의도적으로 또는 결과적으로 타인과 평등한 모든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인정·향유·행사를 해치거나 무효화하는, 장애를 바탕으로 한 일체의 구별·배제·제한”으로 정의한다. 의도적으로 또는 결과적으로 법 앞에서 평등하게 인정받을 장애인의 권리를 저해하는, 법적 능력의 부정은 협약 5조와 12조의 위반이다. 국가는 파산, 형사 범죄 판결 등 특정 상황을 바탕으로 개인의 법적 능력을 제한할 권한이 있다. 그러나 법 앞에서 평등하게 인정받을 권리 및 차별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에 따르면, 국가가 법적 능력을 부정할 경우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법적 능력에 대한 부정이 성별·인종·장애와 같은 개인적 특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거나, 그 사람을 다르게 취급하는 의도나 결과를 가져서는 안 된다.

법적 능력의 인정에 있어 차별로부터의 자유는 협약 3(a)조에 담긴 원칙에 따라 자율성을 회복시키며 사람의 존엄성을 존중한다. 선택의 자유는 대부분의 경우 법적 능력을 필요로 한다. 자립과 자율성에는 개인의 결정이 법적인 존중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된다. 의사결정에 있어 지원 및 적절한 편의제공이 필요하다는 점

이 개인의 법적 능력을 의심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인간 다양성과 속성의 일부로 장애인의 차이를 존중하고 수용하는 것(3(d)조)은 동화정책주의에 기반하여 법적 능력을 허용하는 것과는 양립할 수 없다.

반차별에는 법적 능력 행사에 있어 적절한 편의에 대한 권리(5조 3항)가 포함된다. 협약 2조는 적절한 편의제공을 “필요한 특별한 경우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향유 또는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과도하거나 부당한 부담을 지우지 않는 수준의 적합하고 필요한 수정·조정 과정”으로 정의한다. 법적 능력 행사에 있어 적절한 편의의 권리는 법적 능력 행사 지원의 권리와 구별되며, 오히려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 당사국은 장애인의 법적 능력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과도하거나 부당한 부담이 아닌 필요한 수정 및 조정을 진행해야 한다. 수정 및 조정에는 법원, 은행, 사회복지사무소, 투표소와 같은 필수적인 건물에의 접근, 법적 효력을 가진 결정과 관련한 정보에의 접근, 활동보조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반면, 법적 능력 행사 지원의 권리는 과도하거나 부당한 부담의 주장에 의해 제한될 수 없다. 국가는 법적 능력 행사 지원에의 접근을 제공할 절대적 의무를 가진다.

합리적 편의제공(reasonable accommodation)

학계 장애인에게 아무런 편의를 제공하지 않고 비장애인과 같이 경쟁하는 것 자체가 차별이기 때문에 실질적 평등을 위한 합리적 편의의 제공은 필수적이며, 장애인을 위한 합리적인 편의가 제공되지 않거나 거부되는 경우에는 차별로 간주됨. 의사결정능력장애인이 법적 능력을 제한받지 않더라도 그 장애 때문에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없어서 그 법적 능력을 행사할 수 없다면 그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합리적 편의의 제공으로서 의사결정지원이 요청되는 것임. 그러나 법적 능력의 행사를 위한 의사결정지원은 의사결정능력장애인이 그 밖에 모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한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합리적 편의의 제공과 동일한 것은 아님. 양자는 상호보완적이며 법적 능력 행사를 위한 의사결정지원은 즉각 제공되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합리적 편의의 제공에서 인정되는 불균형하거나 과도한 부담(disproportionate or undue hardship)의 항변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함

* 출처: 박인환 (2021). 공공후견 및 의사결정지원 촉진을 위한 입법과제. 법조, 70(3): 43-86



2) 6조: 장애 여성

여성차별철폐협약 15조는 남성과 평등한 여성의 법적 능력을 규정함으로써 법적 능력의 인정이 법 앞에서의 평등한 인정에 필수적임을 인정하고 있다. 15조 2항에 따르면, “당사국은 민사상 문제에 있어 여성에게 남성과 평등한 법적 능력 및 그 능력을 행사할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특히 여성에게 계약을 체결하고 재산을 관리할 평등한 권리를 부여하여야 하며, 법원 및 재판소에서의 절차의 모든 단계에 있어 여성을 평등하게 대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2항). 이 조항은 장애 여성을 포함한 모든 여성에게 적용된다. 장애인권리협약은 모든 장애 여성이 성별과 장애를 바탕으로 한 다중적이고 교차적인 형태의 차별을 겪을 수 있음을 인정한다. 예를 들어, 장애 여성은 강제 불임 수술에 더 많이 노출되며, 성관계에 동의할 능력이 없다는 가정에 따라 재생산권 및 의사결정의 통제권을 부정당하는 경우가 많다. 특정 재판소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에게 대리 의사결정자를 배정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기도 한다. 따라서 장애 여성의 법적 능력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인정되어야 함을 재확인하는 것은 특히 중요하다.

장애여성에 대한 강제불임 조치

민간 국내 장애인단체는 시설 등에서 자행되는 장애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불임 시술에 대한 현황을 민간보고서 초안에 보고하였음. 장애를 이유로 낙태 및 불임을 강요받는 것은 장애여성의 재생산권 및 의사결정의 통제권을 부정당하는 것임

- 모자보건법 제14조제3항은 “본인이나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 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을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법으로 금지하였음. 이제 장애여성의 결정권과 재생산권을 보장하는 새로운 대체법안이 마련해야 함
- 1999년 2월 강제불임의 법적 근거가 되었던 모자보건법 강제불임 조치 명령을 가능하게 했던 제9조가 폐지되고 강제불임이 시행된 경우는 없다고 했지만, 같은 해 ‘장애인 불법 강제 불임수술 실태 보고서’가 발표되고 “1983년부터 1998년까지 전국 8개 정신지체장애인 시설에서 지적장애인 75명(여성 27명, 남성 48명)이 불임수술을 받았으며, 이 중 여성 26명, 남성 40은 강제로 수술을 받은 사실이 알려짐

* 출처: UN CRPD NGO연대, 한국DPI(2019).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초청 장애인권리협약 민간보고서 공청회.

3) 7조: 장애 아동

협약 12조는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 있어 법 앞의 평등을 보호하는 반면, 협약 7조는 아동의 발달 역량을 인정하며 “장애 아동과 관련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2항)되어야 하고 “아동의 시각이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마땅히 중요시”(3항)되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12조의 준수를 위하여, 당사국은 장애 아동의 의지와 선호가 다른 아동과 동등하게 존중될 수 있도록 반드시 자국의 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슬로베니아, ‘연장된 부모의 권리’ 폐지 요구

민간 슬로베니아에서는 발달장애인 등이 성인이 되어도 일정 연령 이하로 보는 제도가 있어 슬로베니아 활동가들은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 우리는 특히 18세 이상 성인의 법적 무능력과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강조하고자 함. ‘연장된 부모의 권리(Prolonged parental rights)’는 대부분의 지적장애 또는 복합 장애를 가진 장애아동이 있는 부모에게 부여 되고 있는 상황임. 이 권리는 장애인을 15세의 법적 권리를 가진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경우에 따라 법원은 개인의 법적 지위가 15세 미만 아동의 지위와 동일한 것으로 결정도 가능함. 그렇게 되면 당사자의 권리는 평생 동안 부모에게 양도됨. 장애 인권 운동 활동가들은 수년 간 이 제도를 제거해야 함을 요구하고 있음

출처: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from Slovenia(2018). Shadow report of the group of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from Slovenia on implementation of CRPD in Slovenia. UN 조약기구 DB (<https://www.ohchr.org/EN/HRBodies/CRPD/Pages/CRPDIndex.aspx>).

4) 9조: 접근성

12조에 제시된 권리는 접근성과 관련한 국가 의무(9조)와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 장애인의 자립적 생활 및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의 완전한 참여를 위해서는 법 앞에서 평등하게 인정받을 권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9조는 대중에게 개방 또는 제공되는 시설 또는 서비스에의 장벽을 밝히고 제거할 것을 요구한다. 정보와 의사소통의 접근성 부족과 서비스의 접근 불가함은 현실적으로 일부 장애인에게 법적 능력 실현의 장벽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당사국은 반드시 법적 능력의 행사를 위한 절차 일체와 그에 따르는 모든 정보 및 의사소통을 완전히 접근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 당사국은 법적 능력의 권리와 접근성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하여 반드시 자국의 법과 관행을 검토하여야 한다.



5) 13조: 사법에 대한 접근

당사국은 모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사법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법적 능력의 권리의 인정은 여러 측면에서 사법에 대한 접근에 필수적이다.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권리와 의무의 이행을 추구하기 위하여 법원과 재판소에서 평등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법 앞의 인간으로 인정되어야만 한다. 또한 당사국은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법적 대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는 여러 사법권에서 문제로 밝혀진 바 있는 부분이며, 법적 능력의 권리에 방해로 경험한 사람이 스스로 혹은 법적 대리를 통하여 그러한 방해에 이의를 제기하고 법원에서 자신의 권리를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보장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해결되어야만 한다. 장애인은 사법 체계 내의 변호인, 판사, 증인, 배심원 등의 주요 역할에서 배제된 경우가 많았다.

경찰관, 사회복지사, 응급요원 등은 반드시 장애인을 법 앞에 완전한 인간으로 인정하고 비장애인을 대할 때와 마찬가지로 장애인의 항의와 진술을 동등하게 중요시하도록 교육을 받아야만 한다. 여기에는 중요 직업군에 대한 훈련 및 인식개선 교육이 수반된다. 장애인은 또한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증언할 법적 능력을 인정받아야 한다. 협약 12조는 사법적·행정적, 기타 법적 절차에 있어 증언할 능력을 포함한 법적 능력의 행사에 필요한 지원을 보장하고 있다. 이 지원은 다양한 소통 방법의 인정, 특정 상황의 경우 동영상을 통한 증언의 허용, 절차적 협의, 전문 수화통역사의 제공, 기타 보조 방법을 포함하여 여러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사법부 또한 장애인의 법적 지위와 법적 작용을 포함한 장애인의 법적 능력을 존중해야 할 의무에 대해 인식하도록 교육을 받아야 한다.

관련 종사자의 인식 부재, 교육 필요

민간 몇몇 국가에서는 법적능력 및 후견제도와 관련한 종사자들이 협약 제12조나 장애인의 권리 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피후견인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음을 우려하였음. 다음은 스페인 장애인단체에서 보고한 내용임

- 법적 능력이 제한된 사람들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는 없지만 법적 능력 박탈이 얼마나 빈번히 이뤄지고 있는지는 정부가 보고한 “법적능력상실 전문법원(Courts Specialized in Legal Incapacitations)”의 증가가 명확히 드러내고 있음. 사실 CRPD, 특히 제12조에 대한 변호사, 판사, 검사 등 법조인의 무지가 너무 커서, 그들이 “법적 무능력에 대한 요구가 너무 많

아서, 우리가 미처 다 처리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법적능력상실 전문법원”의 증가를 기뻐했다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음. 이렇듯 후견 재단 및 정신건강 관리 전문가의 제12조에 대한 이해 부족은 매우 우려스러운 수준임

다음은 뉴질랜드 장애인단체에서 보고한 내용임

- 장애인과 옹호자들은 PPPR법 절차에 관여하는 많은 의사, 변호사, 판사가 장애인의 능력에 대한 적절한 사정도 없이, 장애인의 의사결정 능력을 이해하지 못하고 의사결정을 내리거나 의사소통을 하는 일이 불가능 하다고 간주함
- 장애인을 대리해야 하는 지정 변호사는 장애인과 의사소통하는 훈련을 받지 않음. 그 결과 장애인의 능력 수준을 결정하거나 후견인 선임에 대한 장애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함
- 장애구성원을 둔 가족은 자녀가 성인이 되면 근로소득을 비롯한 재산 관리에 대해 정부로부터 PPPR법에 따른 후견인 선임을 권유 받는 상황이 많다는 것이 보고됨. 가족들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에 대해 충분히 고지 받지 못하고 대부분의 신청서를 접수하는 변호사들도 PPPR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않고 있음

* 출처: ActivaMent - Hierbabuena: Coalition of self-governed entities by persons with psychosocial disability (2019). Alternative Report on Spain for the 21st Session of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specific to the First Person Collective; ex-users, users and survivors of psychiatry (Psychosocial Disability). UN 조약기구 DB (<https://www.ohchr.org/EN/HRBodies/CRPD/Pages/CRPDIndex.aspx>). Disability Community of Auckland(2014). Independent Review. UN 조약기구 DB (<https://www.ohchr.org/EN/HRBodies/CRPD/Pages/CRPDIndex.aspx>).

6) 14조, 25조: 자유, 안전, 동의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장애인의 법적 능력을 존중하는 일에는 장애인 개인의 자유와 안전의 권리를 존중하는 일이 포함된다. 장애인의 법적 능력의 부정 및 장애인의 동의 없이 또는 대리 의사결정자의 동의에 따라 장애인의 의지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시설 구금은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는 문제이다. 이 관행은 임의의 자유 박탈에 해당하며, 협약 12조 및 14조에 위배된다. 당사국은 이러한 관행을 반드시 금지하고, 장애인이 구체적인 동의 없이 거주 장소에 배치된 사례를 점검할 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한다.

달성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건강을 누릴 권리(25조)에는 고지에 입각한 자유로운 동의를 바탕으로 한 의료 서비스를 누릴 권리가 포함된다. 당사국은 모든 보건·의료 전문가(정신과 전문가 포함)가 모든 치료에 앞서 장애인에게 고지에 입각한 자유로운 동의를 얻도록 요구할 의무가 있다. 다른 사람과 평등한 법적 능력의 권리에 맞추어, 당사국은 대리 의사결정자가 장애인을 대신하여 동의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할 의무가 있다. 모든 보건·의료계 종사자들은 장애인이 직접 참여하는



적절한 상의 과정을 보장해야 한다. 더불어 그들은 활동보조인 또는 지원자가 장애인의 결정을 대신하거나 장애인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7) 15조, 16조, 17조: 개인의 고유성의 존중 및 고문·폭력·착취·학대로부터의 자유

위원회가 여러 최종견해에서 명시하였듯, 정신과 및 기타 보건·의료 전문가에 의한 강제 치료는 법 앞에서 평등하게 인정받을 권리에 대한 침해이며, 개인의 고유성의 권리(17조), 고문으로부터의 자유(15조), 폭력·착취·학대로부터의 자유(16조)에 대한 위반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관행은 개인의 의학적 치료를 선택할 법적 능력을 부정하는 것이고, 따라서 협약 12조 위반이다. 당사국은 위기상황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장애인의 의사결정 법적 능력을 반드시 존중해야 하고, 서비스의 선택지에 관한 정확하고 접근 가능한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비의료적 접근법도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해야 하고, 개별적인 사적 지원에도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당사국은 정신의학 및 기타 의학적 치료에 관련한 결정을 위한 지원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강제 치료는 특히 심리사회적, 지적, 기타 인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문제가 된다. 당사국은 강제 치료를 허용하거나 행하는 정책과 법률 규정을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 강제 치료는 효과가 없다는 실증적 증거들이 나오고 또 정신의료 시스템 이용자들이 강제 치료의 결과로 심각한 고통 및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 치료는 전 세계의 정신보건법에서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는 위반 행위이다. 위원회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의 고유성과 관련한 결정은 고지에 입각한 당사자의 자유로운 동의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당사국에 권고한다.

신체의 안전과 자유(14조), 의료 조치에서의 동의 자격 박탈(15조, 25조), 학대와 고문(16조)

민간 스페인 당사자 단체는 정신질환으로 법적 능력을 박탈당해 병원에 강제로 입원, 폭행, 고문, 비인간적 의료 처치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보고하였음

- 법적능력의 제한은 실제로 삶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주거나 기본적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어서, 많은 사람들은 생계유지에 필요한 주거나 연금을 받기 위해 강제적으로 법적 능력의 제한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음

- 심리사회장애인이 정신건강상의 이유로 정서적 위기 상황을 겪을 때, 법적 능력 상실을 결정하는 사법적 권력은 비자의 입원과 비자의 치료를 이행하는 장치로 작용하며, 폭행, 고문, 굴욕적이고 비인간적인 처치를 정당화함

* 출처: ActivaMent - Hierbabuena: Coalition of self-governed entities by persons with psychosocial disability(2019). Alternative Report on Spain for the 21st Session of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specific to the First Person Collective: ex-users, users and survivors of psychiatry (Psychosocial Disability). UN 조약기구 DB
(<https://www.ohchr.org/EN/HRBodies/CRPD/Pages/CRPDIndex.aspx>).

8) 18조: 국적

장애인은 어디서든 법 앞의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의 일부로서, 이름 및 출생 등록을 가질 권리를 지닌다(18조 2항). 당사국은 장애 아동의 출생 등록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이 권리는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7조**에 규정되어 있지만, 장애 아동은 다른 아동과 비교하여 등록되지 않는 비율이 불균형하게 높다. 이는 장애 아동의 시민권을 부정할 뿐 아니라 의료 서비스와 교육에의 접근 또한 부정하는 행위이며, 장애 아동의 사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존재가 공식적으로 기록된 바 없으므로 그 사망에 대한 책임도 없을 수 있다.

관련 협약 등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아동은 특별한 보호와 원조가 필요한 대상임에 따라 협약에서는 당사국의 보호의무 및 이를 위한 조치사항, 그리고 아동이 누릴 수 있는 권리 및 자유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아동권리위원회의 설립과 운영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아동권리협약 제7조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출생 시부터 성명권과 국적 취득권을 가지며, 가능한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하여 양육 받을 권리를 가짐에 따라 당사국은 이러한 권리가 실행되도록 보장하여야 함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사리분별력이 없고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사람이 없는 정신장애인' 입국 금지

민간 대한민국 장애인단체는 제18조(이주 및 국적의 자유)와 관련하여 정부가 「출입국관리법」에서 사리분별력이 없고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사람이 없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입국을 금지하고 있음을 보고하였음. 이는 이주 자유의 권리를 박탈함으로써 장애를 이유로 당사자의 의사결정을 제약하는 조치임

- 「출입국관리법」제11조(입국의 금지 등) 제1항 제5호는 사리 분별력이 없고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사람이 없는 정신장애인 등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은 입국을 금지할 수 있음. 그러나 조항은 현지 조사가관이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상황이나 사람마다 바뀔 수 있는 부당한 차별의 소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한 법적 보호 조치가 필요함. 입국의 금지를 판단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을 만들어야 하며 입국금지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간단하더라도 법적인 절차를 만들어야 함

관련하여 장애인단체는 정신장애를 이유로 입국이 금지 되지 않도록 명확하고 정확한 법적 기준을 개발할 것을 권고하였음

* 출처: UN CRPD NGO연대, 한국DPI(2019). 유엔장애인권리위원 초청 장애인권리협약 민간보고서 공청회.

9) 19조: 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 완전통합

12조에 규정된 권리를 완전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법적 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자신의 의지와 선호를 개발하고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19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자신의 일상을 선택하고 통제할 기회를 반드시 가져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지역사회 내에서 생활할 권리(19조)에 비추어 12조 3항을 해석하면, 법적 능력 행사에서의 지원은 반드시 지역사회 기반 접근법을 통해 제공되어야 한다. 당사국은 다양한 지원 방법에 관한 인식 제고를 포함하여 법적 능력 행사에 어떤 종류의 지원이 필요한지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를 자산이자 협력체로 인정해야 한다. 당사국은 장애인의 사회 연결망 및 자연 발생하는 지역사회 지원 체계(친구, 가족, 학교 등)를 지원 의사결정의 핵심으로 인정해야 한다. 이는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강조하는 협약의 내용과 일치한다.

거주시설에의 장애인 분리는 협약에서 보장하는 여러 권리를 광범위하게 그리고 잘 드러나지 않게 침해하는 문제로 남아 있다. 이런 문제는 거주시설 입소를 다른 사람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광범위하게 퍼진 장애인에 대한 법적 능력 부정

에 의해 더욱 악화되고 있다. 시설 관리자가 시설 거주민의 법적 능력을 부여받는 경우도 흔하다. 이 경우, 개인의 모든 힘과 통제권이 시설에 넘어가게 된다. 협약을 준수하고 장애인의 인권을 존중하려면 탈시설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모든 장애인의 법적 능력이 회복되어 장애인이 거주지 및 동거인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19조). 거주지 및 동거인의 선택 결과에 따라 법적 능력 행사를 위한 지원에의 접근 권리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10) 22조: 사생활

대리 의사결정 제도는 협약 12조와 양립 불가할뿐더러, 대리 의사결정자가 광범위한 개인 정보 및 당사자의 기타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획득한다는 점에서 장애인의 사생활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당사국은 지원 의사결정 체계 수립에 있어 법적 능력 행사를 위한 지원 제공자가 장애인의 사생활 권리를 완전히 존중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11) 29조: 정치적 참여

법적 능력의 부정 또는 제한은 특정 장애인의 정치적 참여, 특히 투표권을 부정하는 데 사용되어 왔다. 삶의 모든 측면에서 평등한 법적 능력의 인정을 완전히 실현하려면, 공공 및 정치적 생활에서 장애인의 법적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29조). 이는 개인의 의사결정 능력이 투표권, 선거 피선거권, 배심원 참여 권리를 포함한 정치적 권리 행사에서 장애인을 배제하는 일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당사국은 장애인이 비밀 투표에서 선택을 위한 지원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및 차별 없이 모든 선거와 국민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고 향상시킬 의무가 있다. 더 나아가 위원회는 장애인에게 필요한 경우 법적 능력 수행을 위한 적절한 편의제공과 지원을 통해 선거에 출마하고 효과적으로 직책을 맡아 정부의 모든 직급에서 공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것을 당사국에 권고한다.



비밀투표가 불가능한 현 제도

민간 스웨덴 장애인단체는 투표소 접근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많은 경우 장애인이 비밀투표를 할 권리를 박탈당한다고 보고하였음

- 읽거나 쓰기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은 비밀투표를 할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음. 시각장애인에
게는 점자투표지, 확대 투표지 등이 제공되어 비밀투표를 가능하게 함. 그러나 현재의 시스
템에서 읽거나 쓰기에 어려움을 느끼는 장애인은 타인의 도움 없이는 선호에 따라 비밀이 보
장된 투표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임
- 선거관리 당국은 장애인단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만족할만한 대안을 마련해야 함

* 출처: Swedish Disability Federation(2011). Swedish disability movement's alternative report to the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UN 조약기구 DB (<https://www.ohchr.org/EN/HRBodies/CRPD/Pages/CRPDIndex.aspx>).

5. 국가 수준에서의 이행

앞서 설명한 규범적 내용과 의무에 비추어, 당사국은 장애인권리협약 12조의 완
전한 이행을 위해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한다.

(a) 장애인을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삶의 모든 측면에서 법인격과 법적 능력을
갖춘 인간으로 인정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리 의사결정 제도 및 법적 능력을 부정
하고 의도적이든 또는 결과적이든 장애인을 차별하는 메커니즘의 폐지가 필요하다.
당사국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법적 능력의 권리를 보호하는 성문법 조항을 마
련할 것이 권고된다.

(b) 장애인이 법적 능력의 수행에 있어 광범위한 지원을 이용할 기회를 마련하
고, 인정하며, 제공하여야 한다. 이 지원을 위한 안전장치는 장애인의 권리·의지·
선호에 대한 존중을 전제해야 한다. 지원은 협약 12조 3항을 준수하기 위한 당사국
의 의무와 관련된 29번 문단에서 제시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c) 12조의 발효를 위한 법률, 정책, 기타 의사결정 과정의 개발과 이행에 있어
장애인 대표 단체를 통하여 장애 아동을 포함한 장애인과 긴밀히 협의하고 이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킨다.

위원회는 장애인의 법적 능력의 평등한 인정 및 법적 능력 지원의 권리를 존중하
는 모범적 관행의 연구와 개발에 착수하거나 그에 재원을 제공할 것을 당사국에
권장한다.

에스토니아, 후견제도에 대한 연구 및 실태조사 필요성

민간 '에스토니아 장애인 챔버(Estonian Chamber of Disabled People)'는 민간보고서에서 정부가 지원의사결정제도 도입을 위한 기본적인 연구 조사 등도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보고하였음

- 법적 능력의 박탈이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해치고 있음. 법적 후견인은 종종 피후견인과 관련한 모든 결정을 내리도록 지정되기도 함. 후견을 수행할 때는 피후견인의 이익과 희망이 고려되어야 함에도, 일상적인 모든 결정, 서비스 제공 등의 모든 것이 피후견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 지원의사결정에 대한 법적 조항은 에스토니아에서 사용할 수 없음. 지원의사결정이 어느 정도까지 사용될 수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연구 분석 등은 수행되지 않음. 법적능력에 대한 통계는 훨씬 더 상세해야 하며, 여기에는 여러 연도(예:2017~2019), 후견인의 성격(부분, 전체), 법적 후견인에 대한 것, 후견인이 설정된 기간 등이 제시되어야 함

한편 독일에서는 법무부 차원의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피후견인 관점에서의 고려가 부족한 상황임이 보고됨

- 2017년 4월 연방 법무부의 연구 “법적 후견제도의 질(Quality of legal guardianship)”은 후견법 개정에 중요한 기반을 형성할 것으로 보임. 연구조사에는 많은 중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음. 그러나 피후견인에 대한 관점 고려가 너무 적어 우려스러움

캐나다 역시 관련 전국 단위 조사가 미비함을 시사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였음

- 캐나다의 전국 설문조사에는 사람들이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묻는 질문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는 장애인의 의사결정에 대한 데이터(수치 및 정보)가 거의 없음을 의미함

* 출처: Estonian Chamber of Disabled People(2020). Civil society comments to the state response to the List of issues in relation to the initial report of Estonia. UN 조약기구 DB (<https://www.ohchr.org/EN/HRBodies/CRPD/Pages/CRPDIndex.aspx>). Alliance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s(2018). Update for the 2nd Federal review of Germany for the UN committee for the CRPD. UN 조약기구 DB (<https://www.ohchr.org/EN/HRBodies/CRPD/Pages/CRPDIndex.aspx>). Canada Community Organizations and Organizat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2019), Submission of Canadian Civil Society Organizations to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UN 조약기구 DB (<https://www.ohchr.org/EN/HRBodies/CRPD/Pages/CRPDIndex.aspx>).

당사국은 공식적·비공식적 대리 의사결정의 퇴치를 위한 효과적 메커니즘을 개발할 것이 권고된다. 이를 위하여 위원회는 장애인이 인생에 있어 유의미한 선택을 하고 인격을 개발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며 이들의 법적 능력 행사를 지원할 것을 당사국에 촉구한다. 여기에는 사회 연결망 구축의 기회,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근로하여 생계를 유지할 기회, 지역사회 내 다양한 거주지의 선택, 모든 수



준의 교육에 있어서의 완전한 통합 등이 포함되지만, 이 예들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법적 능력 박탈, 후견개시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필요

민간 뉴질랜드와 룩셈부르크 장애인단체는 제 12조 이행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국가의 의무로 강조하는 내용을 보고하였음. 다음은 '뉴질랜드 장애인연대(New Zealand Disabled Persons Assembly)'의 보고 내용임

- 장애인단체로 이뤄진 '협약 모니터링 연대(Convention Coalition monitoring group)'는 2012년 뉴질랜드 정부가 협약 제12조가 권고하는 지원의사결정 접근에 부합하지 않는 대체 의사결정의 빈도가 가장 높다는 사실을 보고하였음. 이행 과정과 적절한 안전장치 보장을 위한 모니터링의 결여가 우려되고 있음
- '정신보건(강제 진료 및 치료)법 (Mental Health (Compulsory Assessment and Treatment) Act)(1992)'에 따라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강제 치료 남용의 대상이 된다는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었음. 이법은 인권 원칙이 결여되어 CRPD에 부합하게 개정 되도록 비판 받고 있음. 최근 5년간 강제치료 피해자 수가 상당히 증가하였으며 마오리족 주민들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음. 장애인들은 정신건강구급시설에서 격리를 철폐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또한 지적/학습장애와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의 구급 및 치료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

한편, 룩셈부르크 장애인단체도 모니터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으며, 교육 제공 모니터링 등 진행할 수 있는 메커니즘 수립을 강조함

- 장애인의 부모와 후견인들은 2015년 연례 보고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시인하였고, 해당 후견 심판관들은 이러한 후견인들의 의무 불이행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바 있음. 후견인의 역할을 하는 친척이나 다른 개인들도 연락처나 법적 질문에 대한 대답을 회피한 채 보고를 진행하였음. 이미 존재하는 후견기관은 전문 후견인으로서의 경험 덕분에 이러한 상황에서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음. 또한 추가 주 정부 예산과 더 많은 인력 투입을 통해 이 단체가 정보 제공 플랫폼을 구축하거나 후견인 및 지원의사결정제도에 대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음

출처: Disabled Persons Assembly(2014). New Zealand DPOs submission on the list of issues and questions for the New Zealand Government. UN 조약기구 DB (<https://www.ohchr.org/EN/HRBodies/CRPD/Pages/CRPDIndex.aspx>).
Nëmme Mat Eis and other Luxembourg DPOs(2016). Alternative Report on Implementa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UN 조약기구 DB (<https://www.ohchr.org/EN/HRBodies/CRPD/Pages/CRPDIndex.aspx>).

국가 수준에서의 이행

학계 각국은 협약에 대한 해석 권한을 가지고 있고 협약의 내용은 각 나라의 현실에 맞추어 이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위 권고와 관련된 위원회의 해석이 각국 정부를 법적으로 구속하는 것은 아님. 그러나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협약의 규정(제34조)에 따라 각국의 대표자에 의하여 선출된 권위 있는 전문가위원회로서 그 해석과 그에 기초한 권고는 존중되지 않으면 안 됨. 특히 각국은 협약 제35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위원회에 국가보고서를 제출하

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협약의 책임 있는 당사국으로서 위원회의 해석과 권고를 무시할 수는 없음. 대부분의 협약 당사국들이 위원회의 해석을 존중하여 의사결정지원 원칙의 제도적 수용을 서두르고 있는 까닭임. 그러므로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세계적 국제인권조약의 국내법적 이행이라는 관점에서 성년후견제도의 의사결정지원제도로의 전환은 당면의 과제임. 뿐만 아니라 법적능력의 행사가 모든 권리행사의 출발점으로서 의사결정능력장애인이 비장애인인과 마찬가지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전제라는 점에서 의사결정지원의 헌법적 정당성도 인정할 수 있음(헌법 제10조). 따라서 공공후견지원체계의 구축을 통한 공공후견서비스의 발전에 있어서는 협약 제12조와의 정합성(整合性)을 고려하여 의사결정지원원칙을 어떻게 실현해 갈 것인가 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

* 출처: 박인환 (2021). 공공후견 및 의사결정지원 촉진을 위한 입법과제. 법조, 70(3): 43-86



IV

일반논평 2호: 접근성(협약 9조)

장애인권리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제11차 회기: 2014.3.31.~2014.4.11. (배포: 2014.5.22.)

▶ 일반논평 제2호는 접근성에 대한 중요성과 접근성을 위한 당사국의 역할 및 의무, 협약 제9조와 협약의 기타 권리들과의 연계성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1. 서론

접근성은 장애인의 자립적 생활과 완전하고 평등한 사회 참여의 전제조건이다. 물리적 환경, 교통, 정보통신 기술과 시스템을 포함한 정보와 통신, 대중에게 개방 또는 제공되는 기타 시설과 서비스의 접근이 없다면 장애인은 각자의 사회에 참여할 평등한 기회를 갖지 못할 것이다. 접근성이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의 바탕이 되는 원칙 중 하나인 것은 우연이 아니다(3(f)조). 역사적으로 여러 장애인 운동에서는 물리적 환경 및 대중교통에의 장애인의 접근이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13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12조**에서 보장하는 이동의 자유를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주장해 왔다. 마찬가지로 정보와 통신에의 접근은 세계인권선언 19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조 2항에서 보장하는,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간주된다.

관련 협약 등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13조

모든 사람은 자국 내에서 이동 및 거주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자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나라를 떠날 권리와 자국으로 돌아올 권리를 가짐

* 출처: 국가인권위원회(<https://www.humanrights.go.kr>)

세계인권선언 19조

모든 사람은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권리는 간섭 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와 국경에 관계없이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도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으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함

* 출처: 국가인권위원회(<https://www.humanrights.go.kr>)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12조

합법적으로 어느 국가의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 영역 내에서 이동의 자유 및 거주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자국을 포함한 어떠한 나라로부터도 자유로이 퇴거할 수 있음

* 출처: 국가인권위원회(<https://www.humanrights.go.kr>)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조 2항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이 권리는 구두, 서명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스스로 선택하는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함

* 출처: 국가인권위원회(<https://www.humanrights.go.kr>)

접근성의 의미

민간 “접근성”이라는 용어는 장애인의 다양한 일상생활의 영역에서 접근의 능력을 의미함. 접근성은 장애인들의 독립생활과 평등한 사회참여의 기본 전제가 됨. 접근성은 대체로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는데, ① 물리적 장벽제거, ② 상호적 정보통신기술 (Interactive Communication Technology, ICT)을 통한 의사소통의 장벽제거, ③ 사고방식, 문화적 장벽의 제거로 경제, 사회 활동 참여임

* 출처: 한국장애인개발원 (2019). 국제장애인 권리 및 입법의 발달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심층적 논의와 분석-

접근성과 이동권

학계 접근성에 대한 장애인의 권리로서의 접근권이란 장애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일반인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보다 구체적으로는 이동권, 정보접근권, 시설이용권 세 가지 권리로 세분할 수 있음.

접근권은 장애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 요인 즉, 대중교통, 정보, 의사소통 기술, 기타 지원서비스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임. 협약 제9조 제1항은 접근권에 해당하는 세 가지 하위 개념 중 시설이용권과 정보접근권은 모두 규정하고 있으나, 이동권은 도로와 대중교통만을 언급하고 제20조에 별도의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접근권의 하위 개념인 이동권을 별도의 조항으로 분리한 것은 협약 제정을 위한 실무그룹회의에서 한국이 제안하여 이루어진 것임. 이동권은 장애인이 환경에 접근하는데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바, 환경에



접근가능하다는 것과 장애인이 이동가능하다는 것은 별개의 사항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논리임. 다시 말해 이동은 개인적인 것이고, 접근은 환경적인 것을 의미한다는 논리임. 많은 제안과 논의들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총체적인 접근성은 제9조에서 규정하고, 이 중 개인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이동권은 제20조의 별도 조항으로 구분되었음. 제도적 측면에서 보자면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도로와 대중교통은 접근권으로(협약 제9조 제1항 (가)호), 개인의 이동을 보조하는 활동보조인은 제20조 이동권으로 구분하고 있음

* 출처: 서정희 (2010). 장애인의 접근권 - 장애인권리협약과 비준당사국의 이행보고서 지침을 기준으로. 사회보장연구, 26(4): 49-75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25(c)조는 모든 시민이 일반적인 평등에 근거하여 자국의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권리를 담고 있다. 이 조항은 여러 핵심적 인권조약에 접근권이 포함되는 데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

관련 협약 등·정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25(c)조

모든 시민은 제2조에 규정하는 어떠한 차별이나 또는 불합리한 제한도 받지 아니하고 다음의 권리 및 기회를 가짐

- (a) 직접 또는 자유로이 선출한 대표자를 통하여 정치에 참여하는 것
- (b) 보통, 평등 선거권에 따라 비밀투표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선거인의 의사의 자유로운 표명을 보장하는 진정한 정기적 선거에서 투표하거나 피선되는 것
- (c) 일반적인 평등 조건하에 자국의 공무에 취임하는 것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25(c)조의 원문은 ‘To have access, on general terms of equality, to public service in his country’로, 이에 대한 법제처 국가법령센터에 공포되어 있는 공식 번역은 ‘일반적인 평등 조건 하에 자국의 공무에 취임하는 것’임. 그러나 문맥상 일반논평 2호 번역본에서 기술한 ‘일반적인 평등에 근거하여 자국의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로 해석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함

인종차별철폐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은 모든 사람에게 교통, 숙박 시설, 음식점, 카페, 극장, 공원 등 일반 대중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장소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5(f)조). 이에 따라 접근권을 하나의 권리 자체로 간주하는 국제인권법적 틀이 마련되었다. 다른 인종 또는 민족 집단의 구성원이 일반 대중에게 개방된 장소와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장벽은 편견을 가진 태도

에 따른 결과이며 또한 물리적으로 접근 가능한 장소에의 접근을 막고자 권력을 쉽게 사용한 결과임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장애인은 여전히 건물 입구의 계단, 엘리베이터 없는 다층 건물,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된 정보의 부재와 같은 기술적 장벽 및 대부분 인간이 만들어 낸 환경적 장벽에 마주하고 있다.** 건축 환경은 항상 관습뿐 아니라 사회문화적 발전과도 관련되어 있으며, 따라서 사회의 완전한 통제 아래에 있다. 이러한 인공적 장벽은 장애인이 일반 대중의 이용을 목적으로 한 장소 또는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게 막으려는 의식적인 의도보다는 정보와 기술적 지식의 부족의 결과인 경우가 많다. 장애인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정책을 도입하려면, 지속적인 교육, 인식 제고, 문화 캠페인, 소통을 통해 장애인을 향한 태도를 바꾸어 편견과 차별에 맞서 싸우는 것이 중요하다.

관련 협약 등·정부 **인종차별철폐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세계인권선언에 기반 하여 피부색, 가문, 종족의 기원에 근거를 둔 어떠한 형태의 인종차별도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인종과 상관없이 법 앞의 평등한 권리를 명시하며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인종차별철폐국제협약 제5조

제2조에 규정된 기본적 의무에 따라, 체약국은 특히 아래의 제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인종, 피부색 또는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에 구별 없이 만인의 권리를 법 앞에 평등하게 보장하고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을 금지하고 폐지할 의무를 짐

- (a) 법원 및 기타 모든 사법기관 앞에서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
- (b) 정부 관리에 의해 자행되거나 또는 개인, 집단 또는 단체에 의해 자행되거나 간에 폭행 또는 신체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가 부여하는 인간의 안전 및 보호를 받을 권리
- (c) 정치적 권리 특히 선거에 참가하는 권리, 보통·평등 선거의 기초위에서 투표하고 입후보하는 권리, 각급 공공업무의 행사는 물론 정부에 참여하는 권리 그리고 공공업무에의 평등한 접근을 할 권리
- (d) 기타의 민권 특히
 - (i) 당해 체약국 국경이내에서의 거주 이전의 자유에 대한 권리
 - (ii) 자국을 포함, 모든 국가로부터 출국하고 자국으로 귀국하는 권리
 - (iii) 국적 취득권
 - (iv) 혼인 및 배우자 선택권
 - (v) 단독 및 공공재산 소유권
 - (vi) 상속권
 - (vii)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



- (viii)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 (ix)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
- (e)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특히
 - (i) 근로, 직업 선택의 자유, 공정하고 알맞은 근로조건, 실업에 대한 보호,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정당하고 알맞은 보수 등에 대한 권리
 - (ii)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권
 - (iii) 주거에 대한 권리
 - (iv) 공중보건, 의료, 사회보장 및 사회봉사에 대한 권리
 - (v) 교육과 훈련에 대한 권리
 - (vi) 문화적 활동에의 균등 참여에 대한 권리
- (f) 운송, 호텔, 음식점, 카페, 극장 및 공원과 같은 공중이 사용하는 모든 장소 또는 시설에 접근하는 권리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국가인권위원회(<https://www.humanrights.go.kr>)

숙박시설 내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객실 설치율

민간 한국소비자원이 2020년 실시한 숙박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 안전실태조사에 따르면, 숙박시설 내 다수의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기준에 부적합하거나 미설치되어 있었음. 장애인 객실 설치 의무가 있는 조사대상 숙박시설 100개소 중 49개소(49.0%)는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객실이 단 1개도 없었고, 특히, 8개소(8.0%)는 100실 이상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개의 장애인 객실도 설치하지 않았음.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등)보다 일반숙박시설(모텔, 여관 등)이 장애인 객실 설치율이 낮아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숙소를 찾는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됨

* 출처: 한국소비자원(2020), 숙박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 안전실태조사.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인종차별철폐국제협약은 접근권을 국제인권법의 일부로서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접근성은 접근권의 사회적 측면을 장애 특성에 맞게 재확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장애인권리협약은 접근성을 주요한 근본 원칙 중 하나로 포함하고 있다. 즉, 장애인이 시민적·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효과적이고 평등하게 향유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전제조건으로 여기고 있다. 접근성은 평등과 반차별의 맥락에서 고려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회 투자 방법 중의 하나이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과제와 필수 요소로서 여겨져야 한다.

정보통신기술의 의미는 사람과 기관에 따라 다르게 이해되지만, 일반적으로는

정보·통신 장치 또는 응용 프로그램과 그 내용 일체를 포함하는 폭넓은 용어로 인식된다. 이 정의는 라디오, 텔레비전, 위성, 휴대전화, 유선 전화, 컴퓨터, 네트워크 하드웨어·소프트웨어와 같은 광범위한 접근 기술을 아우른다. 정보통신기술은 폭넓은 서비스를 촉진하고, 기존 서비스를 변화시키며, 특히 장애인과 같이 서비스 취약 인구 및 배제된 인구에 있어 정보와 지식에 대한 접근 수요를 창출하는 그 능력의 측면에서 중요성을 가진다. 2012년 두바이에서 채택된 **국제전기통신규칙(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Regulations)**은 그와 관련된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의 권고 사항을 고려하여 장애인이 정보통신 서비스에 접근할 권리를 규정하였다. 해당 조항은 여러 당사국의 **국가 입법 구조**를 강화시키는데 기반을 제공하는 기능을 할 수 있었다.

관련 협약 등 **국제전기통신규칙(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Regulations)**

국제전기통신협약(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Convention) 헌장 및 협약에 부속되어 있는 업무규칙으로, 공중에게 전기통신 업무의 제공과 운용을 위해 사용되는 기본적인 전송 수단, 과금과 요금 정산 등에 관한 일반 원칙과 규정을 정함

* 출처: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https://terms.tta.or.kr>)

국제전기통신규칙 제12조 '접근성'

민간 국제전기통신규칙 제12조 접근성(Accessibility)은 장애인들이 국제전기통신 서비스를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촉진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조항문과 해설서의 해설은 다음과 같음

- 제12조(접근성) 72. 12.1 회원국은 관련 ITU-T 권고를 고려하여, 장애인들의 국제전기통신 서비스 접근을 촉진해야 한다.
- (해설) 본 항은 WCIT-12 회의에서 신설된 조항으로 UN 장애인권리협약 제9조에 근거하여 형가리가 제안하였다. 미국은 전권회의 결의 175(노인성 장애를 포함한 장애인에 대한 전기통신/정보통신기술 접근성) 및 WTSА 결의 70(장애인에 대한 전기통신/ICT 접근 성)에서 유사한 내용을 다루고 있음을 상기시켰으며, 일본은 ITR이 국제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반 규칙이므로 특정 계층을 위한 별도 조항을 신설하기 보다는 기존의 결의 및 권고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대다수 국가들이 본 사안이 전 세계적으로 모든 회원국에 적용해야 하는 중요한 사안이고 결의 등을 통해 이행하는 것 보다 ITR과 같은 상위 문서에서 다뤄야 하는 것을 지지함에 따라 결국 신규 조항으로 신설하게 되었다.

* 출처: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미래창조과학부(2013). 국제전기통신규칙해설서(2012년 두바이).



정보통신접근성 관련 규정 확대

정부 한국은 2018년 2월에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2조의2를 개정하여 기존 ‘웹사이트’ 접근성과 품질인증에 관한 사항을 ‘웹사이트와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모바일 앱)’ 접근성으로 그 보장 범위를 확대함. 같은 법 제32조제3항에서는 장애인·고령자 등이 별도의 보조기기 없이 정보통신제품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정보통신제품이 보조기기와 호환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가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였음. 터치스크린이 장착된 가전제품이 보편화되고 있음에 따라, 산업통상자원 국가기술표준원은 가전제품 터치인터페이스의 접근성 지침(KS A 7256(2017년))을 제정하기도 하였음

* 출처: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2018).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제2,3차 병합) 심사대비 연구.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정·개정

법률 최근 우리 사회는 인공지능, 데이터, 5G 등 첨단기술의 혁신적 발전으로 초연결·초지능 기반의 4차 산업혁명 패러다임에 접어들고 있는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 「국가정보화기본법」을 2020년 6월에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하여 범국가적 추진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이 법 제46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와 제47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등)에 장애인의 정보통신접근성 및 보편적 접근성 확대를 위한 내용이 명시되었음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는 **일반논평 5호**(1994)를 통해 유엔의 ‘**장애인의 기회 평등에 관한 표준규칙**’(Standard Rules on the Equalization of Opportun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의 이행 의무를 각국에 상기시켰다.⁶⁾ 이 표준규칙은 장애인의 기회 평등을 위한 물리적 환경, 교통, 정보와 통신의 접근성이 가지는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 개념이 나타나는 5번 규칙에서는 물리적 환경에의 접근성 및 정보와 통신에의 접근성을 각국의 우선 활동 영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접근성의 중요성은 달성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을 다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의 **일반논평 14호**(2000) 12항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장애 아동의 권리를 다룬 **아동권리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의 **일반논평 9호**(2006)에서는 대중교통과 더불어 정부 건물, 상업 지구, 오락 시설을 포함한 기타 시설에의 물리적 접근성이 장애 아동의 소외와 배제에 있어 주요 요인이 되며 건강 및 교육을 포함한 서비

6) 총회(General Assembly) 결의안 48/96, 부록

스에의 접근성을 크게 훼손한다고 강조한다(12항). 이 위원회는 아동의 휴식, 여가, 놀이, 오락 활동, 문화생활, 예술의 권리를 다룬 **일반논평 17호**(2013)에서 접근성의 중요성을 다시 언급하고 있다.

관련 협약 등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일반논평 5호**

장애인은 규약에서 인정되고 있는 모든 권리를 누릴 권한이 있으며, 당사국은 규약에 특정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장애로 인한 차별이 이루어져서는 안 됨

* 출처: 국가인권위원회(<https://www.humanrights.go.kr>)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 일반논평 14호 12항

모든 형태 및 단계의 건강권은 다음의 상호 연관된 필수적인 요소(가용성, 접근성: 차별금지, 물리적 접근성, 경제적 접근성, 정보접근성, 수용성, 질)를 포함하며, 이러한 요소의 구체적인 적용은 특정 당사국의 지배적인 환경에 달려있음

* 출처: 국가인권위원회(<https://www.humanrights.go.kr>)

장애인의 기회 평등에 관한 표준규칙(Standard Rules on the Equalization of Opportun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장애인의 평등한 권리와 기회를 고취하는 표준규칙으로, 평등참여의 전제조건, 평등 참여 대상 영역, 이행 방안, 모니터링 메커니즘에 대한 22개의 규칙으로 이루어져 있음

* 출처: 세계보건기구(2012). 세계장애보고서, 한국장애인재단.
<https://www.un.org/esa/socdev/enable/dissre04.htm>

장애인의 기회 평등에 관한 표준규칙 5번 규칙

국가는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기회의 평등화 과정에서 접근성의 전반적인 중요성을 인식해야 하며, 모든 장애인에 대해 국가는 (a)물리적 환경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행동 프로그램의 도입 및 (b)정보 및 통신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함

* 출처: URL:<https://www.un.org/esa/socdev/enable/dissre04.htm>

아동권리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일반논평 9호

장애아동의 권리 이행을 위해 노력하는 당사국에 지침과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방지하고 철폐하기 위한 협약의 모든 규정 및 협약의 이행을 위한 조치 등을 설명함

* 출처: 국가인권위원회(<https://www.humanrights.go.kr>)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17호

아동권리협약 제31조에 규정 된 권리의 향유를 위해 당사국의 조치를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모든 아동은 자신의 거주지, 문화적 배경 또는 부모의 지위에 관계없이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음

* 출처: 국가인권위원회(<https://www.humanrights.go.kr>)



놀이환경으로부터 배제된 장애인

민간 국내 장애인단체가 작성한 2-3차 병합 심의 대비 민간보고서 1차 초안에 따르면 장애아동의 휴식, 여가, 놀이, 오락 활동, 문화생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조항이 전무한 상황임

- 국내의 어린이 놀이터 관련법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비롯해 「주택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영유아 보육법」, 「아동복지법」 등이 있음. 이 중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외에는 놀이터 설치에 대한 조항이 없고, 특히 장애아동의 '접근 가능한 놀이터'의 법적 근거가 없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도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공원, 아동 관련 시설로 어린이집과 아동복지시설을 포함하고 있으나, '놀이터'는 없음

이에 국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편의시설 설치 대상에 놀이터를 추가하여 장애아동도 비장애아동과 동등하게 놀이터를 이용하고 오락 활동을 즐길 권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였음. 한편 최근에는 장애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음

출처: UN CRPD NGO연대, 한국DPI(20019), 유엔장애인권리위원 초청 장애인권리협약 민간보고서 공청회.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와 세계은행(World Bank)이 수백 명의 장애 분야 전문가와 함께 최대 규모의 협의 틀을 통해 작성한 **2011년 세계장애요약 보고서(World Report on Disability Summary)**는 건축 환경, 교통 체계, 정보와 통신에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하였다(p. 10). **장애인은 접근 가능한 교통의 부재로 인해 구직의 권리, 의료 서비스의 권리와 같은 기본적 권리의 일부를 누리지 못한다.** 여러 국가에서 접근성 관련 법률의 이행률은 여전히 낮고, 장애인은 정보와 통신에의 접근이 불가능해 표현의 자유의 권리를 부정당하는 경우가 많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 서비스가 존재하는 국가에서도 대개 자격 있는 통역사의 수가 서비스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너무 적고, 통역사가 서비스 이용자에게 개인적으로 찾아가야 한다는 점 때문에 서비스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 지적 및 정신사회적 장애인과 시청각 장애인은 쉽게 읽을 수 있는 형식과 보완대체의사소통 수단의 부재로 인해 정보와 통신에 접근할 때 많은 장벽에 맞닥뜨리고 있다. 이들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편견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의 적절한 훈련의 부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관련 협약 등

세계장애요약보고서(World Report on Disability Summary)

장애에 대한 각 나라별 정책 등 장애와 관련한 포괄적 내용이 담긴 '세계장애보고서'의 요약본으로 접근성과 기회균등, 참여와 통합의 증진, 장애인의 자활과 존엄의 존중을 향상시킬 수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음

* 출처: 세계보건기구(2012). 세계장애보고서, 한국장애인재단.
WHO(2011). SUMMARY: WORLD REPORT ON DISABILITY.

오스트리아, 공공 및 사법 영역에서 수어통역 지원 부족과 수어통역사 훈련 부족

민간 오스트리아 장애인위원회는 오스트리아의 수어통역을 통한 접근성 구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 오스트리아에는 사법시스템, 형사절차 등에서 필요한 통역서비스와 관련하여 일관된 기준이 존재하지 않음. 수어통역에 대해 국가적으로 적용 가능한 규정이 없으며 이에 대한 법적 자격도 마찬가지임. 필요한 보조 기술에 대한 비용 보상 역시 부족한 실정임.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 공증 과정에서 수어통역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되지 않음. 법정에서는 공인 수어통역사가 제공되기는 하나, 통역의 수준은 보장되지 않는 상황임
- 동시에 청각장애인은 많은 공공기관이나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음. 혹은 제한된 수단을 통해서나 상당한 추가적인 노력을 들인 이후에나 접근이 가능함. 오스트리아에서는 수어통역사가 최소 600명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실제 수어통역사의 수는 대략 100명임. 현재 수어통역사 교육은 Linz, Graz, Vienna에서만 진행 되고 있으며, 서오스트리아 지역에서는 진행되지 않고 있음. 많은 경우, 충분한 훈련을 받지 못한 의사소통 지원인이 소통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임

관련하여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수어통역사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부에서 취하고 있는 조치를 '보고 전 질의목록(LoIPR)'에 추가해 줄 것을 요구함

* 출처: Austrian Disability Council (2018). 오스트리아 유엔장애인권리협약 LoIPR 대비 민간보고. UN 조약기구 DB (<https://www.ohchr.org/EN/HRBodies/CRPD/Pages/CRPDIndex.aspx>).

장애인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 실태

기사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간 병의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주된 이유로 '의료기관까지 이동 불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9.8%로 가장 높았음. 이는 2017년 조사의 25.0%보다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교통수단 이용 시 어려움을 느끼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은 39.8%로 2017년 조사의 36.7%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다만,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환경이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음을 고려해야 함

* 출처: 보건복지부 (2021),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4월 20일자).



접근성 관련 국내법

- 학계** 1.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가장 상위법이라 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법에 일반원칙 차원에서 장애인의 접근권을 명시하고 있음. 장애인복지법은 정보접근권(제22조), 편의시설(제23조), 주택의 개보수비용 지원(제27조 제2항)을 규정하고 있음
2. 시설에 대한 접근권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에관한법률’에 규정되어 있음. 동 법에 규정된 편의시설 의무설치 시설은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기타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제7조)임
3. 협약에서 이동권으로 분류하지 않고 접근권으로 분류한 도로 및 대중교통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으로 법제화되어 있음. 동법은 제3조에 장애인 등 교통약자는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에 대해 규정하고, 이동편의시설로 동법 제9조에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를 규정하고 있음
4. 시설과 이동편의시설 외에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을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법제화하였음. 동법은 장애인이 삶의 각 영역에서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배제되거나 분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용에서 작업장 편의시설제공이나 근무조정 등 정당한 편의제공(제11조), 교육에서 편의시설 제공이나 해당 서비스제공(제14조),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시에 필요한 조치(제18조, 제19조), 정보접근성 보장(제20조, 제21조, 제23조),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에서의 조치(제26조) 등을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지 않는 행위를 장애차별로 규정하고 있음
5. 각 생활영역에서의 접근성 관련 규정들은 각 해당 영역을 규정하고 있는 개별법에서 구체화되고 있음. 교육 영역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고용 및 재활 영역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그 밖의 정보접근 영역은 ‘방송법’, ‘도서관법’, ‘저작권법’,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구체화되고 있음

* 출처: 서정희 (2010). 장애인의 접근권 - 장애인권리협약과 비준당사국의 이행보고서 지침을 기준으로. 사회보장연구, 26(4): 49-75

국제전기통신연합이 ‘통합적인 정보통신기술을 위한 글로벌 이니셔티브’(Global Initiative for Inclusiv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와 협력하여 2011년 발표한 보고서 ‘텔레비전을 접근 가능하게 만들기’(Making Television Accessible)에 따르면, 10억 명의 장애 인구 중 상당 비율이 텔레비전의 시청각 콘텐츠를 감상할 수 없다. 이는 내용, 정보뿐만 아니라 그러한 서비스에 접근하는 데 필요한 장치에의 접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관련 협약 등 텔레비전을 접근 가능하게 만들기(Making Television Accessible)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시청각콘텐츠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보고서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TV를 사용하는 것의 어려움과 불가능한 이유, 그리고 TV를 비롯한 시청각 콘텐츠의 접근을 가능하게하기 위한 조치들을 담고 있음

* 출처: ITU·G3ict(2011). Making TELEVISION ACCESSIBLE Report

슬로베니아, 방송 접근성에 대한 현황

민간 슬로베니아 민간단체는 2018년 병행보고서를 통해 방송에 대한 접근성 구축 문제를 보고하였음

- 슬로베니아는 2010년 ‘장애인 기회균등 법(Act on Equalisation of Opportun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을 채택하였음. 이 법률은 2015년까지 정보, 통신기술, 재화와 서비스, 방송서비스 접근성 구축을 명시하고 있음
- 국가통신협의회는 방송 서비스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2014년과 2015년에 정부와 여러 부처에 규제 기관에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였음. 그 후 정부부처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공영방송사는 프로그램 접근성에 대한 수치조차 제공하지 않음. 또한 방송 서비스의 접근성을 촉구하는 시민단체를 비판하기도 함. 방송통신심의회는 정보, 통신, 방송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여러 정부부처와 규제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으나 불행히도 이러한 협력체계는 구축되지 않으며, 입법 변경에 대한 책임을 맡은 부처도 없는 실정임

* 출처: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from Slovenia(2018). Shadow report of the group of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from Slovenia on implementation of CRPD in Slovenia. UN 조약기구 DB (<https://www.ohchr.org/EN/HRBodies/CRPD/Pages/CRPDIndex.aspx>).

접근성이 주류 정보통신기술계에서 처음 인식된 것은 2003년 제네바에서 열린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Information Society)** 1기에서였다. 장애계가 소개하고 주도한 이 개념은 해당 회의에서 채택된 ‘원칙 선언’(Declaration of Principles)에 포함되었다. ‘원칙 선언’ 25조에 따르면, 경제·사회·정치·보건·문화·교육·과학 활동을 위한 정보에의 평등한 접근을 막는 장벽을 제거하고 또한 유니버설 디자인과 보조 기술의 사용 등을 통하여 공공 주류 정보에의 접근을 촉진함으로써, 개발을 위한 국제적 지식은 더욱 강화될 수 있고 공유도 활성화될 수 있다.⁷⁾

7) 2003년 제네바에서 개최된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 1기에서 채택된 ‘원칙 선언: 정보사회 건설: 새천년의 국제적 과제’(Declaration of Principles: Building the Information Society: a global challenge in the new Millennium) (WSIS-03/GENEVA/DOC/4-E)의 25항 참조

**관련 협약 등****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Information Society)**

UN주관 하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 추진한 정상회의 중 하나로 각 국 정부 및 민간영역, 시민사회 정상들이 한데 모여 인권과 복지에 기초한 ICT발전과 활용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출처: 임정근(2010). 정보사회를 위한 새 천년 정상회의(World Summit on Information Society: WSIS)의 의제와 성과에 관한 비판적 고찰. OUGHTOPIA 25(3), pp189-218.

장애인권리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는 본 일 반논평 초안 작성에 앞서 당사국과 각국의 최초 보고서를 논의하는 10차례의 대화 과정에서 매번 접근성을 주요 문제 중 하나로 다루었다. 당사국 보고서에 관한 최종견해에는 모두 접근성과 관련된 권고 사항이 포함되었다. 공통적인 과제로 접근 성 표준 및 관련 법규의 실질적 이행을 보장할 적절한 모니터링 장치가 부족하다는 점이 제시되었다. 어떤 당사국에서는 효과적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기술 지식과 인 적·물질적 자원이 부족한 지역 당국이 모니터링을 책임지고 있기도 하였다. 그리 고 관련 당사자들에게 제공되는 교육이 부족하고, 또한 물리적 환경, 교통, 정보와 통신에의 접근을 보장하는 과정에서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의 참여가 충분하지 못 했다는 점도 공통적으로 지적된 과제였다.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선택의정서에 따른 개인 진정에 대한 결정을 통해서도 접근 성의 문제를 다루었다. ‘뉴스티와 타카크스 대 헝가리’(Nyusti and Takács v. Hungary)(통신문 1/2010호) 사례에서 위원회는 장애인권리협약 9조에 따라 대중에 게 개방 또는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는 반드시 장애인에게도 접근 가능해야 한다고 보았다. 당사국 헝가리에게는 시각장애인이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하였다. 위원회는 특히 당사국이 “시각 및 기타 손상을 가진 사람 들을 위해 민간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은행 서비스의 접근성에 대한 최소 기준”을 수립하고 “민간 금융기관이 점진적으로 기존의 접근 불가능한 은행 서비스를 접근 가능한 서비스로 수정·조정하는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 고 강제적이며 실행 시간이 정해진 법률로 개정을 하고 … 새로이 조달되는 현금자 동입출금기 및 기타 은행 서비스가 장애인에게 완전히 접근 가능하도록 보장”할 것 을 권고하였다(10.2(a)항).

2023년까지 사실상 모든 ATM을 시각·지체장애 지원 범용 ATM으로 설치

기사 2019년말 기준 전국의 ATM (Automated Teller Machine) 총 115,563대(우체국 제외) 중 장애인용 ATM은 101,146대(87.5%), 장애인에 대한 지원 기능이 없는 ATM은 14,417대(12.5%) 수준임. 장애인용 ATM으로 제작·설치된 ATM도 장애인 분들이 사용하시는데 여전히 불편하다는 지적도 있음. 시각 및 지체장애 외 장애가 있는 장애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ATM 이용에 큰 불편은 없으나, 일부 특수상황(기계 고장 시 유선으로만 신고가 가능해 청각장애인의 경우 어려움)에 대한 지원은 필요함. 이에, 시각·지체장애인 지원 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는 '범용 장애인 ATM'의 설치 비중을 확대하고, 장애인 친화적인 ATM 이용환경 구축을 위해 ATM의 장애인 지원기능 등도 보완·강화하며, 장애인용 ATM 설치 위치 등을 쉽게 확인하여 보다 편리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내·홍보를 실시·강화하기로 함

* 출처: 금융감독원 (2020), 장애인 분들이 보다 편리하게 금융거래를 하실 수 있도록 장애인 친화적 ATM 이용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6월 19일자).

이러한 선례를 비롯하여 접근성이 실제로 장애인의 완전하고 평등한 사회 참여 및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효과적인 향유에 있어 중요한 전제조건이라는 사실을 고려하여, 위원회는 그 절차 규칙 및 여러 인권조약기구의 기존 관행에 따라, 접근성을 다루는 협약 9조에 관한 일반논평을 채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2. 규범적 내용

장애인권리협약 9조는 “모든 장애인의 자립적 생활과 삶의 모든 측면에서의 완전한 참여를 가능케 하기 위해서 당사국은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물리적 환경, 교통, 정보와 통신 기술·시스템을 포함한 정보와 통신, 도시와 농촌 모두에서 대중에게 개방 또는 제공되는 기타 시설과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중요한 것은 접근성이 물리적 환경, 교통, 정보와 통신, 서비스 모두를 아우르는 복합성에 입각하여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건물, 교통 인프라, 차량, 정보와 통신을 소유하는 자의 법인격 및 공적 또는 사적 특성은 더 이상 초점의 대상이 아니다. **소유자 또는 제공자가 공공 당국이든 민간 기업이든 관계없이, 대중에게 개방 또는 제공되는 상품·제품·서비스는 반드시 모두에게 접근 가능해야만 한다.** 장애인은 효과적이고 평등한 접근이 보장



되고 그 존엄성이 존중되는 방식으로 대중에게 개방 또는 제공되는 상품·제품·서비스 일체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시각은 차별 금지에서 비롯한다. 접근의 거부는 그 주체가 공공 기관이든 민간 기관이든 관계없이 차별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접근성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 의견, 출신 국가 또는 사회, 재산, 출생 또는 기타 지위, 법적 또는 사회적 지위, 젠더, 연령 등의 구분 없이 손상의 종류를 막론하고 모든 장애인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접근성은 특히 장애인에게 있어 젠더와 연령의 관점을 고려해야 한다.

공공과 민간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

정부 2018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은 80.2%, 적정설치율 74.8%로 나타났다. 2013년 조사와 비교하면, 설치율은 12.3%p, 적정설치율은 14.6%p 높아졌다. 공공시설과 민간시설의 적정설치율을 비교해보면, 공공시설의 적정설치율이 72.4%, 민간시설의 적정설치율이 75.0%로 민간시설이 공공시설보다 2.6%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시설 종류 중 매개시설(공공 77.7%, 민간 77.8%), 위생시설(공공 63.5%, 민간 64.5%), 안내시설(공공 55.0%, 민간 63.3%)이 공공시설에 비해 민간시설의 적정설치율이 더 높고, 특히 공공시설 중 파출소·지구대(63.4%), 우체국(66.0%), 보건소(66.9%), 교정시설(73.3%) 등의 적정설치율이 전체 설치율보다 낮게 나타난 것이 원인으로 나타남. 공공시설의 적정설치율을 높이기 위하여 편의시설 종류별로는 안내시설(유도 및 안내 설비, 경보 및 파난 설비)에 대한 검토 및 정비, 용도별로는 파출소·지구대, 우체국, 보건소의 편의시설 적정설치율을 높여야 함

* 출처: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2018). 2018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협약 9조는 접근성을 장애인의 자립적 생활, 완전하고 평등한 사회 참여,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제약 없는 향유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협약 9조는 공공 서비스에의 평등한 접근을 다룬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25(c)조**와 대중의 사용을 목적으로 한 장소와 서비스에의 접근권을 다룬 **인종차별철폐국제협약 5(f)조**와 같은 기존 인권조약에 뿌리를 두고 있다. 상기 두 가지 핵심 인권조약이 채택될 당시, 세상에 극적인 변화를 불러온 인터넷은 존재하지 않았다. 장애인권리협약은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을 다룬 21세기 최초의 인권조약이지만, 정보통신기술과 관련된 별도의 장애인 권리를 새로 만들지

는 않는다. 게다가 지난 수십 년 동안 국제법에서 평등의 개념 또한 바뀌었다. 형식적 평등에서 실질적 평등으로 개념적 변화가 발생하였고, 이는 당사국의 의무에도 영향을 끼쳤다. 접근성을 제공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는 평등권을 존중·보호·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새로운 의무가 되었다. 따라서 접근성은 장애라는 특수한 관점에 따라 접근권의 맥락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장애인의 접근권은 접근성 표준의 엄격한 이행을 통해 보장된다. 대중을 대상으로 하거나 대중에게 개방된 기존의 대상·시설·상품·서비스에의 접근을 막는 장벽은, 체계적이고, 무엇보다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반하는 방식으로 완전한 접근성의 실현을 목표로 하여 점진적으로 제거되어야 한다.

관련 협약 등 **인종차별철폐국제협약 5(f)조**

운송, 호텔, 음식점, 카페, 극장 및 공원과 같은 공중이 사용하는 모든 장소 또는 시설에 접근 하는 권리

* 출처: 국가인권위원회(<https://www.humanrights.go.kr>)

정보접근권 관련 제도

학계

한국은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20조, 제21조, 제23조 등을 통하여 정보접근의 차별금지를 의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또한, 국가정보화기본법에 의거 모바일 앱 접근성 지침이 제정(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107호) 되었으며, 이를 통해 구체적으로 준수해야 할 접근성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2013년 4월 11일부터 모든 법인의 의무 사항으로 되었음. 법률과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기본적인 제도적 장치는 만들어졌으나, 구체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접근성 기능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고, 기업이 이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처벌 등에 대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현재 업계에서는 사례 위주(best practices)의 경험칙에 의존하고 있으며 정형화된 개발 방법이나 개발 산출물의 검증수단이 마련되지 않았음

* 출처: 이용직 (2017). 장애인의 모바일 접근성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 연구. 법과정책연구, 17(1): 291-320.

모든 신규 상품·제품·시설·기술·서비스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을 포함한 잠재적 소비자들을 위하여 천부적 존엄성과 다양성의 존중이 고려되는 방식으로 완전하고 평등하며 제약 없는 접근을 보장하여야 한다. 유니버설 디자인에 따라 특정 공간 내에서의 장벽 없는 이동을 포함하여 개인이 한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제약 없이 움직일 수 연속적인 이동의 고리를 만들어 낼



수 있어야 한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용자들은, 필요한 경우 기술적 지원 및 사람과 동물에 의한 지원을 받아, 장애물 없는 거리에서 움직이고, 접근 가능한 저장 차량에 탑승하며, 정보와 통신에 접근하고, 보편적으로 설계된 건물에 입장하여 내부를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다고 해서 기술적 지원의 필요성이 저절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건물의 초기 설계 단계부터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면 건축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된다. 시작부터 건물의 접근성을 보장하더라도 많은 경우 전체 건축 비용은 전혀 상승하지 않을 수 있고, 비용이 상승하는 일부 경우에도 최소한의 상승에 그칠 것이다. 그러나 기존 건물을 접근 가능하게 변경하기 위한 사후 조정 비용은 상당히 높은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특히 특정 역사적 건물과 관련해서는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초기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경제적이다. 반면, 사후 장벽 제거에 비용이 들어간다는 이유는 접근성을 막는 장벽을 점진적으로 제거해야 하는 의무를 피하기 위한 구실로 사용되어서도 안 되고, 사용될 수도 없다. 또한 인터넷 및 정보통신기술의 사후 조정으로 인해 비용이 더 상승할 수 있으므로, 정보통신기술을 포함한 정보·통신의 접근성은 시작 단계부터 실현되어야 한다. 따라서 설계와 생산의 초기 단계에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의무적인 접근성 기능을 포함시키는 것이 보다 경제적인 것이다.

독일, 덴마크 대중교통(기차)와 승강장간의 높이 차이 문제

민간 독일과 덴마크는 '보고 전 질의목록(LolPR)'을 위해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제출한 민간보고서에 대중교통 접근성과 관련하여 열차와 승강장의 높이 차이를 지적하였음. 이는 다른 공간으로 제약 없이 움직일 수 있는 연속적 이동 고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작용할 수 있음. 먼저 독일의 '시민사회조직연맹(Alliance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s)'은 두 번째 심의를 앞둔 민간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보고함

- 현재 완료 된 지역 교통 승강장 교체 작업이 부분적으로 열차를 타고 내리는데 승강장과 열차의 높이 차이를 발생시켰음. ... Deutsche Bahn(독일 철도회사)가 제공한 승강장 높이 차이는 장애인을 충분히 통합하지 않은 것임

다음은 덴마크 '시민사회(Civil Society)'의 보고내용임

- 대중교통은 장애인에게 접근가능하지 않음. 기차 탑승은 특히 승강장 높이의 차이 때문에 더욱 우려스러운 상황임. 접근 가능한 저상기차의 도입은 파이프라인에 있으며,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의 높이 표준화가 우선되어야 함

* 출처: Alliance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s(2018). Update for the 2nd Federal review of Germany for the UN committee for the CRPD. UN 조약기구 DB

(<https://www.ohchr.org/EN/HRBodies/CRPD/Pages/CRPDIndex.aspx>).
Civil Society(2019). Civil Society's suggestions to the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PwD regarding the LoIPR on the Kingdom of Denmark. UN 조약기구 DB
(<https://www.ohchr.org/EN/HRBodies/CRPD/Pages/CRPDIndex.aspx>).

스웨덴, “접근성 구축이 가져오는 이익이 더 많다” 보고

민간 스웨덴 민간단체는 접근성을 구축하는 것은 서두를수록 더 많은 이익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보고하였으며, 접근성은 점진적으로 꾸준히 이행해야 하는 것임을 강조하였음

- 초기 단계부터 접근성 이슈를 다루는 것이 더 저렴하고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옴. 스웨덴 장애 운동조합은, 스웨덴 노동조합의 전 수석 경제학자인 Dan Andersson의 보고서를 포함하여 이를 뒷받침하는 많은 사례를 갖고 있음. 이 보고서는 “모든 사람이 탑승하기 전에 문이 닫히는” 접근성을 해결하기 위해 13억SEK가 소요되는 사실과 함께 더 나은 접근성 구축을 통해 얻은 이익에 대한 예가 설명되어 있음. 투자의 94%가 사회의 이익으로 환원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여기에는 시간 절약 등의 형태도 포함되어 있음. 특히 기능적 장애가 없는 이용자들이 가장 많은 이익을 얻었음. CRPD를 비준함으로써 스웨덴은 장애물과 장벽을 식별하고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그리고 “점진적으로, 그러나 꾸준히” 수행하기로 동의하였음

* 출처: Swedish Equally Unique (2014). Submission and comments on the written replies. UN 조약기구 DB (<https://www.ohchr.org/EN/HRBodies/CRPD/Pages/CRPDIndex.aspx>).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

정부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은 이용자가 가진 개별적 특수성(나이, 성별, 국적, 장애의 유무 등)에 관계없이 누구라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품이나 환경, 서비스 등을 계획하고 설계하는 것임. 유니버설디자인은 장애를 가진 이용자를 위하여 적용되는 배리어프리 디자인(Barrier free design)의 개념을 기본적으로 포함하여 더 넓은 범위의 이용자 중심 디자인 개념이라 할 수 있음. 유니버설 디자인의 4원리는 기능을 지원하는 디자인(Supportive Design), 수용 가능한 디자인(Adaptable Design), 접근 가능한 디자인(Accessible Design), 안전한 디자인(Safety-oriented Design)으로 제시됨. 7원칙은 평등한 사용(Equitable Use), 사용의 융통성(Flexibility in Use), 단순하고 직관적인 사용(Simple, Intuitive Use), 정보이용의 용이(Perceptible Information), 오류에 대한 포용력(Tolerance for Error), 최소의 물리적 노력(Low Physical Effort), 접근과 사용을 위한 충분한 공간(Size and Space for Approach and Use)으로 제시됨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14). 공공도서관 유니버설 디자인 매뉴얼 개발연구.

인터넷 및 정보통신기술의 사후 조정으로 인해 비용이 더 상승한 사례

웹 미국 교통부(US DOT)는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을 취항하는 전 세계 항공사를 이용하면서 실제 고객으로부터 불편한 점을 접수하고 있음. 접수하는 불편사항 중에는 접근성 위



배사항도 포함이 됨. 스칸디나비아 항공은 2017년 2월부터 장애인 전용 웹사이트를 별도로 만들어 서비스하였음. 해당 서비스가 WCAG2.0 Level AA를 위배했음을 확인한 미국 교통부는 2018년 11월 16일, 항공사 접근법(Air Carrier Access Act)을 위반한 스칸디나비아 항공(SAS)에 20만 달러(한화 약 2억 4천)의 벌금을 부과하고 수정할 것을 통보하였음

* 출처: AOA - 항공사 ARIA 적용사례[웹사이트]. 2021년 8월 6일 검색.

<https://aoa.gitbook.io/skymimo/aoa-2018/penalty>.

유니버설 디자인의 적용은 장애인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사회에 접근할 수 있게 만든다. 협약 9조가 도시 및 농촌 지역 모두에서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무를 당사국에 명시적으로 지우고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과도한 도시화는 인구밀도가 높은 변화한 도시 지역의 건축환경, 교통, 서비스, 복잡한 정보·통신 서비스에 있어 장애인의 접근을 막는 새로운 장벽을 만들기도 하지만, 주로 덜 개발된 외진 농촌 지역보다는 비교적 규모가 큰 도시의 접근성 수준이 높다는 증거가 나오기도 하였다. 도시와 농촌 지역 모두에서 장애인은 반드시 일반 대중이 입장하고 향유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의 자연적·유산적 부분에 있어 접근성을 가져야 한다.

지역마다 다른 접근성 구축 정도와 접근성 규정

민간 접근성은 지역 격차 없이, 모든 지역에 걸쳐 구축되어야 함. 그리스와 오스트리아는 민간보고서를 통해 접근성에 지역의 차이가 극명함을 보고하였음. 다음은 그리스는 '국가 그리스 장애인연합(National Confederation of Disabled People of Greece)'의 보고 내용임

- 교통 접근성과 관련하여 아테네와 이탈리아 나머지 지역 간의 접근성에 상당한 격차가 있음. 아테네와 테살로니키 지역의 새로운 공공 교통 시스템(지하철과 트램)은 만족할 수준으로 접근성이 갖춰져 있지만, 지방 도시에는 접근성 문제가 많이 남아있음. 접근 가능한 장거리 버스나 기차가 없고, 전국에 접근 가능한 택시도 거의 없는 상황임

이어서 오스트리아의 '오스트리아 장애인 위원회(Austrian Disability Council)'의 보고 내용임

- 오스트리아 전역에서 적용되어하며 CRPD 제9조를 준수하는 접근성과 관련한 통합적 접근 방식은 개발되지 않고 있음. 오스트리아의 연방제도는 접근성 측면에서 CRPD의 이행을 방해하고 있음

물리적 환경

- 오스트리아에는 여전히 9개의 다른 지역별 건축 기준이 개발되어 있음. 기존의 건축 기준은 공공시설이나 주거지역에서 접근성이 요구되는 일정 규모 또는 최소 수용능력을 초과하는 건축물에만 적용됨. 1993년에는 오스트리아 건설공학연구소(OIB)가 지역별 건축 규정을 조화시키기 위해 오스트리아 연방 헌법에 의거하여 지역 간 합의에 따라 설립되었음. 이를 위해

지침을 개발하기도 하였으나 지침을 개발하는데 있어 장애인의 참여는 보장되지 않았음.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장애인도 사회에서 배제되었음. OIB의 지침은 애초에 지역 전체에 걸쳐 건축법을 조화시키는 작업에 적합하지 않았음

* 출처: National Confederation of Disabled People of Greece(2019). Human Rights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Alternative report Greece 2019. UN 조약기구 DB
(<https://www.ohchr.org/EN/HRBodies/CRPD/Pages/CRPDIndex.aspx>).
Austrian Disability Council (2018). Second Alternative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UN CRPD in Austria. UN 조약기구 DB
(<https://www.ohchr.org/EN/HRBodies/CRPD/Pages/CRPDIndex.aspx>).

9조 1항은 특히 다음 항목에 대한 접근성의 걸림돌과 장벽을 밝히고 제거할 것을 당사국에 요구한다.

(a) 건물, 도로, 교통 및 학교, 주거지, 의료 시설, 근무지를 포함하는 기타 실내·외 시설

(b) 정보, 통신 및 전자 서비스와 응급 서비스를 포함하는 기타 서비스

위에서 언급한 기타 실내·외 시설에는 법률 집행기관, 법원, 교도소, 사회 기관, 사회적 상호작용과 여가·문화·종교·정치·스포츠 활동을 위한 구역 및 상업 시설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타 서비스에는 우편, 은행, 전화, 정보 서비스가 포함되어야 한다.

구금시설(교도소)에서 접근성에 대한 보고

민간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는 호주 교도소의 접근성에 대해 보고 하였는데, 다음은 보고 내용을 요약한 것임

접근성의 결여

- 휴먼라이츠워치는 많은 교도소의 접근성이 열악하여 신체적, 감각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이동하기에 극히 어려운 상황임을 발견하였음

물리적 장벽

- 방문했던 14개의 교도소 중 9개에서 휴먼라이츠워치는 물리적인 인프라로 인해 화장실, 샤워장, 식당 등에 접근할 수 없는 인터뷰 참가자를 만났. 샤워의자 등이 없으므로 화장실에 가거나 침대에 눕는 일상적인 일이 신체적 감각적 장애인에게 고통스럽고 굴욕적인 일이 되어버림

의사소통 장벽

- 언어 및 청각장애인 역시 적절한 편의제공의 부족으로 접근성이 매우 결여되어있음을 증명하였음. 14개 중 3개의 교도소에서만 청각장애인이 가족과 영상통화를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었음. 수감생활에서 의사소통의 부재는 오해와 고립감, 출소 이후 지역사회 재통합에 어려움 등을 겪게 함

부적절한 의료 서비스와 서비스 접근에 지연

- 모든 수감자들은 이용자가 과밀함에 따라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잘 이뤄지지 않으나 장애인 수감자는 더욱 열악한 상황임. 특히 정신건강과 관련하여서는 업무가 지나치게 많아 개별 수용자에게 적절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어려움. 또한 수감자는 치료의 특성, 목적, 위험 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아 치료를 결정하거나 동의하는 위치로 여기지 않음

이밖에도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보고서는 적절한 장애 판정 도구의 부족, 장애 수감자에 대한 데이터 부족, 적절한 자원의 부족 등을 보고하고 있음

* 출처: Human Rights Watch(2019). Human Rights Watch Submission on Australia to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UN 조약기구 DB
(<https://www.ohchr.org/EN/HRBodies/CRPD/Pages/CRPDIndex.aspx>).

시설접근권과 정보접근권

학개 시설접근권은 장애인이 각종 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장애인의 기회 평등에 관한 표준규칙’ 제5조는 접근성의 세부 범주를 설명하면서 물리적 환경에 대한 접근과 정보 및 의사소통에 대한 접근으로 이분화하고 있으나 「장애인권리협약」은 이를 세분화하여 세 가지 권리로 규정하고 있는데, 표준규칙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접근에 해당하는 내용을 이동권과 시설접근권으로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음.

정보접근권은 장애인이 각종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함. 특히 이러한 정보접근성은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필수적인 부분으로 자리매김했음

* 출처: 심재진, 서정희, 오욱찬 (2018).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접근권 개념과 개별 국가의 사례. 한국장애인복지학, 40(0): 91-122

9조 2항은 대중에게 개방 또는 제공되는 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 최저 기준의 이행을 발전·공포·모니터링하기 위하여 당사국이 취해야 할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 최저 기준은 장애인의 이동 및 국적의 자유(18조) 조항에 맞추어 자유로운 이동과 관련한 상호운용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른 당사국의 기준과도 일치하여야 한다. 당사국은 또한 대중에게 개방 또는 제공되는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주체가 장애인의 접근성이 가진 모든 측면을 고려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 요구된다(9조 2(b)항).

접근성의 부족은 불충분한 인식과 기술적 노하우의 부족에서 온 결과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9조는 장애인의 접근성에 관하여 모든 이해당사자에게 교육을 제공할 것을 당사국에 요구한다(2(c)항). 9조는 관련 이해당사자를 열거하지 않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목록에는 건축 허가 발급 당국, 도시 계획 담당자, 교통 당국, 서비스 제공자, 학계 구성원,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를 포함해야 한다. 교육은 상품·서비스·제품의 설계자뿐 아니라 실제 생산자에게도 제공되어야 한다. 더불어 제품 개발 과정에 장애인의 직접적 참여를 강화한다면 기존 수요의 이해와 접근성 테스트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건물의 접근성을 결정하는 것은 건설 현장의 건축업자이다. 접근성 표준의 현실적 적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러한 모든 집단에 대해 교육과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접근성 구축, 유니버설 디자인 종사자 및 이해관계자 교육

민간 장애인권리협약 제9조는 장애인 접근성 구축을 위해 관련 이해관계자, 종사자에 대한 접근성 및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교육, 훈련을 권고하고 있음. 이에 대해 일부 국가의 장애인단체 및 시민단체에서 다음과 같이 보고함

다음은 '이탈리아 장애 포럼(Italian Disability Forum)'이 건축 접근성에서 교육에 대해 보고한 내용임

- 첫 번째는 건축가, 엔지니어 및 측량사에 대한 교육이 부족함. 사실 이 분야의 교육은 전문화 되어있는데, 대부분의 관계자는 이 분야를 완전한 참여와 시민권을 위한 요소로 여기기보다 규제로만 여기는 상황임.

다음은 뉴질랜드의 '오uckland 장애인 커뮤니티(Disability Community of Auckland)'가 2~3차 국가심의회에 대비하여 보고한 내용임

- 뉴질랜드 장애인은 대중교통과 관련한 종사자 교육에 대한 조항에 우려를 표하고 있음. 다수의 버스 및 기차 종사자는 상당부분 도움이 되지만 일부는 휠체어를 탄 승객이 내리기 위해 경사로를 내려놓는 것을 거부하거나, 버스 정류장의 시각장애인이 있음에도 정차하지 않고 지나치거나, 그들에게 정류장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잘못 된 곳에서 내리도록 하는 경우도 있음

스웨덴의 '스웨덴 장애인 연합(Swedish Disability Federation)'도 종사자 교육에 대해 강조하였음

- 우리는 스웨덴 정부가 접근성을 개선하거나 그 결과를 이해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함. 건물과 활동, 정보를 접근가능하게 하는 규정에 대한 지식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교육 훈련이 필요한 직업군은 계획과 건설에 관련 된 모든 종사자, 운송-교통 분야 종사자, 유치원 및 학교 종사자, 사회보험 공무원, 고용센터 종사자, 보건의료 분야 종사자 등을 포함함

* 출처: Italian Disability Forum(2016). First Alternative Report to the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UN 조약기구 DB
(<https://www.ohchr.org/EN/HRBodies/CRPD/Pages/CRPDIndex.aspx>).
Disability Community of Auckland(2014). Independent Review. UN 조약기구 DB



(<https://www.ohchr.org/EN/HRBodies/CRPD/Pages/CRPDIndex.aspx>).

Swedish Disability Federation(2011). Swedish disability movement's alternativa report to the UN Committee on the Righth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UN 조약기구 DB

(<https://www.ohchr.org/EN/HRBodies/CRPD/Pages/CRPDIndex.aspx>).

적절한 표지, 접근 가능한 정보와 통신, 지원 서비스가 없다면 대중에게 개방된 건물 및 기타 장소 내에서의 이동과 방향 설정은 일부 장애인에게 어려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9조 2(d), 2(e) 항에서는 대중에게 개방된 건물 및 기타 장소에 점자 및 읽고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표지판이 설치되어야 하며, 또 접근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안내자·낭독자·전문수화통역사를 포함한, 사람과 동물에 의한 보조 및 매개자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표지, 접근 가능한 정보와 통신, 지원 서비스가 없다면 여러 장애인, 특히 지적장애인은 건물 내 방향 설정과 이동이 불가능하게 될 수 있다.

정보 및 통신에의 접근이 안 된다면, 장애인이 누려야 할, 생각·표현의 자유, 기타 여러 기본적 권리와 자유는 심각하게 훼손되고 제약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협약 9조 2(f), 2(g)항은 당사국이 안내자·낭독자·전문수화통역사를 포함한, 사람과 동물에 의한 보조 및 매개자 제도를 촉진하고(2(e)항), **장애인의 정보 접근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타 적절한 형태의 보조와 지원을 촉진하며, 의무적 접근성 표준의 적용을 통하여 인터넷을 포함한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과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촉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와 통신은 읽기 쉬운 형식이나 보완대체의사소통 방식과 방법을 사용하는 장애인이 그러한 형식·방식·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뉴질랜드, 정보 및 서비스 접근성에 대한 보고

민간 '뉴질랜드 장애인 단체(New Zealand Disabled Persons' Organisations)'는 장애인이 정보 및 서비스에서 배제되는 국가의 현실을 민간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 뉴질랜드에서 정부 서비스와 정보에 대한 접근은 장애인의 사회 참여에 있어 여전히 중요하며, 우려스러운 장벽임. 정보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의 문제가 발생하면 장애인 당사자는 인권위원회나 옴부즈만에 신고하며, 이들은 진정 사건을 판단하고 있음. 예를 들어, 장애인은 정부의 정보와 서신, 양식에 종종 접근 불가능 한 경우가 있으며, 간혹 이러한 정보는 고위험 정보, 예를 들면 치료에 대한 동의, 약품에 대한 정보이기도 함
- '뉴질랜드 정부 웹 표준은 국제 '웹 콘텐츠 접근성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핵심

정부 부처에 의무 이행 사항임. 그러나 이러한 기준에 대한 준수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기준 자체도 제한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대상에 지역 보건 위원회, 지역 정부나 학교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임

* 출처: New Zealand Disabled Persons' Organisations(2014). Newzealand Disabled Persons' Organizations Report. UN 조약기구 DB
(<https://www.ohchr.org/EN/HRBodies/CRPD/Pages/CRPDIndex.aspx>)*

시각장애인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 보장을 위한 보조와 지원

학계 장애인권리협약 제9조에서 나타내는 '접근성' 증진의 대상은 대중교통, 시설이용, 정보통신기술 등 장애인을 둘러싼 모든 환경적 요인들을 포괄함. 물리적 대상인 건물 등에 대한 접근성뿐 아니라 인식적이고 기술적인 범주까지 그 접근성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제9조는 건물, 시설 등의 접근성에서 머물지 않고,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형태의 지원과 보조를 촉진할 것(2항의 바)을 국가에게 요구하고 있음. 이 점에서 보면, 시각장애인에게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형태의 지원과 보조'는 점자변환, 음성변환, 음성해설서비스 등이 포함될 것임

* 출처: 이영희 (2018). 시각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과 향유에 대한 공익가치론적 연구. 박사학위 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서울.

청각장애인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 보장을 위한 지원 사례

기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107 손말이음센터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정보통신, 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전기통신사업법 제44조의 2(장애인 통신중계서비스)'에 따라, 청각·언어장애인이 전화, 인터넷을 통해 비장애인 또는 다른 장애인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실시간 통신중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2005년 개소 후, 현재는 365일 24시간 연중무휴 체제로 운영하고 있고, 보다 쉽고,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107 대표번호를 포함한 전화, 모바일, PC, 영상전화 등 다양한 통신매체를 연계, 운영하고 있음. 특히 119, 112 등 긴급 상황 중계를 포함하여 구직, 의료, 업무, 금융, 쇼핑, 주문 등 일상생활 전 영역에서 중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출처: 107 손말이음센터[웹사이트]. 2021년 8월 6일. <https://107.relaycall.or.kr>.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2019년 개정)를 통해 장애인·고령자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 제품을 쉽게 접근해서 이용하도록 서비스 제공, 구매, 설계, 제작 단계부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이 지침에는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의 기능에 대한 설계 지침과 웹사이트의 접근성 준수에 관한 설계 지침이 포함되어 있음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국내 정보 접근성 관련 표준 제정 현황

법률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2019년 개정) [별표 3]

종류	표준제목	제정 년도
국가 표준 (7종)	금융자동화기기 접근성 지침 1.0	2007
	정보기술-시각장애인용 디지털 도서	2010
	시각장애인의 인쇄물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점자·음성 변환용 코드 활용지침	2012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2015
	소프트웨어 접근성 설계 지침	2015
	공공 단말기 접근성 가이드라인	2016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2016
정보통신 기술협회 (TTA) 단체표준 (5종)	한국형 웹 저작도구 접근성 지침 2.0	2006
	한국형 사용자 에이전트 접근성 지침 1.0	2006
	전자 문서 접근성 지침 1.0	2007
	휴대전화기 키패드 접근성 지침 1.0	2007
	모바일 기기 접근성 지침 1.0	2017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신기술은 장애인의 완전하고 평등한 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지만, 그러려면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기술이 설계되어야만 한다. 새로운 투자·연구·생산은 새로운 장벽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불평등을 퇴치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따라서 9조 2(h)항은 초기 단계에서 접근 가능한 정보·통신 기술과 시스템의 설계·개발·생산·배포를 도모하여 그러한 기술과 시스템이 최소 비용으로 접근성을 확보하도록 할 것을 당사국에 촉구한다. 보청기와 청각감응장치 사용자를 위한 환경보조시스템(ambient assistive system)을 포함한 청각 향상 시스템이나 비상 대피 시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장치된 승강기 외에도 **접근성 서비스의 기술적 진보를 보여주는 예시**는 많다.

접근성은 19조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장애인의 자립적 생활과 완전하고 평등한 사회 참여의 전제조건이므로, 물리적 환경, 교통, 정보·통신 기술, 대중에게 개방된 시설과 서비스의 접근의 거부는 차별의 맥락에서 간주되어야 한다. 4조 1(b)항에서 말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에 해당하는 기존의 법·규제·관습·관행을 수정 또는 폐지하기 위한 법률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모든 당사국에게

부여된 주요 일반 의무에 해당한다. “당사국은 장애를 바탕으로 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여야 하며, 장애인에게 이유를 막론하고 차별에 대하여 평등하고 효과적인 법적 보호를 보장하여야 한다”(5조 2항). “평등 촉진과 차별 철폐를 위하여 당사국은 적절한 편의제공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5조 3항).

접근권과 반차별권(합리적 편의제공 의무)

학계 접근권은 반차별권인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와 관련성이 깊음. 합리적 편의제공은 “특정한 상황에서 필요할 경우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평등한 기반에서 모든 인권과 기본권을 향유하거나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불균등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지 않는 필요하고 적절한 변경이나 조정”(장애인권리협약 제2조)을 말함. 사업장에서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와 같은 변경이나 조정은 합리적 편의제공의 요소이기도 하지만, 장애인의 시설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되기도 함.

우리나라는 건물의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2)에, 교통수단의 경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시행령 별표 2)에 접근권의 최소기준이 제시되며, 이들 법률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이전에 이미 시행되었음. 이후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건물과 교통수단에 대한 이러한 접근권 기준을 각각 시설물(제18조 제3항)과 이동 및 교통수단(제19조 제4항)에서의 차별금지(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로 규정하여 연계하고 있음.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권 최소기준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에 존재하는데, 해당 조항 자체가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이지만 실제로는 사전에 구비되어야 할 접근권과 장애인이 요청할 시 제공되어야 할 정당한 편의제공 규정이 모두 존재함. 이 중 대표적로 방송과 통신에 대해 접근권 최소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거하여 각각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고시로 정하고 있음

* 출처: 심재진, 서정희, 오옥찬 (2018).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접근권 개념과 개별 국가의 사례: 반차별권(합리적 편의제공 의무)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장애인복지학, 40(0): 91-122

새로 설계·건축·생산되는 물건, 인프라, 상품, 제품, 서비스 등에 대한 접근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 그리고 장벽을 없애고 기존의 물리적 환경, 기존 교통, 정보와 통신, 일반 대중에게 개방된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 사이에는 **분명한 구분이 필요하다**. 당사국은 또한 “장애인의 구체적 수요를 충족하고 이용 가능성과 사용을 촉진하며 표준과 지침의 개발에 있어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모하기 위하여, 협약 2조에서 정의하듯 가능한 한 최소의 조정과 최저의 비용을 필요로 할 보편적으로 설계된 상품·서비스·장치·시설의 연구와 개발을 이행 또는 촉진”(4조 1(f)항)해야 한다는 또 다른 일반 의무를 갖는다. 모든 새로운 물건·인프라·시



설·상품·제품·서비스는 유니버설 디자인의 원칙에 따라 장애인이 완전히 접근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당사국은 장애인이 기존의 물리적 환경, 교통, 정보와 통신, 일반 대중에게 개방된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그러나 이 의무를 점진적으로 이행하면서, 당사국은 기존의 장벽을 없애기 위한 확정적 일정을 마련하고 적절한 재원을 할당해야 한다. 당사국은 여러 당국(역내·지역 당국 포함)과 기관(민간 기관 포함)에게 접근성 보장을 위해 수행되어야 할 의무를 분명히 규정해 주어야 한다. 당사국은 또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접근성 표준을 이행하지 못하는 자에 대한 제재를 위하여 효과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규정해야 한다.

벨기에, 접근성 기준에 대한 제재 조치 부족

민간 벨기에와 캐나다 시민사회의 보고에 따르면 국가 내 장애인 접근성 보장을 위해 마련된 법, 제도가 사실상 의무사항이 아니며 이행 촉구를 위한 제재 조치 등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다음은 벨기에 민간단체의 보고 내용임

건물 및 공공장소에 대한 접근성 규칙은 '신축 및 기존 건물의 개보수는 접근성에 대한 지역별 규정을 준수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다음과 같은 주요 문제가 발생함

- 통제 및 제재 수단의 부족으로 시행 중인 규칙 적용하지 않음: 규정의 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행을 강제할 제재 수단이나 기한이 정해지지 않음
- 문화재 보존과 관련한 규정과 건물 접근성에 대해서는 적용이 불가능함: 건물의 분류에 따라 규정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 정당화되기도 함
- 건축 승인을 내리는 공무원의 유니버설디자인과 접근성에 대한 교육이 부족함

다음은 캐나다의 보고 내용임

- '장벽 없는 캐나다법(Accessible Canada Act, ACA)'이 2019년 7월 11일 법안 발효에 필요한 국왕의 재가를 받아 2019년 7월 11일 발효되었으며, 2040년까지 장벽 없는 연방 부문을 만들기 위한 첫 번째 중요한 초석을 마련함. 그러나 ACA는 이 법이 다루는 폭과 가지는 힘이 부족한 것에 대해 비판을 피하지 못하고 있음
- 'ARCH 장애법센터'는 법안을 분석하였고, "shall(해야한다.)"를 대신하여 "may(할 수 있다.)"를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법 이행을 선택사항으로 만들어버린다고 지적함. 그들은 "이 법은 정부나 다른 기구에 접근성 의무조항을 만들고 시행할 권한을 주고 있지만, 실제로 이 권한을 활용 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라고 설명함

* 출처: Belgian Disability Forum asbl (BDF) (2019). Submission to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Within the framework of the 2nd and 3rd review of Belgium. UN 조약기구 DB (<https://www.ohchr.org/EN/HRBodies/CRPD/Pages/CRPDIndex.aspx>).
Autistics United Canada(2019). Submission for the 22nd Session of the United Nations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UN 조약기구 DB (<https://www.ohchr.org/EN/HRBodies/CRPD/Pages/CRPDIndex.aspx>).

신축 시설과 기존 시설에 대한 차등적 이행 적용

학계 일반논평 2호에서는 시설이나 서비스의 운영 시점에 따라 최소 기준 적용 허용 여부를 달리하여 적용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했음. 신축 시설 및 서비스는 보편적 설계 원칙에 의거한 최소 기준에 적용대상이 되고 이는 즉각적 이행이 되어야 하지만, 기존 건물이나 교통수단 등은 시간 계획이 있는 점진적 이행을 적용하도록 함

* 출처: 심재진, 서정희, 오옥찬 (2018).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접근권 개념과 개별 국가의 사례. 한국장애인복지학, 40(0): 91-122.

적절한 편의는 개인과 관련되어 있지만, 접근성은 집단과 관련성을 갖는다. 이는 접근성 제공의 의무가 사전적인 의무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당사국은 개인이 장소나 서비스에의 입장 또는 사용을 요청하기 전에 접근성을 제공할 의무를 갖는다. 당사국은 접근성 표준을 수립해야 한다. 이 표준은 장애인 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채택되어야만 하고, 서비스 제공자, 건축업자, 기타 관련 이해당사자를 위하여 명시될 필요가 있다. 접근성 표준은 폭넓고 표준화되어 있어야 한다. 접근성 표준을 개발할 때 고려되지 않았던 희귀 손상을 가진 사람 또는 접근성을 위해 제공되는 방식·방법·수단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가령 점자를 읽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 접근성 표준의 적용만으로 접근 보장이 충분할 수 없다. 이런 경우 적절한 편의가 적용될 수 있다. 협약에 따라 당사국은 장애인을 위한 점진적 접근성 보장을 피하기 위한 변명으로 건축 정책을 사용할 수 없다. 접근성 실현을 위한 의무는 ‘무조건적’이다. 즉, 접근성 제공의 의무를 지는 주체는 장애인에게 접근을 제공하는 부담을 근거로 의무 이행을 피할 수 없다. 이외는 대조적으로 적절한 편의의 의무는 이행 주체에게 부당한 부담을 지우지 않는 조건에서만 적용된다.

적절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는 ‘지금부터의’ 의무이다. 즉, 손상을 가진 개인이 직장 또는 학교와 같은 특정 상황에서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자신의 권리를 누리기 위하여 해당 편의를 필요하게 된 순간부터 집행이 강제화될 수 있다. 이 경우 접근성 표준은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으나, 당연히 따라야 하는 규범으로 여겨지지는 않는다. 적절한 편의는 장애를 가진 개인의 특정 상황 속 접근성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적절한 편의는 반차별 또는 평등 보장의 관점에서, 개인의 존엄성·자율성·선택을 고려하여 개인적 정의를 달성코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희귀 손상을 가진 사람은 접근성 표준의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편의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접근성과 적절한 편의의 차이

학계 접근성은 특정 유형의 장애인 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따라서 접근권 제공 의무가 사전적이며, 표준화가 가능하다는 특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음. 반면 적절한 편의의 의무는 권리대상이 개인이고 권리 실현 시점이 사후적이며 기준이 개별적이라 할 수 있음

개념	권리 대상	제공 시점	이행 방식	표준	의무성
접근성	집단	사전적으로 (ex ante)	점진적	수립	무조건적
적절한 편의	개인	필요 시점부터 (ex nunc)	즉각적	개별적 적용	이행 주체에게 부당한 부담 을 지우지 않는 조건

※ 논문을 참고하여 표를 재구성하였음.

* 출처: 심재진, 서정희, 오욱찬 (2018).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접근권 개념과 개별 국가의 사례. 한국장애인복지학, 40(0): 91-122.

3. 당사국의 의무

물리적 환경, 교통, 정보와 통신, 대중에게 개방된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일은 장애인의 다양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의 효과적 향유를 위한 전제조건인 경우가 많지만, 당사국은 필요한 경우 국제협력뿐 아니라 점진적 이행을 통해서도 접근의 실현을 보장할 수 있다. 제거할 필요가 있는 장애물과 장벽을 밝히기 위하여 효율적인 방식과 중단기적 틀을 통해 현재 상황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다. 장벽은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그리고 점진적이되 꾸준히 제거되어야 한다.

당사국은 자국의 접근성 표준을 채택·공포·모니터링할 의무를 지닌다. 시행 중인 관련 법률이 없는 경우, 적합한 법적 틀의 채택이 첫 단계가 될 것이다. 당사국은 법률과 이행 사이의 간극을 밝히고 모니터링하며 해결하기 위하여 접근성 관련 법률에 대한 포괄적 검토를 진행해야 한다. 장애 법률은 접근성을 정의할 때 정보통신기술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조달·고용·교육과 같은 영역에서의 반차별적 접근과 관련한 장애권리법은 정보통신기술에의 접근과 더불어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현대 사회의 중심이 되는 여러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법과 규제의 검토·채택은 장애인 및 장애인 대표 단체와 더불어 학계나 전문 건축가 협회의 구성원, 도시 계획자, 공학자, 설계자 등 기타 관련 이해당사자와 긴밀히 상의하여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4조 3항). 입법은 협약 4조 1(f)항에서 요구하듯 유니버설 디자인의 원칙을 바탕으로 하

여 이에 부합하여야 한다. 또한 그것은 접근성 표준의 의무 적용을 규정하여야 하며, 접근성 표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접근성 표준의 지속적 리뷰와 업데이트 필요

민간 호주와 뉴질랜드 시민사회는 접근성 표준 개발과 더불어 표준의 지속적인 리뷰, 모니터링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였음. 다음은 뉴질랜드 민간단체에서 제출한 보고 내용임

- 접근 가능한 건물 표준과 표준의 준수 및 모니터링은 뉴질랜드 건물 환경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최신화 과정이 이뤄져야 함
- 현재 빌딩 접근성 표준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10년 전 검토 이후, 추가 검토가 진행되지 않음. 정부는 2013년 12월에 현재 규제 시스템과 장애인의 필요에 부합하는지를 검토 할 것으로 발표하였음. 이 검토는 건물 접근성 요구 사항이 신축 및 오래된 건물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으며,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어느 정도 요구사항이 제공되어야 하는지 이해를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함. 검토 이후 권고는 2014년 중반에 전달 될 예정임. 단, 본 과정에서 장애인단체의 참여가 미진하므로 공식적이고 투명하게 참여가 촉진되어야 함. 장애인 단체의 검토 과정에 참여와 CRPD의 반영이 이뤄져야 검토가 성공적으로 완료 될 수 있음

다음은 '호주 장애인단체(Australian Disabled people's Organisations)'가 제출한 보고임

- 접근가능한 대중교통에 대한 장애 기준(2002)에 대해 3차례에 걸친 검토가 있었음. 각 검토에서는 표준 준수 여부 보고를 위한 국가의 프레임워크 수립을 권고하였음. 하지만 호주 정부는 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

* 출처: Disabled Persons Assembly-Submission by New Zealand DPOs(2014). New Zealand DPOs submission on the list of issues and questions for the New Zealand Government. UN 조약기구 DB (<https://www.ohchr.org/EN/HRBodies/CRPD/Pages/CRPDIndex.aspx>). Australian Disabled people's Organisations(2019). Disability Rights Now 2019. UN 조약기구 DB (<https://www.ohchr.org/EN/HRBodies/CRPD/Pages/CRPDIndex.aspx>).

건축 및 계획 관련 법에서의 물리적 환경, 공공 철도 및 도로와 수상 운송 관련 법에서의 교통 체계, 정보·통신 서비스, 대중에게 개방된 서비스 등 접근 가능해야만 하는 다양한 영역을 규정하는 접근성 표준을 주류화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접근성은 장애를 바탕으로 한 차별 금지의 맥락에서 평등한 기회, 평등, 참여에 관한 일반법 및 특별법 속에 포함되어야 한다. 접근의 거부하는 차별 행위로 분명히 정의되어야 한다. 물리적 환경, 교통, 정보와 통신, 대중에게 개방된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거부당한 바 있는 장애인은 그 자신의 의도에 맞추어 효과적인 법적 구제를 제공받아야 한다. 접근성 표준을 정의할 때 당사국은 장애인의 다양성을 고



려하고, 접근성이 젠더, 연령, 장애 종류와 관계없이 제공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접근성 조항에서 장애인의 다양성을 아우르는 일에는 일부 장애인이 완전한 접근성을 누리기 위하여 인간 또는 동물의 보조(활동보조, 수화 통역, 촉각 수화 통역, 안내견 등)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특정 건물이나 열린 공간에서 **안내견**의 출입을 금지하는 일은 장애를 바탕으로 한, 금지된 차별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공공장소 등 시각장애인 안내견 출입 허용

정부 우리나라는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같은 법 제90조제3항에 따라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차별행위)에도 보조견에 대한 정당한 사용 또는 금지된 행위는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2020년, 21대 총선에서 시각장애인 김예지 후보인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됨에 따라, 그 동안 국회법 제148조에 근거하여 본회의장 및 상임위 회의장에 안내견 출입을 통제해 왔던 관행을 초당적 협치를 통해 바꾸면서 안내견에 대한 인식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가 있음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main.html>

이보배(2020. 4. 20.). 국회, 안내견 '조이' 출입 허용 결론...공표는 차기 의장 몫으로 연합뉴스.

허현덕(2020. 6. 22.). 시각장애인 안내견 출입 거부 막는 '조이법' 발의돼. 비마이뉴스.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을 위하여 공공 또는 민간 기업에서 제공하는 여러 서비스에 대하여 접근성의 최소 표준의 수립이 필요하다. 표준화 활동을 위한 ITU-T 권고 **‘통신 접근성 체크리스트’**(Telecommunications Accessibility Checklist)(2006), **노인·장애인을 위한 ‘통신 접근성 지침’**(Telecommunications accessibility guidelines)(ITU-T 권고안 F. 790)과 같은 참조 도구는 새로운 정보통신기술 관련 표준이 개발될 때마다 주류화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표준 개발에 있어 유니버설 디자인이 일반화될 수 있다. 당사국은 민간 주체가 기존의 접근 불가했던 서비스를 접근 가능한 서비스로 점진적 수정·조정하는 과정을 모니터링·평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집행 가능하며 일정이 포함된 입법 틀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당사국은 새로이 조달된 상품과 서비스에 장애인이 완전히 접근 가능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최소 표준은 본 협약

4조 3항에 따라 장애인 및 장애인 대표 단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개발되어야 한다. 최소 표준은 또한 협약 32조에 따라 다른 당사국, 국제 기구·단체와의 국제협력을 통하여 개발될 수 있다. 국제 전기 통신과 정보통신기술 표준의 개발에 있어 접근성을 주류화하기 위하여, 또한 장애인의 정보통신기술 접근 향상의 필요성에 대하여 업계와 정부의 인식 제고를 위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국제전기통신연합의 ‘무선통신, 표준화 및 개발 부문의 연구 그룹’에 당사국이 참여하는 것도 권장된다. 이와 같은 협업은 상품과 서비스의 상호운용성에 도움이 되는 국제 표준의 개발과 촉진에 유용할 수 있다. 의사소통 관련 서비스 분야에서 당사국은 특히 활동보조, 수화 통역, 촉각 언어와 같은 비교적 새로운 종류의 서비스에 있어 그 표준화를 목표로 반드시 적어도 최소 서비스 품질을 보장해야 한다.

관련 협약 등

통신 접근성 체크리스트(Telecommunications Accessibility Checklist)

장애인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특정 서비스와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로, 정보통신기술 영역의 접근성을 위한 8가지 표준화 작업 항목 및 예시를 제공함

출처: ITU(<https://www.itu.int/>)

노인·장애인을 위한 통신 접근성 지침(Telecommunications accessibility guidelines)(ITU-T 권고안 F. 790)

가능한 많은 사람들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관련 통신서비스, 통신장비 및 소프트웨어 등의 표준화, 설계, 개발, 디자인 등에 대한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지침

출처: ITU(<https://www.itu.int/>)

접근성 관련 법률을 검토할 때, 당사국은 장애를 바탕으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자국의 법을 검토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된 법을 개정해야 한다. 최소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접근성의 부족으로 장애인이 대중에게 개방된 서비스 또는 시설에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 이는 장애를 바탕으로 한, **금지된 차별 행위로** 간주되어야 한다.

- (a) 서비스 또는 시설이 관련 접근성 표준 도입 이후에 수립된 경우
- (b) 적절한 편의를 통하여 시설 또는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부여될 수 있었던 경우



접근성 기준 미준수를 차별로 보는 실익

학계 행정조치 등 독자의 집행수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접근성 기준 미준수를 차별로 보는 실익은 이를 통해 접근성 기준이 준수되지 않았을 때 차별금지법상의 권리구제 수단의 행사가 가능해진다는 점임. 그러므로 당사국은 '최소 기준'에 해당하는 접근권에 대한 조치는 우선적으로 행해야 하고, 이것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차별금지법상 개인에게 보장된 구제절차를 적용할 수 있게 됨. 다시 말해 최소기준에 해당하는 접근권을 차별로 규정함으로써 구제수단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접근권을 보다 효율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것임. 최소기준으로서의 접근권과 반차별권(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을 모두 차별로 규정함으로써 이 두 권리가 침해되었을 경우 장애인 개인이 반차별권에 근거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여지를 보다 명확히 하고 있음

* 출처: 심재진, 서정희, 오욱찬 (2018).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접근권 개념과 개별 국가의 사례: 반차별권(합리적 편의제공 의무)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장애인복지학, 40(0): 91-122

접근성 부족을 금지된 차별 행위로 간주하는 것의 실익

학계 접근성 부족을 금지된 차별 행위로 간주하는 것의 실익은 이를 통해 접근성 기준이 준수되지 않았을 때 차별금지법상의 권리구제 수단의 행사가 가능해진다는 점임. 그러므로 당사국은 '최소한'의 기준에 해당하는 접근성 부족에 대한 조치는 우선적으로 행해야 하고, 이것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차별금지법상 개인에게 보장된 구제절차를 적용할 수 있게 됨. 다시 말해 최소 기준에 해당하는 접근성 부족을 차별로 규정함으로써 구제수단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접근성을 보다 효율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것임

* 출처: 심재진, 서정희, 오욱찬 (2018).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접근권 개념과 개별 국가의 사례. 한국장애인복지학, 40(0): 91-122

접근성 법률 검토의 일부로서 당사국은 반드시 공공 조달에 관한 자국 법률을 검토하여 공공 조달 절차가 접근성 요건을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 접근 불가능한 서비스와 시설에 의해 반드시 발생하게 되는 불평등을 조장하거나 영속화하는데 공공 자금을 사용하는 일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 공공 조달은 협약 5조 4항과 동일한 선상에서 장애인의 접근성과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 조치를 이행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33. 당사국은 접근성을 막는 기존의 장벽을 밝히기 위한 행동 계획과 전략을 채택하고, 구체적 시한을 가진 행동 일정을 마련하며, 장벽을 없애기 위해 필요한 인적·물질적 자원 모두를 제공해야 한다. 채택된 행동 계획과 전략은 엄격히 이행되어야 한다. 당사국은 또한 접근성 보장을 위하여 모니터링 메커니즘을 강화하고, 접근성에의 장벽 제거와 모니터링 인원의 교육을 위해 충분한 재원을 계속하여 공

급해야 한다. 접근성 표준은 지역적으로 이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표준 이행의 모니터링을 책임지는 지역 당국의 지속적 역량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당사국은 계획·전략·표준화의 이행과 집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모니터링 틀을 개발하고, 적합한 능력과 적절한 권한을 가진 효율적인 모니터링 기구를 수립해야 한다.

관련 법 제·개정 및 모니터링에 장애당사자의 참여

민간 캐나다 시민사회단체는 ‘보고 전 쟁점목록(LolPR)’과 관련하여, 캐나다의 시각, 청각, 언어장애인이 정보 접근에 매우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2018년 관련법의 모니터링 패널로 장애인 당사자가 포함되지 않았음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보고함

- 방송 및 통신에 대한 법률이 업데이트 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청각, 시-청각 장애인이나 난청 장애인 등이 포함되지 않음
- 현재 방송법을 모니터링 중인 패널은 청각장애인, 농아인, 난청장애인 등 실제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인구를 포함하지 않음. 이들은 캐나다 모국어를 통해 정보를 수신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방송 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수신하는데 밀려나 있음. 통신법도 모니터링 중에 있지만 농아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난청장애인, 이들에 장애를 겪는 사람을 포함하지 않아 대표성이 부족함

한편, 에스토니아 장애인단체 네트워크인 ‘에스토니아 장애인 챔버(Estonian Chamber of Disabled People)’는 EU에서 채택한 가이드라인을 국내법으로 제정하기 위해 장애인단체가 함께 참여하고 있음을 보고함

- ‘에스토니아 장애인 챔버(Estonian Chamber of Disabled People)’와 ‘에스토니아 시각장애인 연합회(Estonian Blind Union)’는 ‘공공부문 기관의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에 관한 2016년 10월 26일 EU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16/2102’를 국내 입법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접근성에 대한 인식도 함께 증진되고 있음. 공공부문 기관인 시정부의 웹사이트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출처: Canadian Civil Society Organization(2019). Submission on the LolPR(Canada) to be adopted during the 22nd session. UN 조약기구 DB (<https://www.ohchr.org/EN/HRBodies/CRPD/Pages/CRPDIndex.aspx>).
Estonian Chamber of Disabled People(2020). Civil society comments to the state response to the List of issues in relation to the initial report of Estonia. UN 조약기구 DB (<https://www.ohchr.org/EN/HRBodies/CRPD/Pages/CRPDIndex.aspx>).



4. 협약 내 여타 조항과의 관계

장애인의 물리적 환경, 교통, 정보와 통신, 대중에게 개방된 서비스에의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는 당사국의 의무는 평등과 반차별의 관점에서 간주되어야 한다. 물리적 환경, 교통, 정보와 통신, 대중에게 개방된 서비스에의 접근을 거부하는 일은 협약 5조에서 금지하는, 장애에 따른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 장애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일은 보편적으로 설계된 상품·서비스·장치·시설을 개발해야 한다는 일반 의무의 이행의 맥락에서 생각되어야 한다(4조 1(f)항).

인식 제고는 장애인권리협약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전제조건 중 하나이다. 가령 건축 환경에 대한 접근성(중요한 요소이나 장애인의 접근에 있어서는 한 가지 측면에 불과하다)처럼 접근성이 좁은 관점에서 생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사국은 모든 관계 이해당사자 사이의 접근성 인식 제고를 위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물리적 환경, 교통, 정보와 통신, 서비스에의 접근 제공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범위를 포괄하는 접근성의 특성이 소개되어야 한다. 또한 인식 제고 과정에서 접근성 표준을 준수하는 의무가 공공 및 민간 부문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지도 강조되어야 한다. 인식 제고는 유니버설 디자인의 적용을 촉진시켜야 하며, 또 최대한 이른 단계에서 접근 가능한 설계와 건축을 도입하는 것이 비용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라는 생각도 촉진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인식 제고는 장애인, 장애인 대표 단체, 기술 전문가와 협력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접근성 표준의 적용 및 이행 모니터링을 위한 역량 구축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언론은 자사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접근성을 고려할 뿐 아니라, 접근성을 촉진하고 인식 제고에 기여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물리적 환경, 교통, 정보와 통신, 대중에게 개방된 서비스에 대한 완전한 접근을 보장하는 것은 본 협약이 다루는 여러 권리를 효과적으로 누리는 데 반드시 필요한 전제조건이다. **위험, 자연재해, 무력 분쟁의 상황에서는 장애인이 비상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장애인의 생명을 구하거나 복리를 보호할 수 없다(11조). 접근성은 반드시 재난 후 재건 과정에서 우선순위로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재난 위험 축소는 접근 가능하며 장애인을 통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스, 오스트리아 긴급 상황 시 장애인 피난 시스템에 대한 접근성 부족

민간 2019년 '그리스 국가 장애인 연합(National Confederation of Disabled People in Greece)'가 보고한 1차 심의 대비 민간보고서에 의하면 그리스는 건물과 교통 접근성에 대한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난 시설 접근성에 대한 내용이 부재한 상황임

- 그리스에는 건물과 교통 접근성에 대한 법적 체계가 이미 갖춰져 있지만, 이를 수행하기 위한 개입이나 업데이트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음. 예를 들면 1) 긴급 상황에서 접근 가능한 피난 서비스/정책과 지침 디자인과 국가 접근성 지침 "모두를 위한 디자인"의 업데이트는 여전히 진행되지 않고 있음

또한 '오스트리아 장애인 위원회(Austria Disability Council)'도 2018년 2-3차 병합 심의 대비 민간보고서에서 장애인의 피난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다고 보고하였음

- 게다가 공공건물에서 접근 가능한 탈출과 피난 조치나, 개인의 안전과 관련한 법적 조항, 탈출 경로를 계획하고 개인의 안전을 보장하는 규범적 원칙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출처: National Confederation of Disabled People of Greece (2019). Human Rights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Alternative report Greece 2019. UN 조약기구 DB (<https://www.ohchr.org/EN/HRBodies/CRPD/Pages/CRPDIndex.aspx>). Austrian Disability Council (2018). Second Alternative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UN CRPD in Austria. UN 조약기구 DB (<https://www.ohchr.org/EN/HRBodies/CRPD/Pages/CRPDIndex.aspx>).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접근성 관련 이슈

학계 코로나19는 기존의 면대면 방식의 장애인복지 서비스에 대한 도전과 위기를 짊어지게 하였으며, ICT 기술 활용 등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제공방식의 고민을 떠안게 하였음. 특히,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뿐만 아니라 기존에도 산사태, 홍수 등 재난상황에서 사·청각 장애인에 대한 정보접근성 취약 문제는 계속해서 제기되었음. 더욱이 코로나19 발생 초기 수어통역사가 없는 상황에서 진행된 지역사회 감염 관련 정보 제공은 청각장애인들에게 더욱 큰 어려움을 겪게 하였음. 다만 꾸준한 문제 제기 후 지금은 코로나19 관련 정부 브리핑에서 정부 관계자와 수어통역사가 나란히 화면에 비추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이 밖에도 초·중·고·대학교의 경우 수업을 비대면 온라인 강의방식으로 전환에 따라 웹접근성이 취약한 시각장애인 학생들의 경우 부득이하게 휴학 등을 선택하기도 함. 청각장애인 학생들의 경우에도 일부 EBS 등에서 수어통역과 자막을 제공하고 있으나 온라인 강좌에 대한 지원체계 부족 문제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음. 이는 비단 비대면 복지서비스와 수업의 문제뿐만 아니라 마스크 구입 및 지역사회 확진자 정보, 선별진료소 이용 등 코로나19와 관련된 신속한 정보 습득 과정에서 사·청각장애인 그리고 발달장애인 등의 소외 문제로 제기되기도 함

* 출처: 이송희, 이병화 (2020).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장애인 지원 현황과 정책 과제. 보건과 복지22.3 (2020): 7-34.



장애인 대상 코로나19 대응 지침 개발 및 배포

정부 보건복지부는 2020년 6월 장애인 및 관련 전문가등과 함께 마련하여 안내한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안내서(매뉴얼)」에 그간의 변경된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 사항 반영과 장애계, 관련기관,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판을 마련함. 특히, 일선 현장에서 감염병 예방 및 돌봄 공백 방지 방안에 더하여 장애인 자가격리 또는 확진 시 대응 방안에 대한 안내 사항을 반영하였음. 주요 세부내용으로는 지자체 등 최일선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지침'과 연계하여 예방-진단-치료 등 대응 단계별 장애인 고려사항 및 지원 내용을 반영함. 또한, 지난해 6월 매뉴얼 시행 이후 장애인 복지시설 감염예방 방안, 사회서비스원 중심 긴급돌봄, 혈액투석 지원 안내 등 주요 장애인 서비스별 변경 내용을 반영함. 아울러, 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코로나19 안내서'와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장애인과 관계자와의 소통을 위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의사소통 도움 그림·글자판/시각 지원판'을 개정함. 끝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작됨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의사소통 도움 그림·글자판/시각지원판'을 새롭게 마련하여 배포함

* 출처: 보건복지부(2021. 4. 20). [보도자료]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안내서 개정판 마련.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나 사법부가 위치한 건물이 물리적으로 접근 불가하거나 그러한 건물에서 제공하는 정보·통신에 장애인이 접근할 수 없다면 효과적인 사법에 대한 접근은 있을 수 없다(13조). 장애인, 특히 장애 여성·아동에게 폭력·학대·착취로부터의 효과적이고 유의미한 보호를 제공하기 위하여 쉼터, 지원 서비스·절차는 반드시 모두 접근 가능해야 한다(16조). 접근 가능한 환경, 교통, 정보와 통신, 서비스는 장애인의 지역 공동체 내 통합과 자립적 생활을 위한 전제조건이다(19조).

장애여성 성폭력 피해자 쉼터 접근성

민간 국내 장애인단체는 2019년 발표한 제2-3차 병합 국가심의 대비 민간보고서에서 장애여성에 대한 폭력이 만연하고 있으나 장애여성의 접근을 보장하는 성폭력 피해자 쉼터가 매우 적은 상황을 보고하였음

- 2018년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2017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 운영실적보고' 따르면 남 성 배우자에 의한 여성장애인 가구 내 폭력은 2013년 기준 약 30%로 10가구 중 세 가구가 가정폭력을 경험하고 있으며, 장애인 가족 내에서의 폭력도 전체 가구 중 6.1%로 이중 남성장애인(5.5%)보다 여성장애인(7.0%)은 1.5% 더 높음. 또한 2017년 기준 전체 성폭력상담건수 111,123건 중 장애인 상담은 24,606건으로 전체의 22.1% 수준이고, 2017년 기준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는 총 3,270명에 달함. 그럼에도 2017년 기준 현재 장애인성폭력상담소는 전국성폭력상담소 167개소의 14.4%인 24개소, 장애인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전국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30개소 중 단 10개소인 33.3%에 불과함

또한 장애여성 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 전담 보호시설을 운영하며 자립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음

* 출처: National Confederation of Disabled People of Greece (2019). Human Rights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Alternative report Greece 2019. UN 조약기구 DB
(<https://www.ohchr.org/EN/HRBodies/CRPD/Pages/CRPDIndex.aspx>).
Austrian Disability Council (2018). Second Alternative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UN CRPD in Austria. UN 조약기구 DB
(<https://www.ohchr.org/EN/HRBodies/CRPD/Pages/CRPDIndex.aspx>).

9조와 21조는 모두 정보와 의사소통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21조는 당사국이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스스로 선택한 모든 형태의 의사소통 수단을 이용하여 정보와 사상을 찾고, 얻고, 전파할 자유를 포함한, 표현·의견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나아가 21조는 정보와 의사소통에의 접근성을 현실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한다. 21조에 따르면 당사국은 “일반 대중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를 장애인에게 접근 가능한 형식 및 다양한 장애에 맞는 기술을 통해 제공”할 의무를 가진다(21(a)조). 더불어 21조는 “수화, 점자, 보완대체의사소통, 기타 접근 가능한 소통의 수단·방식·형식을 장애인이 공식적 상호작용에서 자신의 선택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촉진”할 것을 규정한다(21(b)조). 인터넷 등을 수단으로 일반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주체는 장애인에게 접근 가능하고 이용 가능한 형식으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 권고되며(21(c)조),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자를 포함한 대중 매체는 그 서비스를 장애인이 접근 가능하도록 만들 것이 권장된다(21(d)조). 21조는 또한 협약 24조, 27조, 29조, 30조에 따라 수화의 사용을 인정하고 촉진할 것을 당사국에 요구한다.

학교에의 접근 가능한 교통, 접근 가능한 학교 건물, 접근 가능한 정보·통신이 없다면 장애인은 교육의 권리를 행사할 기회를 가질 수 없다(협약 24조). 따라서 협약 9조 1(a)항에 명시적으로 제시된 바와 같이, 학교는 접근 가능해야 한다. 그러나 접근 가능해야 하는 것은 학교 건물뿐만이 아니라 통합적 교육의 전체 과정이며, 학교 내 환경보조시스템이나 FM 보조시스템, 적절한 편의를 포함한 모든 정보·통신 등이 포함된다. 접근성의 향상을 위하여 교육뿐만 아니라 교과과정의 내용은 수화, 점자, 대체 문자, 보완대체의사소통 수단·형식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이 형태로 실행되어야 하며(24조 3(a)항),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시청각 장애를 가진 학생이 사용하는 적절한 언어와 의사소통 방식·수단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가르칠 때 사용되는 방식과 수단은 접근 가능해야 하며, 접근 가능한 환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장애 학생 주변의 모든 환경은 통합을 촉진하고 교육 전체 과정에 있어 평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협약 24조의 완전한 이행은 여러 핵심 인권조약과 더불어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의 ‘**교육상의 차별금지 협약**’(Convention against Discrimination in Education)의 조항과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관련 협약 등 **교육상의 차별금지 협약(Convention against Discrimination in Education)**

모든 인간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에 따라 교육상 어떠한 형태로든 차별을 배척하며, 교육을 위한 평등한 기회와 대우가 제공되어야 함을 명시

* 출처: University of Minnesota. Human Rights Library.
(<http://hrlibrary.umn.edu/instrree/K-z1afchar.html>)

룩셈부르크, 학교, 의료시설, 고용현장에서의 접근성 부족

민간 룩셈부르크의 장애인단체는 민간보고서에서 학교, 의료, 근로현장 등에서의 접근성 부족을 총체적으로 보고하였음. 다음은 학교 접근성에 대한 보고내용임

- 학교: 공립학교의 경우, 주정부에서 접근성 구축에 소요되는 예산을 집행할 수 있음. 사립 학교에서는 접근성 구축에 소요되는 예산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보고되고 있음

* 출처: Nèmmë Mat Eis and other Luxembourg DPOs(2016). Alternative Report on Implementa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UN 조약기구 DB
(<https://www.ohchr.org/EN/HRBodies/CRPD/Pages/CRPDIndex.aspx>).

장애인을 위한 의료 서비스와 사회적 보호는 그러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건물에 의 접근 없이는 달성 불가능하다. 의료 서비스와 사회적 보호가 제공되는 건물 자체가 접근 가능하다 해도, 접근 가능한 교통이 없으면 장애인은 서비스가 제공되는 장소까지 이동할 수 없다. 의료 서비스의 제공에 따르는 모든 정보와 의사소통은 수화, 점자, 접근 가능한 전자적 형식, 대체 문자, 보완대체적인 의사소통 방식·수단·형식을 통하여 접근 가능해야 한다. 의료 서비스, 특히 산부인과를 포함한 장애 여성·여아의 생식 건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접근성에 있어 젠더의 차원을 고려하는 것이 각별히 중요하다.

룩셈부르크, 학교, 의료시설, 고용현장에서의 접근성 부족

민간 룩셈부르크의 장애인단체는 민간보고서에서 학교, 의료, 근로현장 등에서의 접근성 부족을 총체적으로 보고하였음. 다음은 의료시설 접근성에 대한 보고내용임

- 의료 시설: 개인 병원의 물리적 접근이 개선되어야 함. 공공병원에서는 직원을 대할 때 장벽을 많이 경험하는 경향이 있음

* 출처: Nëmme Mat Eis and other Luxembourg DPOs(2016). Alternative Report on Implementa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UN 조약기구 DB
(<https://www.ohchr.org/EN/HRBodies/CRPD/Pages/CRPDIndex.aspx>).

근로 장소 자체가 접근 불가하다면 장애인은 협약 27조에서 제시하는 근로·고용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누릴 수 없다. 따라서 9조 1(a)항에서 명시적으로 가리키듯, 직장은 접근 가능해야 한다. 직장의 접근 가능성의 확보를 거부하는 것은 장애를 바탕으로 한 금지된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 직장에 대한 물리적 접근성 외에도 장애인은 직장까지 이동하기 위한 교통 및 지원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근로, 일자리 제의 광고, 선발 과정, 직장 내 소통에 수반되는 모든 정보는 수화, 점자, 접근 가능한 전자적 형식, 대체 문자, 보완대체적 의사소통 방식·수단·형식을 통해 접근 가능해야 한다. 모든 노동조합과 노동권은 물론 직업 교육의 기회와 근로 자격 또한 반드시 접근 가능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직원과 연수생을 위한 외국어 또는 컴퓨터의 교육과정은 반드시 접근 가능한 환경에서 접근 가능한 형태·방식·수단·형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룩셈부르크, 학교, 의료시설, 고용현장에서의 접근성 부족

민간 룩셈부르크의 장애인단체는 민간보고서에서 학교, 의료, 근로현장 등에서의 접근성 부족을 총체적으로 보고하였음. 다음은 의료시설 접근성에 대한 보고 내용임

- 근로 현장: 근로현장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기준이 없어 문제가 발생함. 법적으로 “샬러리 핸디캡”으로 등록되면 근로현장에서 편의 조정에 들어가는 비용을 국가에서 보상하여 줌. 그러나 현금 절차가 너무 길어 고용주가 장애인을 고용하는데 방해가 되기도 함

* 출처: Nëmme Mat Eis and other Luxembourg DPOs(2016). Alternative Report on Implementa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UN 조약기구 DB
(<https://www.ohchr.org/EN/HRBodies/CRPD/Pages/CRPDIndex.aspx>).



협약 28조는 장애인의 적절한 삶의 질과 사회적 보호를 다룬다. 당사국은 주류 및 장애 특정적인 사회적 보호 조치와 서비스 모두가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접근 가능한 건물에서 제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에 수반되는 모든 정보와 의사소통이 수화, 점자, 접근 가능한 전자적 형식, 대체 문자, 보완대체적 의사소통 방식·수단·형식을 통하여 접근 가능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공 주택 프로그램은 특히 장애인과 노인에게 접근 가능한 주택을 제공하여야 한다.

뉴질랜드 장애인의 주택 접근성

민간 뉴질랜드의 '뉴질랜드 장애인 단체(New zealand Disabled Persons' Organizations)'는 장애인 주택의 물리적 접근성과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보고한 바 있음

- 연구에 따르면 뉴질랜드의 현재 주택 재고로는 장애인의 주택 수요가 충족되지 않고 있음. 주택 개조를 위한 정부 자금은 주로 기본적인 필요만을 위한 것이며 장애인의 독립성과 자율성 또는 가족의 전반적인 복지를 고려하지는 않음. 예를 들면 가정에 다른 성인이 있으면 그 구성원이 장애인을 위한 모든 요리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보고 접근 가능한 주방으로의 개조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여김. 또한 화재 시 안전에 대한 두려움도 보고되었는데, 접근 가능한 출구가 하나만 있으면 안전이 보장된 것으로 여기고 있음
- 일부 장애인 인구, 특히 성인 전환기에 있는 장애인, 정신 질환이 있는 장애인, 임대로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부양가족이 없는 장애인, 가족의 소득이 낮은 사람들 등은 열악한 주거 환경에 훨씬 취약한 상황임

출처: New zealand Disabled Persons' Organisations(2014). Newzealand Disabled Persons' Organizations Report. UN 조약기구 DB (<https://www.ohchr.org/EN/HRBodies/CRPD/Pages/CRPDIndex.aspx>).

협약 29조는 장애인에게 정치·공적 생활에 참여하고 공무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한다. 당사국이 투표 절차, 투표 시설, 투표 용구가 적절하고 접근 가능하며 이해와 사용이 용이하도록 보장하지 못한다면, 장애인은 그러한 권리를 평등하고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공적 선거에 출마하는 정당 또는 개인 후보자가 사용하고 만들어내는 자료들과 정치적 회의도 접근 가능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장애인은 정치적 과정에 동등하게 참여할 권리를 박탈당한다. 공직에 당선된 장애인 은 완전히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자신의 의무를 수행할 평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

스웨덴의 투표소와 선거정보에 대한 접근성

민간 스웨덴 장애인단체는 투표소의 물리적 접근성과 선거정보에 대한 청각 및 난청장애인의 접근성 부족을 보고하였음

미흡한 투표소 접근성

- 선거법(Election Act)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접근 가능한 투표소를 제공해야 함. 특정 예외가 허용되기도 하지만, 지역 행정 위원회와의 협력 상황에만 가능함
- 2010년 대선에 대비하여 '접근성 구축을 위한 청년 네트워크' (Young people for accessibility)에서 투표소 접근성을 조사하였음. 결과는 절망적이었는데, 4개 중 1개의 투표소마다 휠체어 사용자가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
- 접근성과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것은 분명하게 차별로 판단해야 함
- 사람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대부분은 구두로 전달되는 정보임. 후보자 토론회가 그 예인데,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위한 수어통역, 문자통역 등의 제공 부족으로 청각장애인과 난청 장애인은 필요한 정보를 놓치는 경우가 많음
- 공공 회의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및 통신기술의 사용이 촉진되어야 하며, 문자 및 수어통역에 접근이 용이해야 함. 후보 토론회에 참여하고 정보를 수신할 수 있도록 대안이 마련되어야 함

* 출처: Swedish Disability Federation(2011), Swedish disability movement's alternative report to the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UN 조약기구 DB
(<https://www.ohchr.org/EN/HRBodies/CRPD/Pages/CRPDIndex.aspx>).

모든 사람은 예술을 향유하고 스포츠에 참여하며 숙박 시설, 식당, 주점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콘서트장에 계단만 있다면 휠체어를 탄 사람은 콘서트에 갈 수 없다. 미술관에서 음성 설명을 제공하지 않으면 시각장애인은 미술품을 감상할 수 없다. 자막이 없으면 난청인은 영화를 즐길 수 없다. 수화 통역이 없다면 청각장애인은 연극을 관람할 수 없다. 읽기 쉬운 버전이나 보완대체적 방식이 없다면 지적장애인은 책을 읽을 수 없다. 협약 30조는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문화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할 것을 당사국에 요구한다. 당사국은 장애인에게 다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 요구된다.

(a)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문화적 자료에 접근할 수 있다.

(b)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텔레비전 프로그램, 영화, 연극, 기타 문화 활동에 접근할 수 있다.

(c) 극장, 박물관, 영화관, 관광 서비스와 같은, 문화적 공연 또는 서비스를 위한 장소에 접근할 수 있으며, 국가적으로 문화적 중요성을 가지는 기념물과 장소에 가능한 한 접근할 수 있다.



국가 유산의 일부인 역사적·문화적 기념물에의 접근 제공은 실제로 상황에 따라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당사국은 그러한 장소에의 접근 제공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가진다. 국가적으로 문화적 중요성을 가지는 기념물과 장소가 그 역사적·문화적 정체성과 고유함을 보존하면서도 접근 가능하게 변경된 사례는 이미 많이 존재한다.

스웨덴 장애인의 TV, 영화, 극장 및 문화 활동에 접근성

민간 뉴질랜드의 '뉴질랜드 장애인 단체(New Zealand Disabled Persons' Organizations)는 장애인 주택의 물리적 접근성과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보고한 바 있음

접근 가능한 형식의 텔레비전 프로그램

- 한 프로그램 편집사의 보고서는 현재 텔레비전 채널들에 고품질 동시자막, 지역 뉴스 자막, 인터넷 tv자막 등이 부족함을 보고함. 자막 프로그램의 품질이 향상되긴 하였지만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임

극장에서의 영화

- 2009년 기준 30편의 새로운 스웨덴 영화 중 10편이 자막 해설을 함께 제공하였음. 그래서 소비자들은 제한된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음. 또한 그러한 영화들은 주로 낮에만 상영되어, 학업, 근로 등을 하는 사람들은 영화를 보기가 더욱 어려움. 디지털 영화관의 발전이 많이 개선되었지만, 이를 해결 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임

* 출처: Swedish Disability Federation(2011), Swedish disability movement's alternative report to the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UN 조약기구 DB (<https://www.ohchr.org/EN/HRBodies/CRPD/Pages/CRPDIndex.aspx>).

“당사국은 장애인이 각자의 창조적·예술적·지적 잠재력을 개발하고 활용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30조 2항). “당사국은 국제법에 따라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장애인의 문화적 자료에의 접근을 막는 비합리적이고 차별적인 장벽이 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30조 3항). 2013년 6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가 채택한 ‘시각장애인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Marrakesh Treaty to Facilitate Access to Published Works for Persons Who Are Blind, Visually Impaired, or Otherwise Print Disabled)은 해외에 거주하는 장애인 또는 다른 국가에서 소수자에 속하며 의사소통 수단으로 같은 언어를 발화 또는 사용하는 장애인, 특히 기존의 인쇄 매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포함하여 모든 장애인에게 비합리적이거나 차별적인 장벽 없이 문화적 자료에의 접근을 보

장한다.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특정 문화적·언어적 정체성의 인정과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한다. 30조 4항은 수화 및 청각장애인 문화의 인정과 지원을 강조한다.

관련 협약 등 시각장애인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Marrakesh Treaty to Facilitate Access to Published Works for Persons Who Are Blind, Visually Impaired, or Otherwise Print Disabled)
승인받은 기관에 한해 저작권자의 승인 없이 시각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형태의 복제물을 제작·공급·배포 할 수 있도록 저작권에 대한 제한 또는 예외를 적용하도록 함
* 출처: 외교부(<https://www.mofa.go.kr/>)

협약 30조 5항은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여가, 오락,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당사국이 취해야 할 조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a) 장애인이 모든 수준의 주류 스포츠 활동에 가능한 한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촉진한다.
- (b) 장애인이 장애 특정적 스포츠와 오락 활동을 조직·개발하고 그에 참여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며, 이를 위하여 다른 사람과 평등한 적절한 지침·교육·재원의 제공을 권장한다.
- (c) 장애인이 스포츠, 오락, 관광 장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d) 장애 아동이 다른 아동과 동등하게 학교 체계 내에서의 활동을 포함하여 놀이, 오락, 여가, 스포츠 활동의 참여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e) 장애인이 오락, 관광, 여가, 스포츠 활동 기관 관계자의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협약 32조에 제시된 국제협력은 접근성과 유니버설 디자인의 촉진에 중요한 도구로서 사용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정보통신기술 및 기타 접근 인프라의 개선을 목표로 한 지원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인정할 것을 국제 개발 기관에 권고한다. 국제협력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투자는 모두 기존 장벽의 철폐와 새로운 장벽의 등장 방지에 사용되어야 한다. 모든 새로운 물건·인프라·시설·상품·제품·



서비스는 모든 장애인에게 완전히 접근 가능해야 한다. 단순히 접근 가능한 상품·제품·서비스에의 투자뿐 아니라 전 세계 수백만 장애인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이루어낼 접근성 달성의 모범 사례에 관한 노하우와 정보의 공유에도 **국제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표준화에 관한 국제협력은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한 국가 또는 국가 간 접근성 표준의 개발·이행·모니터링 절차에 장애인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단체에 대한 지원이 반드시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 또한 중요하다. 접근성은 특히 2015년 이후 개발 의제의 맥락에서 모든 지속 가능한 개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장애분야 국제협력 추진 사항

정부 우리나라는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 주도국으로서 모범적이며 선도적으로 실현가능한 하반기(2019~2022) 행동계획을 수립하였음. 또한, 인천전략의 10개 목표인 접근성, 국제협력 등 분야에서 2022년까지의 목표치를 제시하고 인천전략 종료 이후에도 지속가능한 개발 분야 발굴 및 구체적 이행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인천전략기금 운영사무국(이하, 사무국)은 태국 방콕에 위치한 유엔에스캡(UN ESCAP) 본부 접근성 센터를 지원하여, 해외 장애인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였음. 2013년 사무국이 유엔에스캡 본부에 지원한 전동휠체어, 점자프린터 등의 보조기기 13종 31대가 현재 접근성 센터에 비치되어 장애인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 사용되고 있음. 2015년 5월 28일 유엔에스캡 본부 접근성센터가 개소된 후, 접근성센터의 보다 체계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2015년 11월에는 국내 보조기기 전문가를 파견, 유엔에스캡 직원 등 관계자 12명을 대상으로 접근성센터 내 보조기기 사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음. 또한 2016년 10월에 사무국은 유엔컨퍼런스센터(UNCC) 회의장의 장애인 접근성 향상을 위한 이동식 경사로 등을 추가 지원하고, 유엔에스캡 회의 운영팀과 접근성센터 관리 체계 및 보조기기별 이용현황 등을 점검하였음

* 출처: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2018).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제2,3차 병합) 심사대비 연구. 인천전략기금 운영사무국. http://mrr.koddi.or.kr/page/index_kor.jsp

접근성의 **모니터링**은 협약 이행에 대한 국가적·세계적 모니터링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다. 협약 33조는 협약 이행과 관련한 문제를 위하여 정부 내에 전담 부서를 지정하고, 하나 이상의 독립적 메커니즘을 포함하는, 이행 모니터링의 국가 틀을 수립할 것을 당사국에 요구한다. 시민 사회 또한 모니터링 절차에 완전히 참여해야 한다. 9조의 적절한 이행을 위한 조치를 고려할 때에는 33조에 관련하여 수립된 기관과 마땅히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들 기관은 특히 국가적인 접근성 표준의 초안

작성에 참여하고, 기존 및 초안 법률을 평가하며, 법률 초안 및 정책 규정을 위한 제안을 제출하고, 인식 제고 및 교육 캠페인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받아야 한다. 국가적·세계적 협약 이행 모니터링의 절차는 장애인과 장애인 대표 단체의 효과적인 참여를 촉진하고 보장할 수 있도록 접근 가능하게 수행되어야 한다. 협약 49조에 따르면 협약의 조문은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이용 가능해야 한다. 이는 국제 인권조약에서의 혁신이며, 그러한 관점에서 장애인권리협약은 모든 미래의 조약에 있어 선례로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정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33조 국내적 이행 및 감독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충분한 인력과 재정을 제공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협약의 이행상황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함. 위원회는 또한 대한민국이 협약의 이행을 모니터링 하는 데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가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조항을 채택할 것을 권고함

* 출처: 김형식 외(2019). 국제장애인 권리 및 입법의 발달-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심층적 논의와 분석-.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정책 이행 관련 모니터링 기구 운영

정부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단체와의 국내외 협력이 기본적 업무로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토론회 및 간담회에서 장애인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장애인권리협약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서 작성 시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해 왔음. 그러나 현행 법령에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상황을 모니터링 할 때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기에 이러한 규정이 법령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 출처: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2018).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제2,3차 병합) 심사대비 연구.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일반논평(1, 2호) 안내서

발 행 일 : 2021년 11월

발 행 인 : 최경숙

발 행 처 : (재)한국장애인개발원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5층

Tel. 02-3433-0600

Fax. 02-3433-9567

<http://www.koddi.or.kr>

편집·인쇄 : 누보

ISBN 978-89-6921-422-5 (93330)

※ 본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무단 복사하는 것을 금합니다.

